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북핵 용인 연구

- 동맹의 핵무장 가능성과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Study on North Korea nuclear-weapon recognition

-Focusing on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possibility of the alliance's nuclear armament-

이 중 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24년 6월 일

석사학위논문

북핵 용인 연구

-동맹의 핵무장 가능성과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Study on North Korea nuclear-weapon recognition

-Focusing on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possibility of the alliance's nuclear armament-

지도교수 유 영 수

이 논문을 북한학 석사학위(정치통일전공)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6월 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정 치 통 일 전 공

이 중 호

이중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정 (인)

심 사 위 원 유 영 수 (인)

심 사 위 원 정 재 욱 (인)

2024년 6월 일

목 차

국문요약 · · ·

제2절 핵보유희망국의 핵 보유 셈법과 이해 · · · · · · · · · · 46
1. 중소국의 전략 · 46
2. 북한의 역할과 핵 보유 후의 역할 변화 · · · · · · · · · · 48
가. 북한의 국가 역할 · 48
나. 핵무장 (특히, 2022년) 이후, 역할 변화 · · · · · · · · 52
3. 북한의 핵 관련, 이해관계 · · · · · · · · · · · · · · · · 53
제3절 동맹의 북핵 대응, 역할, 그리고 이해 · · · · · · · · · 55
1. 북핵 용인과 동맹에 대한 영향 · · · · · · · · · · · · · · 55
2. 동맹의 역할과 역할변화 · · · · · · · · · · · · · · · · · 58
3. 동맹의 핵 관련, 이해관계 · · · · · · · · · · · · · · · · 60
제4절 북핵 용인 관련국들의 전략 · · · · · · · · · · · · · · 65
1. 핵용인 사례와 관련국들의 용인 전략 · · · · · · · · · · · 65
2. 북핵 용인 게임의 전략과 구조 · · · · · · · · · · · · · · 70
제5절 소결 · 72

제3장 북핵 용인 게임 · 74
제1절 게임 모델과 게임 보수 · · · · · · · · · · · · · · · · 74
1. 게임 모델 설계 · 74
2. 게임 보수 · 78
제2절 동맹의 핵개발과 핵보유희망국에 대한 핵용인 · · · · · 84

1. 동맹의 핵개발 조건 · 84
2. 핵보유희망국에 대한 핵용인 조건 · · · · · · · · · · · · 88
제3절 북핵 용인 시, 동맹이 핵개발을 하는 경우 · · · · · · 89
1.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높은 경우 [$\pi > \pi_2$] · · · 89
가. '(a)한계용인' 균형 · · · · · · · · · · · · · · · · · 89
나. '(b)침묵' 균형 · · · · · · · · · · · · · · · · · · · 94
2.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 [$\pi_1 \leq \pi \leq \pi_2$] · 98
가. '(c)침묵' 균형 · · · · · · · · · · · · · · · · · · · 98
나. '(d)핵용인' 균형 · · · · · · · · · · · · · · · · · · 100
제4절 동맹이 '핵포기'를 선택하는 경우 [$\pi < \pi_1$] · · · 103
1. '(e)핵용인' 균형 · · · · · · · · · · · · · · · · · · · 103
2. '(f)한계용인'과 '(g)침묵' 균형 · · · · · · · · · · · · 107
제5절 소결 · 111

제4장 북핵 용인의 양상과 전개 · · · · · · · · · · · · · · · 113
제1절 균형 간 '선차성' 비교 · · · · · · · · · · · · · · · 114
1. 국가의 '역할 충돌'과 균형 간의 '선차성' · · · · 114
가. 국가의 '역할 충돌' · · · · · · · · · · · · · · · · 114
나. '역할 충돌'과 균형들의 '선차성' 비교 · · · · 116
다. 균형 간 전환 · · · · · · · · · · · · · · · · · · · 123

제2절 Breuning 모델에 의한 북핵 용인 유인 · · · · · · · 126
1. ‘역할 구상’과 북핵 용인 단계의 전환 · · · · · · · · 127
2. 북핵 관련국들의 λ와 π에 대한 결정 유인들 · · · · · 129
가. 동맹이 ‘낮은 π’를 선택하는 이유 · · · · · · 130
나. 동맹이 ‘높은 π’를 선택하는 이유 · · · · · · 132
다. 북미가 ‘낮은 λ’를 선택하는 이유 · · · · · · 135
라. 북미가 ‘높은 λ’를 선택하는 이유 · · · · · · 140
제3절 북핵 용인 (양상과 전개) 모델 · · · · · · · · · · · 146
1.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전개 모델 · · 146
2.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의 전개 모델 · · 150
3. 동맹이 핵무장을 포기하는 경우의 전개 모델 · · · · · 153
제4절 북핵 용인의 원인과 가능성 · · · · · · · · · · · · 156
1. ‘침묵’ · 156
2. ‘한계용인’ · 158
가. ‘한계용인’의 구체적 동기와 사례 · · · · · · · 158
나. ‘한계용인’의 실현 가능성 · · · · · · · · · · 161
3. ‘핵용인’ · 167
가. ‘핵용인’의 구체적 동기와 사례 · · · · · · · · 167
나. ‘핵용인’의 실현 가능성 · · · · · · · · · · · 171
4. ‘핵포기’ · 177

가. ‘핵포기’의 구체적 동기와 사례 · · · · · · · · 177
나. ‘핵포기’의 실현 가능성 · · · · · · · · · · · · 178
제5절 소결 · 180

제5장 결 론 · 183

참고문헌 · 194
보론[게임 산식] · 215
ABSTRACT · 222

표 목 차

【표 2-1】 미국의 안보전략 실현을 위한 네가지 역할 · · · · · · · · 35
【표 2-2】 미국의 전략적 가치, 1945-2014 · · · · · · · · · · · · · 36
【표 2-3】 미국의 역할들 · 37
【표 2-4】 국가 역할에 기초한 미국의 북핵관련 이해 관계 · · · · · 43
【표 2-5】 안보위협에 대한 중소국의 선택 · · · · · · · · · · · · 47
【표 2-6】 북한의 역할들 · 49
【표 2-7】 김정은의 현지지도와 대외활동 · · · · · · · · · · · · · 49
【표 2-8】 국가 역할에 기초한 북한의 핵관련 이해 관계 · · · · · · 53
【표 2-9】 필립 블리그의 핵 확산 연표 · · · · · · · · · · · · · · 56
【표 2-10】 동맹의 역할들 · 61
【표 2-11】 국가 역할에 기초한 동맹의 핵관련 이해 관계 · · · · · · 62
【표 3-1】 북미의 양보수준 · 78
【표 3-2】 플레이어 별 보수 · 80
【표 3-3】 ‘(a)한계용인’ 균형의 전략과 관련 식 · · · · · · · · · 91
【표 3-4】 ‘(b)침묵’ 균형의 전략과 관련 식 · · · · · · · · · · · · 96
【표 3-5】 ‘(c)침묵’ 균형의 전략과 관련 식 · · · · · · · · · · · · 100
【표 3-6】 ‘(d)핵용인’ 균형의 전략과 관련 식 · · · · · · · · · · · 101
【표 3-7】 ‘(e)핵용인’ 균형의 전략과 관련 식 · · · · · · · · · · · 106

【표 3-8】 ‘(f)한계용인’ 균형의 전략과 관련 식 · · · · · · · · · 108
【표 3-9】 ‘(g)침묵’ 균형에서의 전략과 관련 식 · · · · · · · · · 108
【표 4-1】 비핵화와 북핵 용인 비교 · · · · · · · · · · · · · · · · 116
【표 4-2】 Breuning 모델을 통해 본 ‘낮은 π’의 원인들 · · · · · 130
【표 4-3】 Breuning 모델을 통해 본 ‘높은 π’의 원인들 · · · · · 132
【표 4-4】 Breuning 모델을 통해 본 ‘낮은 λ’의 원인들 · · · · · 135
【표 4-5】 Breuning 모델을 통해 본 ‘높은 λ’의 원인들 · · · · · 141
【표 4-6】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북핵 용인 모델 · · · · 147
【표 4-7】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의 북핵 용인 모델 · · · · 151
【표 4-8】 동맹, 핵포기 시의 북핵 용인 모델 · · · · · · · · · · · 154
【표 4-9】 민감한 핵 조력 사례들 · · · · · · · · · · · · · · · · · 163
【표 4-10】 미국의 베트남 및 리비아관계정상화 및 경제제재해제 단계 165

그 림 목 차

【그림 1-1】연구 방법론과 연구 경로 · · · · · · · · · · · · · · · · 24

【그림 2-1】외교정책과 역할이론: 국가역할구상과 역할지정 · · · · 29

【그림 2-2】역할 역학의 첫 접촉관계와 오래된 관계 가설모델 · · · 31

【그림 2-3】힘과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역할 메뉴 · · · · · · 32

【그림 3-1】핵용인 게임 · 75

【그림 3-2】핵 보유 희망국의 '도발' 효과 · · · · · · · · · · · · 97

【그림 3-3】동맹 핵포기 시의 '(e)핵용인' 균형 · · · · · · · · · 106

【그림 3-4】북핵 용인 균형들 · · · · · · · · · · · · · · · · · 109

【그림 3-5】북핵 용인 균형들 [(식3)과 (식4)가 역전된 모형] · · · 111

【그림 4-1】북핵 용인 균형 간 전환 · · · · · · · · · · · · · · · 124

【그림 4-2】[(식2)의 변화를 반영한] 북핵 용인 균형들 · · · · · · 125

【그림 4-3】Breuning, M의 행위자-구조 관계의 인지 모델 · · · · · 127

국문요약

북핵 용인 연구

- 동맹의 핵무장 가능성과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정치통일전공 이 중 호

지도교수 유 영 수

북한의 핵용인은 기존 용인 사례들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진다. 비교적 북한의 전략적 활용 가치는 빈한한 반면, 북미 간의 이념과 정체성의 간극, 용인당사국이 적국인 점, 핵 도미노, 국제 사회가 미국에게 갖는 비확산리더십에 대한 기대, 동맹과 유권자의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북핵 용인은 불가능하다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국들의 안보에 대한 지대한 파급 효과에서 '북핵 용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한다. 첫째, 북한이 갖는 불리한 초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용인' 의 유인이 될만한 전략적 가치를 이미 보유했을 수 있고 아니면, 정세의 변화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둘째, 동맹의 핵 도미노와 같은 반대 유인은 '핵용인' 의 가능성을 축소 혹은 차단시키겠지만 한편으로, 핵용인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기존의 핵용인과 다른 양상을 낳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용인’에 대한 독립변인은 ‘북미 간의 양보수준’과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다. 본 연구에서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은 동맹이 핵을 포기한 경우,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로 구분된다. 북핵 용인 양상은 가장 낮은 수준의 ‘침묵(묵인)’, 중간 수준의 ‘한계용인’, 높은 수준의 ‘핵용인’으로 구분된다. 북미는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단계의 용인인 ‘핵용인’ 단계대신 ‘한계용인’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나 동맹이 핵을 포기할 정도로 ‘핵무장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핵용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맹이 핵무장에 대한 태도, 의지, 능력을 달리함으로써 북핵 용인 양상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북핵 용인의 조건들, 양상들, 전개과정을 밝히는 것을 범위로 한다. 북핵 용인에 대한 적정한 설명을 위해서는 권력관계와 이해관계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관련국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상, 역사적 경험과 구성원들의 인식과 같은 이념관계도 아울러야 한다. 북핵 용인 관련국들 간의 권력과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은 주로 게임이론으로, 이념관계에 대한 해석은 주로 역할이론을 적용한다. 게임에서 생기기 쉬운 편향은 역할 이론이 보완하고, 역할 해석이 낳기 쉬운 편견은 게임을 통해 개정한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는 게임이론과 역할이론의 상호보완 또는 견제 구조가 본 연구의 주요한 특징이다.

주제어: 핵, 핵무기, 북핵, 북한 핵, 핵용인, 북핵 용인, 비핵화, 북미, 북미관계, 한국 핵 무장, 핵 도미노, 게임, 게임이론, 역할, 역할이론, 핵확산, 일본 핵 무장.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

1. 연구 배경

2019 년의 2 차 북미정상회담은 기대했던 합의문을 내지 못했다. 표면적 이유는 비핵화의 과정과 목표 수준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근원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서로를 위해서 개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 당사국들의 협상은 시작한 것만으로도 세계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다. 그러나, 서로가 내놓은 협상의 대가는 불신의 역사를 극복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으며,[1]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적국으로 남는 것이 더 익숙했던 양국에게 관계정상화는 생소한 것이었다.[2] 냉전 후의 미국

[1] 제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2019년 2월 29일), 리용호 외무상은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회담 과정에서 미국 측이 영변 핵 시설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미국이 우리 주장을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했다. 북한이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해제가 아니라 일부해제"였으며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5건이라고 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 기자 회견: '전면적 제재해제 아닌 일부해제' 원했다”, BBC NEWS 코리아, 2019년 3월1일; https://www.bbc.com/korean/news-47404051 (검색일: 2023년 8월25일).

[2] 112대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인 Jon Kyle은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북한에 식량원조 중지를 주장했으며, 민주당 상원의원인 John Kerry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정책 리더십을 위해 표대결을 시도했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관련된 정책논쟁이 북한을 이슈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을 얼마나 보장하고 제약하는지에 대한 정당간 대립에 있었던 것이다. 서정건, 『미국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정쟁은 외교 앞에서 사라지는가 아니면 시작하는가?』(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보수우익진영이 북한을 적으로 만든 것은 고의적이기까지 했다. [3] 이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였다.[4] 뿌리 깊은 대미 불신은 북한 사상의 밑천과 밑거름이자, 내부 결속과 동원의 도구였다.[5]

2019), p. 178.

[3] 북한은 미국의 군산복합체 또는 군산복합체와 연결된 미국 정부에게 활용가치가 있었다. 냉전이 종식돼도, 미국은 일본, 한국, 인도, 유럽을 연결하여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1998년 7월, '럼스펠드 위원회'의 평가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 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파주: 창비, 2016), p. 58)

미국은 북핵 문제와 (중국봉쇄와 동북아 주도권을 위한)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북한정권의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 조성복, 『탈냉전기 미국의 외교・안보정책과 북한의 핵정책』(서울: 오름, 2011), p. 227. 그러나, 유일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에서 정권안보는 사활적 이익에 속한다. 양국은 완전히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졌다. (필자)

[4] '반미교양'은 북한에게 '악의제국', 미국과 싸워 승리하기 위한 사상적 무기로써 중단 없이 추구할 중대한 문제다. 미국이라는 적은 정권생존과 관련이 있다. 미국의 위협은 북한 체제가 갖는 온갖 내부모순에 대한 '변명'의 구실이 될 수 있으므로 '미국'이라는 '적'은 유지될 이유가 충분하다. 김태현, "적대관념과 정권안보: 동독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국가전략』, 25(2) (2019), pp. 119-145.

북한의 불신은 미국에 못지 않았다.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 지 8년 만에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들과 전투를 한 카다피의 사례를 잘 아는 북한 지도부 때문에 협상은 더욱 힘들었다. 라몬 페체코 파르도, 권영근・임상순 역, 『북한 핵위기와 북・미관계』 (서울: 연경문화사, 2016), p. 252.

[5] '미제'와의 투쟁은 북한 지도자들과 인민들의 정치사상 기반으로 깊이 스며들었을 뿐만 아니라, 반미주의는 '신천사건'과 같은 전쟁의 참상을 박제화하는 박물관 건립으로 이어졌다. 최용한, 『북미 불신구조 하에서의 비핵화 협상 추진방향』(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p. 18.

바이든 행정부는 2020 년 5 월 발표한 대북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all of all’ 과 버락 오바마의 ‘nothing for nothing’ 정책을 절충한 실용적이며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고 했지만 2024 년 현재,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과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6] 그런 사이,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7] 핵 보유국 지위를 법제화했다.[8]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 비핵화에 대한 주도 세력이 없고 러시아와 중국의 압력이 현저히 줄어든 새로운 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은 제재를 비껴갈 수 있는 우회로를 찾고 있다.[9]

---

[6] Rodrigues, César. Unfinished Business: The Implementation of U.S. Nonproliferation Engagement Towards North Korea. *North Korean Review*, 18(1) (2022), pp. 115–124.

[7]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태세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2022년 9월8일

[8] 최고인민회의,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10개조로 구성된『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채택했다. “제1조: 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제5조: 공화국은 적대적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9] 2023년 9월13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러시아)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다. 북·러가 국제사회의 ‘제재 체제’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혜정은 “러시아는 참을 만큼 참았고 북한은 기대를 접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참아낸 것’과 북한이 ‘기대한 것’의 공통분모는 ‘미국’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무시, 여기에 최소한의 생존 공간조차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북·러가 ‘미국적 질서’에 반기를 든 이유이자 명분이 됐다”고 말했다. 정인환, “김정은·푸틴, 국제정치 문법에 ‘도전’하다”, 한겨레21, 2023년 09월 18일;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 /54418.html, (검색일: 2023년 09월 19일).

이러한 국제 정치 지형에서 '북핵 용인'이란 연구 주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음에도 '북핵 용인'이 무시할 수 없는 연구 영역으로 되는 것은 관련국들의 안보에 대한 파급 효과 때문이다.

2. 문제 제기

미국은 핵보유희망국의 유형이 적국이고, 규모가 작고, 위험 회피적인 성향의 국가일수록 강경한 비확산정책을 취한다. [10] 적국이고 작지만, 벼랑끝 외교를 통해 위험을 감수해온 북한은 신뢰는커녕 미국에게 인내를 강요해왔다.[11] 상호

"로씨야는 어제도 래일도 교활하고 위험하며 침략적인 원쑤와의 대결에서, 자주와 독창성, 발전의 길을 자체로 선택하려는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영웅적인 조선인민을 지지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것이며 이것은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 호혜적이고 동등한 협조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자주권을 강화하며 경제무역관계를 심화시키고 인도주의분야에서의 련계를 발전시키며 결과적으로는 두 국가 공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로씨야대통령 로조쌍무적협조 발전시킬것 강조-로동신문에 글 발표" 『조선중앙통신』, 2024년 6월 18일.

[10] Peter D. Fever and Emerson M. S. Niou. "Managing Nuclear Proliferation: Condemn, Strike, or Assis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0, No. 2(1996).

[11] 위기외교는 북한 빨치산의 게릴라적 수법으로 약소국이 강대국과 협상할때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벼랑끝 전술은 북한의 고립적 상황 때문에 생겨났으며 공산주의 협상방법과 전술로 인해 더욱 강화된 전략이다. 벼랑끝 전술은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위협, 허세, 공갈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스코트 스나이더, 안진환・이재봉 역, 『벼랑끝 외교』(서울: 청년정신, 2003), p. 119.

신뢰와 더불어 교환 가능한 '보수'의 양질이 부족한 북미 양국은 첨예한 이해관계를 포함한 협상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협상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인도·파키스탄에서 발견했던 '세력 균형'이나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활용성'과 같은 핵용인 조건을 북한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북미 양국의 이념적 정체성과 체제는 동화되기 힘들다.[13] 또한, 북핵 용인은 '핵 도미노(동맹의 핵무장)'를 일으킨다.[14] 북한과 북핵에 반대하는 국내와 국외의 세력들을 극복 혹은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할 뿐아니라, 핵용인을

협상이 중단되더라도 미국은 은밀하든 드러내든 "선제" 군사 공격 옵션을 제외해야 한다. 그러한 공격에 대한 북한의 (비핵) 대응은 불과 며칠 내에 서울과 그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포함하여 10만 명의 사상자를 쉽게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속적이고 위험한 균열을 야기할 것이다. Hymans, J. E. C, North Korea's Nuclear Neurosi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63(3) (2007), pp. 44–74.

[12] 북한 붕괴 후 통일과 재건과정에서 북한이 한국과 비슷한 대미 무역량을 보인다고 가정할 때, 10년 후 양국 무역액은 200억달러 정도일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이 미국에게 경제적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것은 미국은 재정적자를 줄일 시장이 필요한 것이지, 값싼 경공업제품 수출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가중시키는 국가를 반기지 않기 때문이다. 마커스 놀랜드,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분석』(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p. 70.

[13] 북한 체제는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아니므로 '회의제'라 할 수 있다. 과거 소련의 최고소비에트나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등도 동일한 체제의 형태이다. "북한체제의 개요와 특징", KBS World Radio; https://world.kbs.co.kr/special/northkorea/contents/archives/politics/summary.htm?lang=k (검색일: 2024.05.05).

[14] 비핵화 원칙을 지키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북핵무기의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핵무기 보유의 명분이 된다. 이헌경, "북한의 핵무장과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2013.11.08).

통해 공식적 수교관계를 맺으면 북한을 더이상 적국으로 활용할 수도 없게 된다.[15]

‘북핵 용인’의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문제 제기는 ‘북핵 용인’ 연구의 실마리가 되었다.

- 문제 제기 1, 북한이 갖는 불리한 초기조건과 전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북핵 용인’의 동기는 존재할 수 있다. 이미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새로 출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 문제 제기 2, ‘북핵 용인’에 대한 ‘유인들(전략적 가치)’과 ‘반대 유인들’의 구성은 기존의 핵용인 사례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 특히, 차이점은 북핵 용인의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16]

본 연구는 차이점 중에서 동맹의 태도, 의지, 능력을 포함하는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기 때문에 가설은 다음과 같다

---

[15]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반대에 대해 미국은 ‘사드는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전략적 탄도미사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정욱식, 『사드의 모든 것』(파주: 유리창, 2017), p. 50.

중국내에서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의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피한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욱식, 『MD본색: 은밀하게 위험하게』(파주: 서해문집, 2015), p. 235.

[16] 예를 들어, 북핵 용인이 주는 미국의 이익이 동맹의 핵무장이 초래하는 미국의 손실을 상회하지 않는 한, 핵용인의 양상은 ‘동맹의 핵무장을 촉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

○ 가설: ‘동맹의 핵무장에 대한 태도, 의지, 능력을 포괄하는 핵무장가능성’은 핵용인 양상과 전개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제 2 절 선행 연구

선행연구를 통해 ‘북핵 용인’의 독립 변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북핵에 관한 연구는 대응 방향에 따라, 대략 ‘비핵화’, ‘안보 측면에서의 핵위협 대비’, ‘북핵과 관련한 국제관계의 변화 전망 및 대응 전략’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북핵 용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1. 비핵화 협상조건

‘비핵화’와 ‘핵용인’은 정반대의 목표를 갖지만, 비핵화 연구에 대한 분석이 갖는 의미는 양 협상의 유사성 때문에 생긴다. 즉, 예를 들어 ‘신뢰 부족’과 같은 비핵화 협상의 실패 조건이 북핵 용인 협상에서도 유효하다. 또한 양자가 전혀 다른 안보와 정치적 환경을 낳음에도, 협상의 성공 조건인 ‘양보의 양과 질’이 중복되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일치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비확산정책은 군사공격에서 적극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강압’, ‘지원’, ‘관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17] Mesquita 와 Riker 는 비확산정책을

[17] 손한별.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과 선택적 비확산정책: “전략적 균형”을 위한 수평적 핵확산." 『국방연구』, 62.1 (2019), pp. 63-98, p. 69.

지정학적 위협과 억제의 성공 가능성에 따라 무시, 실패, 저지로 나누었다.[18] Sagan 은 북핵에 대한 미국의 4 가지 정책 옵션들, 명시적인 묵인, 봉쇄 및 관리, 롤백, 레짐 체인지 중에서, 궁극적으로 압박에 해당하는 롤백이 비핵화를 위한 해답이라고 주장한다.[19] 그렇다면 비핵화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다음은 협상의 성공 조건으로 '신뢰'를 언급한 연구들이다. 하상식은 북미 간 협상은 계속됐고 합의도 됐지만 이행된 것은 없다. 신뢰는 바닥 수준으로 미국은 북한의 약속 이행을 더 이상 믿지 않으며, 북한은 미국의 체제 전복 의도를 계속 의심하고 있다.[20] 이호철도 비핵화 실패원인은 이행 로드맵의 부재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부족 때문이라고 본다.[21]

---

[18] Bruce Bueno de Mesquita and William H. Riker, "An Assessment of the Merits of Selective Nuclear Proliferation,"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982 Jun 01. 26(2), pp. 283-306.

[19] '롤백'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경로로 회귀하도록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명시적 묵인'은 미국과 NPT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봉쇄 및 관리' 정책인 three NO(no export of nuclear technologies, no more bombs, and no "better" bombs)는 단기적 이점만 있을 뿐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다. '레짐 체인지'는 불안정과 고비용 가능성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Pritchard, C. L., Tilelli, J. H., & Snyder, S. A. U.S. Policy Options. In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0). pp. 11–19.

[20] 하상식.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 실패와 한미공조 과제. 『국제정치연구』, 19(2) (2016), pp. 1-33.

[21] 이호철은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분명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쟁점들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문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의 수준, 비핵화 과정, 비핵화 이행에 비례한 경제제재 해제수준, 중국의 태도와 역할을 꼽는다. 이호철,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한국과 국제정치』, 35(1) (2019), pp. 223-240.

송은희도 북한이 핵무기 제조능력까지 완전히 포기할 지 의문인 점, 핵 능력 제거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 핵무기 제조지식까지 폐기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미 간 갈등구조 해체가 선행돼야 한다고 한다.[22] 사실, 양국 간의 불신은 역사적 뿌리를 가진 것이었으며 국가를 지탱하는 정체성으로 발전해 있었다.[23] 2002 년 HEU 문제 때문에 제네바 합의가 깨졌을 때, 북한은 6 자회담에서 경수로 완공 전에 핵시설을 해체할 수 없음을 주장했고, 미국은 제네바 합의 당시와 다르게 경수로 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미국 측 입장은 북한이 경수로를 핵개발에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24] 북한을 믿지 못한 미국은 조기 핵사찰을 요구했고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북한에게 제네바 합의의 실패 책임을 전가하려고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자백하기를 바랬다.[25]

다음은 신뢰 외의 해법을 제시하는 연구들이다. 김영준은 '약속이행'에는 '자기구속'과 '매몰비용' 등의 '고비용 신호'가 생기는데, 상대에 대한 신뢰는

---

[22] 송은희. "북핵을 둘러싼 미·북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49) (2008), pp. 121-136.

[23] 트럼프 행정부 3년간 북한관련 결의안이나 법안은 대부분 인권이나 경제제재 관련법안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양보를 경계하는 데는 야당과 여당의 갭이 크지 않았다. 권보람, "공화당 분파 간 세력 균형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편,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서울: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p. 220-222.

[24] 이용준, 『게임의 종말』(파주: 한울, 2010), p. 344.

[25] 김성학, 『전갈의 절규-북한의 대미불신의 기원과 내면화』(서울: 선인, 2017), p. 397.

‘신호비용의 크기와 지속성’에 비례한다고 했다.[26] 김동수도 비핵화 협상실패의 가장 근본적 이유로 양국 간의 혐오와 불신을 들고 있으며, 추가로 비핵화를 이룰 정도의 맞교환 가능한 ‘정치적 이익의 미발견 혹은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다. 즉, 북한은 체제보장과 같은 안보적 가치를 원했지만 미국은 제재해제와 같은 경제적 가치만을 제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27]

다음은 핵의 내부정치적 의의를 강조하는 연구들이다. 이주희는 북한과 이란에서 비핵화 실패의 주요 원인은 공유된 믿음을 기초로 한 내부 결속력 다시 말해,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믿음이므로 북한과 이란에 가해진 경제제재와 압력은 오히려 정권을 유지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28]. 핵 보유를 선언했던 인도의 총리는 대중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북한 지도부도 이러한 핵의 국내정치적 순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것은 자명하다. [29] 신진은 김정일 정권이 제네바 핵합의를 파기하고 핵무기

---

[26] 김영준,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왜 실패했는가? :고비용 신호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27] 김동수.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 구성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26(4) (2021), pp. 147-163.

[28] 이주희. “비핵화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 비핵화 과정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34(2021), pp. 51-79.

[29] 핵실험은 힌두 민족주의정당 BJP 의 Atal Bihari Vajpayee 총리의 선거공약이었다. 핵보유국 선언이후,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때문에 해외 투자가 멈췄지만, 민영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열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김정은 핵도박, 국익 위해 인도-파키스탄 핵실험 눈감아준 미국 보고...,” 『중앙일보』, 2017.09.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939629#home (검색일: 2023년 12월 26일).

개발을 비밀리에 지속한 이유로 국제사회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핵무기는 군부로부터 충성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제였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본다.[30] 부승찬과 박경진은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과 같은 후견국에 대한 불신이 야기한 포위 심성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혹은 평화협정과 같은 긴장 완화와 함께 핵개발의 최대 수혜자인 김정은을 위해 핵개발을 대신할 수 있는 반대급부(체제안정과 권력공고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31] 박새암은 외교정책 결정요인은 '명분축적' 과 '실리추구'로 나뉘며, 북한 최고지도자의 대외인식에 따른 외교정책은 대체로 '명분축적'에 치우쳐 있었다고 한다. '명분축적'은 프로파간다로 활용됨은 물론 현장의 외교관에게는 관련 내용이 전해지지 않는 대신, '실리추구'형 외교정책은 인민에게 철저히 숨겨진다고 한다.[32]

요약하자면, 비핵화 협상의 실패는 상호불신과 함께, 교환가능한 보수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낮춘다.[33] 신뢰는 협상의 핵심

---

[30] 신진, 『북한과 한・미 외교정책의 소용돌이』(대전: 문경출판사, 2004), pp. 267-268.

[31] 부승찬・박경진.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기와 지속 요인: Scott D. Sagan의 핵개발 동기 모델의 확장," 『국가안보와 전략』, 18(1) (2018), pp. 79-110.

[32] 박새암.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월간국제정세개관」과 북한 외교엘리트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33] 이외에도, 불확실성, 계약 이행에 대한 강제와 단속, 거래와 관련된 투자 등이 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은경, "국가간 신뢰와 글로벌 가치사슬", 『영남일보』,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핵화 실패는 상호신뢰나 협상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술적 문제[34] 보다, 북미 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가정한다. 신뢰는 협상의 주요 변수지만, '양보 수준'에 의해 조성되고, '양보 수준'은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안전조치들로, 평화협정과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 이중기준 철회였다.[35] 그런데, 이러한 조건은 당위적으로 일면 납득이 가지만, 추상적이어서 관점과 상황에 따라 조건의 이행에 대해 얼마든지 트집을 잡거나 변명할 여지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를 치밀하게 반영한 구체적인 협상 조건들이다. 홍우택 등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해 구조를 만족시키거나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북한의 이해 구조를 바꾸고 핵문제의 타결점을 결정하는 것은 힘으로써 협상은 남북한의 선호도 차이와 함께 영향력의 강도라는 것을 게임이론을 통해 설명한다.[36] 정우람도

2020년9월8일;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 20190802.010220751410001, (검색일: 2023년9월2일)

[34]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합의는 기술적 문제에 속한다. 크리스토퍼 힐은 부시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에게 전달하고 영변의 핵 시설 불능화 등 2006년, 2007년의 획기적 외교진전 이후 강력한 정치적 압력에 직면했다. 그는 사적으로 체니 부통령실과 더불어 다른 행정부의 강경파들과 협의하는 것이 북한과의 협상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불평했다. 마이크 치노이. 『북핵 롤러코스터』(서울: 참언론시사IN북, 2010), p. 598.

[35] 박형준, "비핵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 연구," 『북한학연구』, 19(2) (2023), pp. 45-81.

[36] 홍우택・전현준・이수형 등,『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서울: 통일연구원, 2011)

북한이 미국의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정책이나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유인책은 북한을 협력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게임을 통해 증명했다.[37] 즉, '비핵화'를 결정하는 것은 관련국의 이해관계와 더불어 권력관계라는 것이다. 이해관계는 권력관계의 강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해 구조는 동일할 수 없다. 본 연구도 북핵 용인 양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국들의 권력관계와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 북핵 용인

인도·파키스탄 핵용인 협상의 계기, 내용, 과정은 북한의 그것과 일면 중첩된다. 김태형의 연구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가진 미국 국익과 결부된 유인들(인도에 대해 중국봉쇄,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의 변화무쌍한 핵용인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38] 이장욱은 인도,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은 4 가지 요소들(미국의 승인, 핵전력이 미국을 공격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 미국이 요구하는 전략적가치 보유,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불식하는 군사 및 외교 노력)을 충족시키므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받은 반면, 북한은 이러한 요소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대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전력을 통해 쿠바 미사일위기 때의 미소간 협상과 같은 방식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받으려 할 것이라

[37] 정우람. "미국의 북핵정책 변화와 북한의 대응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38] 김태형,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이해-신현실주의 이론으로 바라보는 양국의 핵개발과 안보전략 변화』(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내다봤다.[39] Bennett 등의 연구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하는 북한 국가 목적의 진화과정을 제시하는데, 북한은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해 도중에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인 길을 주장하지만,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핵보유를 전제로 하는 지역강국(강성대국)으로서 북미 평화조약, 주한미군 철수/최소화, 양자 군비통제 회담추진, 북한이 사전 동의할 때만, 한반도 문제에 개입,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략적 독립성 확보, 제재 전면 해제라고 주장한다.[40] 오세정은 핵 보유국을 지향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취한 단계적 핵정책은 핵 이중성, 핵 모호성, 핵 정당성 전략의 순서만 다를 뿐 그 내용이 비슷했다고 주장한다.[41] 비슷한 연구로 핵보유국으로 용인된 인도와 파키스탄의 단계적 핵 전략과 북한의 핵 경로가 비슷함을 보여준 김동욱과 김에스라의 연구도 있다.[42]

---

[39] 이장욱,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획득 가능성 연구: 기존 사실상 핵보유국 사례를 토대로." 『글로벌정치연구』, 10.2 (2017), pp. 35-87.

[40] BENNETT, B. W., CHOI, K., GO, M.-H., BECHTOL, B. E., PARK, J., KLINGNER, B., & CHA, D.-H.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Looking Beyond Nuclear Capability.* In *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21), pp. 5–24.

[41] 오세정, "비공식 핵 보유 국가가 공식적 핵보유 국가로 부상하는 단계적 전략: 인도의 '4단계 핵보유 전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世界地域研究論叢』, 35.3 (2017), pp. 405-431.

핵보유국 지위에는 공식과 비공식 두가지가 있다. NPT(NPT 9조 3 항)에 의한 용인인 공식적 용인 지위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한 미국, 소련(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대한 지위다. 미국의 선별적 용인과 여타국들의 묵인을 통한 것이 비공식적 용인이다. 엄상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은 가능한가? - 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제11차 한국평화연구학회 국제학술세미나(2014), pp. 247-269.

[42] 김동욱, 김에스라, "'핵 보유국' 인도와 '핵 강국' 북한의 경로 유사성 비교 연구."

그러나 북핵 용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엄상윤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핵보유 능력을 입증했고 핵보유 선언을 통해 명백성의 요건을 충족시켰지만, 우호협력적 대미정책, 전략적 활용가치, 핵 비확산 의지와 노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파키스탄과 같은 '소극적 묵인'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43] 현재의 분위기로는, 북핵에 대한 (인도 수준의) 용인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기 힘들 뿐 아니라 남한이나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게 핵 도미노를 유발하고, 핵 허용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므로 불가능하다.[44] 그러므로, 북핵 용인은 인도나 파키스탄 사례와는 비교하기 힘들며, 그것이 실현된다 해도 전례가 없는 원인, 양태 그리고 과정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전략적가치는 국제정치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점에서 핵용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이 사활적 이익과 관련하여 북한의 활용 가능성을 재발견 혹은 재평가하는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북핵 용인 협상의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므로, 협상은 북한이 아니라 미 본토 공격이라는 사활적 위기를 감지한 미국에 의해 시작될 수도 있다. 핵용인 협상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해, 북한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이외 지역 혹은 집단으로

『한반도미래연구』, 6.1 (2022), pp. 1-30.

[43] 엄상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은 가능한가? -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제11차 한국평화연구학회 국제학술세미나(2014), pp 247-269.

[44] 북한을 잠정적이나마 핵보유국으로 용인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엄청난 찬반 논쟁을 일으키고,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NPT 체제를 유지할 명분과 동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경만・임수호・방태섭 등, 『북한핵과 DIME 구상』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p. 85.

핵을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 기존 핵(이른바 '과거 핵')을 용인받으려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이 협상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동반한 공식적인 것이든 비공식적인 것이든 북한의 핵 공격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점과 협상에서 제기되는 협상조건과 표어의 평화적 분위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재욱은 국가 간 공약신뢰문제는 많은 경우에 선호의 변경문제(time-inconsistency problem)와 관련된다고 본다. 또한, 공약신뢰문제가 심각할 때, 이를 극복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은 양보수준에 해당하는 합의철회 비용을 높여 공약신뢰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45] 김정배는 2 차 대전 후 초유의 강대국인 미국에게는 민주주의도 냉전도, 심지어 독재조차도 미국 이익 추구의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46] 모든 국가 간 협상은 '신뢰'와 더불어 협상 성사를 가능케하는 '양보'를 필요로 한다. '양보'는 국가의 사활적 이익 및 매우 중요한 이익들을 구체적으로 보상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위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47] 협상에서 신뢰의 기능은 작지 않은 것이지만, 북한과

---

[45] 정재욱. "공약신뢰문제와 이란 핵협상," 『세계지역연구논총』, 40(2) (2022), pp. 131-159.

[46] 김정배, "미국의 제3세계정책: 이념과 현실 사이," 『미국사연구』, 40(0) (2014), pp. 169-200.

미국은 소련의 세력권을 인정하는 대신 미국의 자본주의세계 내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려 했다. 그 점이 트루먼독트린에 내포하는 중요한 의미다. 김정배, 『미국과 냉전의 기원: 공존과 지배의 전략』 (서울: 혜안, 2001), pp. 131-172

[47] Alexander L. George 와 Robert O. Keohane 이 제시한 물리적 생명, 자유, 재산의 세 가지 국가이익개념에 더하여 웬트는 국가정체성을 재생산하기 위한 객관적 이익으로 '집단적 자긍심'을 추가했다. 알렉산더 웬트, 박건영・구갑우·이옥연·최종건 역,『국제정치의

미국 사이의 신뢰 형성은 가장 어려운 숙제이고 당위일 뿐, '힘(hard power)'을 통한 국제정치에서 '신뢰(trust)'는 거래 수단으로 어울리지 않는다.[48] 본 연구는 신뢰를 북미 관계의 주요 해법('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보다 주요 과제('있으면 좋은 것' 즉, '없어도 되는 것')나 주요 결과('최종적으로 나타날 것')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익을 낳는 양국의 '양보수준'을 북핵 용인 협상의 독립변인으로 선택한다.

3. 동맹과 핵무장

본 연구는 제 1 절에서 언급한 북핵 용인의 반대 유인들 중에서 '동맹의 핵무장가능성'과의 인과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동맹의 핵무장가능성과 핵무장 불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하영선 등은 원자력 분야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한미 동맹의 악화 손실,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핵 경쟁에 대한 우려, 기존 핵 보유국들의 견제, 비핵화선언에 대한 자기 부정 등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 (서울: 사회평론, 2009), pp. 317-334

[48] 부시는 중국마저도 쇠퇴하는 소련과 팽창하는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전략의 핵심"으로 보았다. 조병제,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서울: 늘품플러스, 2019), p. 161.

1992년 8월, 한중수교는 중국이 국익을 철저하게 추구한 사례다. 김일성이 한중수교를 북미수교와 연계할 것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수교를 단행했다. 한중수교는 한반도의 상황 급변시 일종의 보험의 의미가 있었다. 앞의 책, p. 101.

1990년 9월, 합의한 한소 국교정상화에 대해 북한은 "쏘련은 사회주의 대국으로서의 존엄과 체면, 동맹국의 리익과 신의를 23억 달러에 팔아먹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딸라로 팔고 사는 ≪외교관계≫," 『로동신문』, 1990년10월5일.

이유를 들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은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했다.[49] 이병철은 한국의 핵무장 담론이 핵무장으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 높은 무역 의존도, 5 년 단임의 대통령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든다.[50]

반대로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재원은 미국의 안보공약이 약화된다면 탈핵 국가론과 핵무장론으로 양분될 것이며, 특히 국제적 패권 부재는 핵무장 유혹을 일으킬 것이라고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51] 김석준은 방어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생존을 위해 상대 국가의 힘에 대응하는 균형이 중요하며, 양 측 모두 제 2 타격 능력을 가지면 핵이 실질적 방어 무기가 되어 안정을 가져오고, 안보 딜레마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국의 방어적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신호가 필요하다고 한다.[52] 전진호는 한국과 일본은 핵잠재력 확보와 관련하여 처한 상황이 유사하기

---

[49] 하영선・전재성・김병연 등, “북핵위기의 새로운 해법”, 『EAI 연구 보고서』(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6), P. 6.

[50] 이병철. "‘핵 오리엔탈리즘’ 관점에서 본 한국 핵무장 담론의 새로운 방향모색." 『IFES 정책보고서 2020.4』, (2020), pp. 1-46.

[51] 이재원, “한국 핵정책의 재조명: 핵에 관한 네 가지 시각과 담론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31(2) (2021), pp. 1-23.

[52] 김석준,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함의: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31(4) (2023), pp. 289-314.

때문에 협력할 공간도 크다고 한다.[53] 그러나, 양국 간의 역사적 연원에서 기인하는 갈등 구조와 경쟁관계는 핵무기라는 공격무기에 대한 협력 결정과 여론 형성에 한계성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북핵 용인'과 '동맹의 핵무장' 간의 연관성을 다루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황록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협상전략의 일환으로만 접근하여 제재만 완화하려 한다면 한국과 일본 등의 주변국들은 핵안보 불안감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이 핵 도미노를 재현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54] 비슷하게, 이헌경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북핵무기의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핵 무기 보유의 명분이 된다고 했다.[55] 장석준도 비슷한 의견이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적대관계인 북핵 보유 인정은 직접적 안보위협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에서 '핵 도미노(Nuclear Domino)'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핵 승인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56] 최아진은 북핵 용인이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즉, 북미 간의

---

[53]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미국의 승인을 위해 한일 협력체제와 한일 원자력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전진호,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와 한일 원자력 협력," 『한일군사문화연구』, 37(0) (2023), pp. 5-28.

[54] 김황록,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상대하기』(서울: 블루리본, 2020), p. 285.

[55] 이헌경, "북한의 핵무장과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전남대학교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13).

[56] 장석준, "북한・인도・파키스탄의 핵무장 정책 동인을 통해 본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가능성"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4(2) (2018), pp. 170-210.

상호 적대적 전략과 더불어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핵보유국가로 용인할 정도의 전략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고, 북핵 용인이 한국, 일본, 대만을 핵무장 국가로 유도하고 이것은 다시 미국의 입지와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 또한, 비민주적 정치체제와 열악한 인권의 북한을 용인하는 것은 미국의 내부정치면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핵 묵인에 한계가 있다.[57]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은 북핵 용인에 대한 주요한 반대 유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북미 간 양보수준'과 더불어 또 하나의 독립변수로 채택한다.

[57] 최아진, "미국과 신흥 핵무기 보유국"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pp. 194-197.

제 3 절 연구 범위와 목적

본 연구는 북핵 용인의 가능성, 불가능성, 불가피성 대신, 다음과 같이 북핵 용인의 조건과 양상, 그 전개 과정을 밝히는 것을 연구 범위로 한다. 첫째, 북핵 용인 양상[58]을 낳는 다양한 변수들을 찾는다. 이 때 변수는 북핵 용인의 조건에 해당한다. 둘째, 게임을 통해 조건 별, 북핵 용인 양상을 제시한다. 셋째, 도출된 다수의 용인 양상들에 대한 유인들(변수들)을 역할 모델을 통해 보충한다. 넷째, 북핵 용인 양상에 대한 선차성을 비교하여 북핵 용인의 전개 과정을 제안하고, 그 난이도 평가를 통해 북핵 용인 양상의 현실화 가능성을 탐색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맹의 핵무장가능성'과 '북미 간 양보수준'을 '북핵 용인 양상'에 대한 독립변인으로 선정했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북미의 양보수준'과 더불어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에 따라 핵용인 양상과 그 전개 과정이 달라짐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을 동맹이 '핵을 포기한 경우',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와 '핵무장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따라 핵용인 양상이 달라짐을 보인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동맹은 북핵 용인 양상을 결정하는 주요 주체가 될 수 있다.'

[58] 본 연구에서 '북핵 용인 양상'은 가장 낮은 수준의 '침묵(묵인)', 중간 수준의 '한계용인(liminal status), 높은 수준의 '핵용인' 수준으로 구분한다.

제 4 절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북핵 용인 양상과 전개 모형을 결정하는 변수와 변수 간 관련성을 찾기 위해 게임이론과 역할이론을 활용한다.[59] 본 연구는 북핵 용인의 양상과 전개 과정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위해 권력관계와 이해관계는 물론, 국가의 사상과 정체성, 역사적 경험과 구성원들의 인식을 가진 관련국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념관계를 포괄한다. 권력과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은 주로 게임이론으로, 이념관계에 대한 해석은 주로 역할이론을 적용하였다.

게임이론이 북핵 용인 과정을 분석하는데 적정한 이유는 그것을 둘러싼 국제환경 속의 국가의 관점과 입장이 딜레마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게임은 북핵 용인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선택한 협조와 갈등의 전략 상황에서 빚어지는 전략적 상호작용을 모형화하고, 관련국의 전략이 모이는 균형점들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전략과 보수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의 특성 상, 본 연구에서 게임 분석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필요로 한다. 첫째, 질적인 정보인 게임 플레이어의 동기를 게임 보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강한 가정 문제, 즉 '편향', '중첩', '비약',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60] 둘째, 북핵 용인의 단계에 해당되는

---

[59] 인과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변수 간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시한 것을 모형이라 한다. 한치록, 『계량경제학』 (서울: 박영사, 2024), p. 21.

[60] 경제학의 주체 간의 이해득실이 명확한데 비해, 영향력, 권력, 계급과 같이 추상적 가치를 다루는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주체에서는 게임 모형화가 어렵고 그 설득력도 낮다.

균형들이 다수 발견되었을 때, 북핵 용인의 전개과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균형들의 난이도와 선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이를 판정하기 힘들다. 셋째, 게임은 권력관계와 이해관계와 같이 비교적 우위를 구분하기 쉬운 분석에는 유리하지만, 하나의 숫자나 변인으로 표시하면 같이 직접 비교하기 힘든 복잡미묘한 관념적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지나치게 단순화 혹은 도식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61]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간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을 위해 【그림 1-1】과 같이 게임이론과 역할이론을 활용한다.[62]

한동근, 『게임이론-전략적 의사결정의 이론과 응용』(서울:경문사, 1997), p. 4.

내생성(endogeniety) 문제는 독립변인의 누락으로 인해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할 때 생긴다. 조동훈, "내생성과 표본선택편의의 차이는?" 『국제노동브리프』, 6(2) (2008), pp. 97-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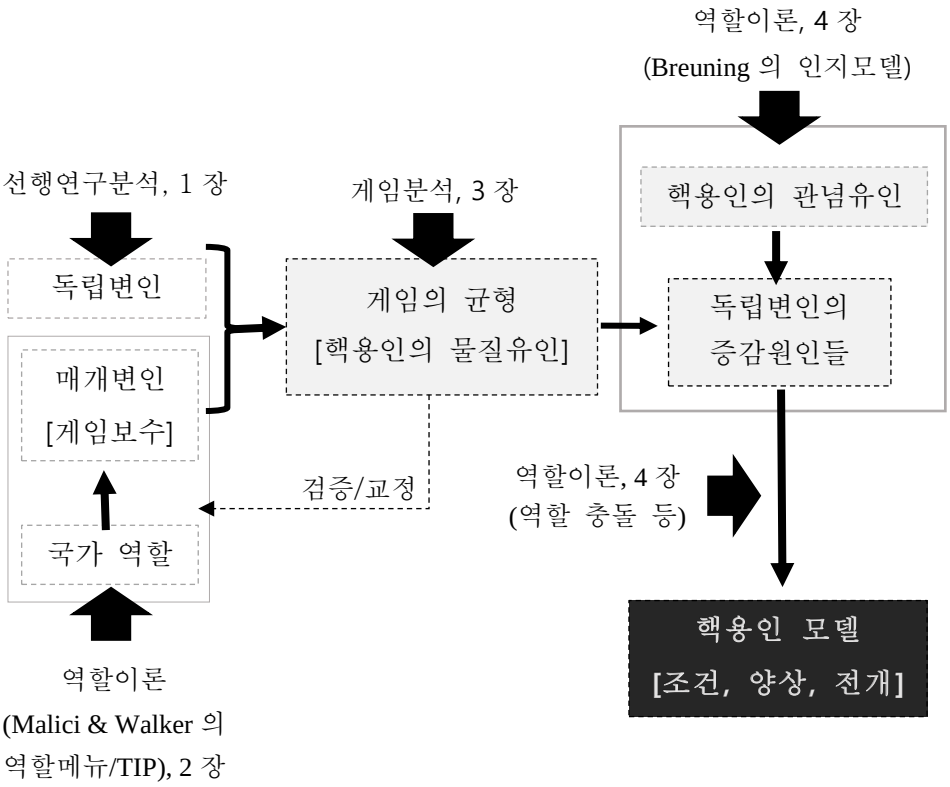
[61] 또한, 다수의 숫자나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게임이 복잡해지므로 보수의 경중을 가리기 힘들고, 균형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62] 게임 참여 국가 즉, 핵용인국, 핵보유 희망국, 핵용인국의 동맹국들은 순차적 선택들을 통해 '균형'이라 불리는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데, 이러한 과정은 각 국가의 적정한 '역할 찾기(role location)'에 해당한다. Akan Malici, Stephen G. Walker, 2017. *Role Theory and Role Conflict in U.S-Iran Relations: Enemies of Our Own Making*, Routledge, p. 18

사회과학에서 '객관성'의 의미는 첫째, 경험적 사실인지, 둘째,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지, 셋째, 신뢰성 있는 사실인지에 달려있다. 임도빈,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양적인 질적 연구와 질적인 질적 연구." 『정부학연구』, 15.1 (2009): pp. 155-188.

본 연구의 주요 논리는 역할이론과 게임이론의 접점에서 맺힌다. 경험적 사실의 해석을 위해 역할이론을, 논리적 분석을 위해 게임이론을 활용한다. (필자)

【그림 1-1】 연구 방법론과 연구 경로



※필자 작성

첫째, 게임의 보수를 찾기 위해 북핵 용인 관련국들에 대한 역할 분석을 활용한다. 이 때, Malici 와 Walker 의 '역할 메뉴'와 'TIP(Theory of Inference Preference)'이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한다. 게임 보수는 북핵 용인을 설명하는 매개변인(intervening variable)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변인들이 중복되어

독립성을 갖지 못하면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63] 또한 보수가 누락되면, 변인들 간의 인과경로에 영향력을 줄 뿐 아니라, 연구의 불확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연구의 설명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보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게임 참여 국가들에 대한 역할 분석을 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보수를 기반으로 한 게임 분석에서 게임 균형을 도출한다. 균형들이 갖는 보수들 간의 합리성 판정 및 비교 평가를 통해 게임의 구조와 역할을 조정한다.[64] 재조정된 새로운 역할은 새로운 보수를 제안하고, 새로운 보수는 새로운 게임 균형을 도출한다. 이러한 순환하는 검증과 교정 과정을 통해, 변인의 '편향', '중첩', '누락', '비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연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북핵 용인과정에서 게임 보수에 해당하는 매개변인들은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조정하는 변인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양상을 변경시킨다.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북미 간 양보의 크기'와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은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확정하였다.

셋째, 게임을 통해 도출된 '게임 균형'은 자국과 타국이 어떤 전략을 유지하는 (즉,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안정 상태로 하나의 북핵 용인 양상에

---

[63] 다중공선성 문제 외에, 즉, 연구자는 관찰된 함의보다 많은 추론을 하는 문제도 있다. 개리 킹・로버트 코헤인・시드니 버바, 김석동 역, 『사회과학연구의 설계-질적연구에서의 과학적 추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3), P. 217

[64] 게임 결과에 대한 평가란, 구체적으로는 균형을 설명하는 수식의 합리성 및 균형 간 수식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해당된다. 게임 균형의 보수는 핵용인의 유인(매개변인에 해당)으로써 주로 권력관계와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게임이 이념 관계까지 포괄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자면, 게임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넷째, 역할 이론의 'Breuning 모델(Cognitive Model of the Agent-Structure Relationship)' [65] 은 게임에서 고려할 수 있었던 혹은 게임에서 누락했던 (권력관계를 포함하는) 국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하는) 유물론적 측면뿐 아니라, 게임에서 다루기 힘들었던[66] 정체성, 역사, 국내 구성원, 리더십과 같은 국내적, 관념적 측면까지 체계적으로 포괄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북핵 용인의 독립변수인 '북미 간 양보수준'과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을 축소 혹은 확대하는 원인들을 빠트림 없이 찾을 수 있게 한다.[67]

---

[65] Breuning, M, *"Role Theory Research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ate of the Art and Blind Spots," in S. Harnisch, C. Frank, and H.W. Maull (eds.) Role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pproaches and Analyses*.(New York: Routledge, 2011)

[66] 본 연구의 게임 분석에서의 보수의 수는 17개이다. '게임에서 다루기 힘들었던'이 의미하는 것은 이념관계까지 포함하면 보수의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며, 늘어나더라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특히 보수 간의 수준이나 범위의 차이가 다양한 이념관계를 충분히 다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점이 역할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67] Akan Malici와 Stephen G. Walker도 비슷한 설명논리를 가지고 있다. 즉, 역할 추동력(incentive)인 국가 간 이해관계가 사활적이냐 부수적이냐에 따라 자국과 타국의 역할 제정(role enactment)의 전략적 방향성이 결정되고, 역할 제약(role constraints)인 권력관계가 균형적이냐 불균형적이냐에 따라 자국과 타국의 역할 제정(role enactment)의 전술적 유연성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Akan Malici, Stephen G. Walker, *Role Theory and Role Conflict in U.S-Iran Relations: Enemies of Our Own Making*, (New York: Routledge, 2017), p. 12.

다섯째, 게임은 다수의 균형들을 도출하는데, 이것을 '균형의 다중성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게임 균형들은 정확한 수치 대신 순서형 변수로 표시되므로 균형의 선차성을 판별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균형 간 선차성의 비교가 필요한 이유는 북핵 용인의 전개 과정(단계)과 균형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각 균형의 '역할 충돌(role conflict)' 수준을 비교하여 실현 가능성과 함께 균형 속에 내포하는 안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북핵 용인 단계를 제안한다.[68]

외교정책연구에 대한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와 구성주의적 해석은 구조 중심인 반면, 역할이론은 행위자 중심일 뿐만 아니라 주체와 구조의 통합적 관점을 갖는다.[69] 본 연구의 게임 분석에서 생기기 쉬운 편향을 역할 이론이 보완해 주었고, 역할 분석에서 생기기 쉬운 편견을 게임을 통해 교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게임이론과 역할이론의 상호보완 혹은 견제 구조는 연구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

[68] 북미간 협상이 요구하는 양보수준이 높을수록,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높을수록 역할 충돌의 강도도 높아 진다. 역할 충돌의 강도 비교를 통해 북핵 용인 양상의 실현가능성과 함께 선차성을 찾을 수 있다. 이 선차성 비교를 통해 북핵 용인의 전개 과정을 설명한다.

[69] 1970년대 역할이론이 국제관계 분석을 위해 도입된 이후, 국제관계학 학자들에게 널리 환영받지 못했지만, 1990년대에 구성주의와 결합함으로써 재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역할이론은 다양한 영역, 주제, 지역 및 분석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다. 역할이론은 구조주의적 이론들보다 '설명력'이 앞선다. 왜냐하면 역할이론은 구조와 주체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역할이론은 "구조와 주체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틀을 제공한다. 유동원, "역할이론의 발전과 국제관계," 『국제정치논총』, 57(3 (2017), pp. 7-49.

제 2 장 북핵 관련국들의 이해관계와 역할분석

제 2 장에서는 북핵 용인 양상의 매개변인들[70]과 관련국들의 핵용인 관련 전략들을 찾는다.[71] 매개변인은 게임의 보수에 해당하며, 핵용인 관련국들의 전략은 마찬가지로 게임의 전략에 해당한다.

제 1 절 핵용인국의 역할과 이해(利害)

1. 국가 역할과 보수의 관계

'국가의 역할'은 국제관계 속에서 "기대되는 외교정책 행위와 행위방향을 표현하는 일련의 기준(norms)"이라고 할 수 있다.[72] Harnish 는 "역할을 타자(alter)와 자아(ego)의 기대와 목표를 반영하는 사회적 위치 (positions)" 로

---

[70] 독립변인들인 '북미의 양보수준'과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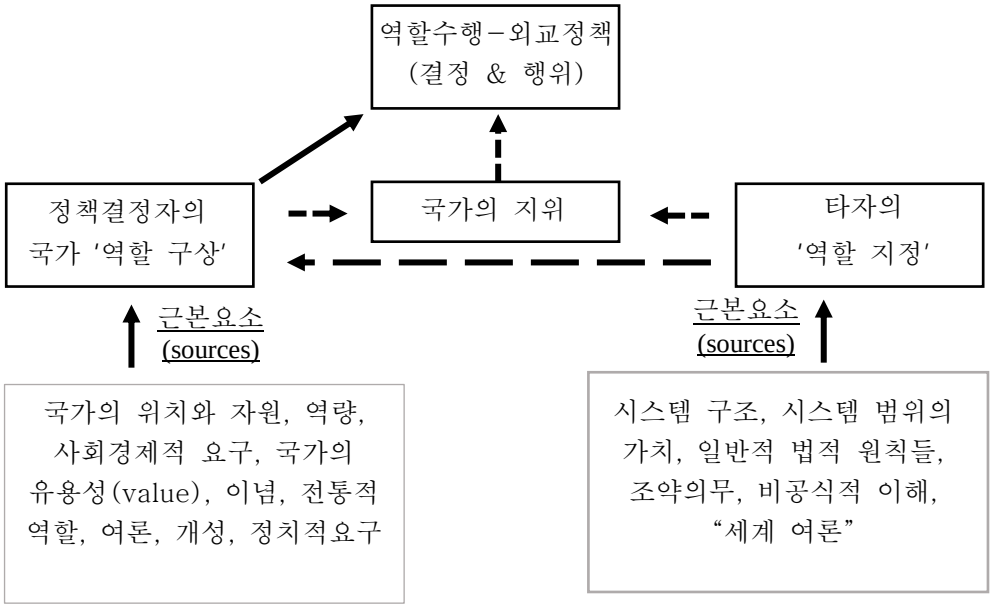
[71] 데이터 생성과정에 대한 보고와 기록을 통해 데이터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것이 없다면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표준절차가 편향적 추론을 만들어내는 것인지를 판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데이터 생성과정을 알아야 타당한 인과적 혹은 기술적 추론이 가능하다. 개리 킹・로버트 코헤인・시드니 버바, 『사회과학연구의 설계-질적연구에서의 과학적 추론』(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3), P. 55.

본 연구에서는 보수를 추출하기 위해 플레이어들의 역할 분석을 활용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며 누락되지 않고 중첩되지 않은 보수를 추출할 수 있다.(필자)

[72] Aggestam, L. "Role Conceptions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n Foreign Policy," AERNA Working Paper, (1999). https://www.sv.uio.no/arena/english/research/ publications/arena-working-papers/1994-2000/1999/wp99_8.htm (검색일: 2023년 12월 29일).

규정했다.[73] Holsti 는 '국가 역할'은 정책결정자의 '역할 구상(role conception)'과 타국의 '역할 지정(role prescription)'에 구속되는 국가의 '지위(status)'가 결정한다고 했다. 【그림 2-1】과 같이, 자국의 '역할 구상'을 결정하는 요소(sources)로는 국가의 위치, 자원, 역량 등이 있고, 타국의 '역할 지정'을 결정하는 요소는 체제 구조, 체제 범위의 가치, 일반적인 법과 원칙 등을 꼽을 수 있다.[74]

【그림 2-1】 외교정책과 역할이론: 국가역할구상과 역할지정



※출처: Holsti, K. J. (1970).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4*(3), 245.

---

[73] Sebastian Harnish, Cornelia Frank, and Hanns W. Maull (eds). *Introduction. In Role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pproaches and Analyses* (Oxon: Routledge, 2011)

[74] K. J. Holsti,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4*(3) (1970), p. 245.

【그림 2-1】에서 실선은 보다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점선은 간접적이고 약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보통은 국제정치에서 주권이라는 현실때문에 정책 결정자의 국가 역할 구상 및 국내적 요구가 외교정책 결정의 주 요인이 되고, 타국의 역할 지정은 불연속적이고 잠재적 영향력만 갖는다.[75] Malici 와 Walker 가 제안한 【그림 2-2】의 '권력-정체성-국가이해 모델(Power-Identities-National interests model, PIN model)'은 '있는 그대로의 국가의 힘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역할 요구(role demands) 모델'과 있는 그대로 보다는 '신념(마음) 속, 국가의 힘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역할 구상/기대(role conception/expectation) 모델'을 통합하여 만들어졌다.[76] 'PIN 모델'은 '역할 제정(role enactment)', '역할 요구', '역할 구상/기대'는 분리된 것이 아니며, 순환하면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상호협력, 상호충돌, 지배/굴복'이란 상호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77] 즉, 역할 요구와 역할 구상을 토대로 만들어진 국가역할들은 다양한 '이해(interest) 관계', '이념(value) 관계', '권력(power) 관계'와 함께 다양한 양상의 외교행위들로 표출된다.[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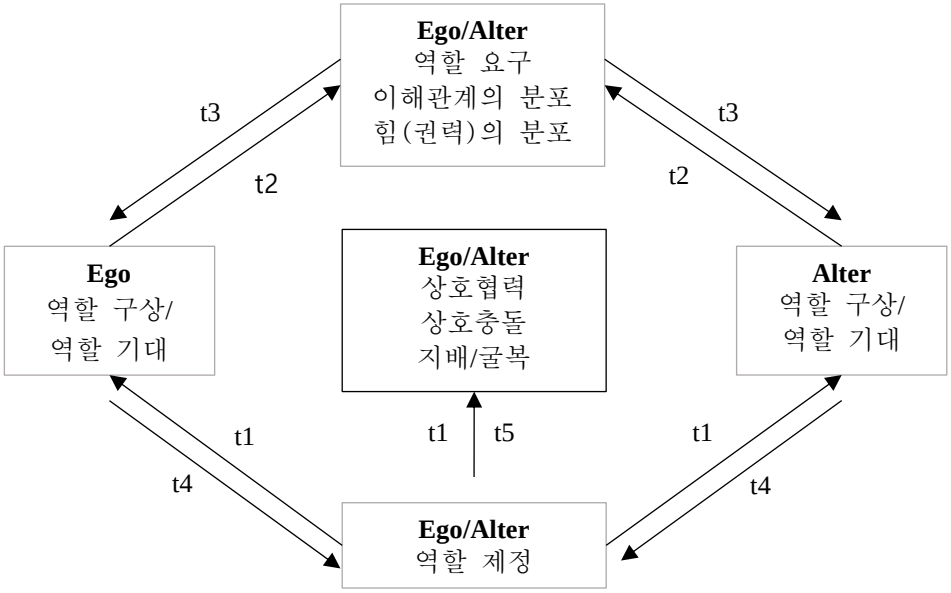
[75] 위의 책, 243-244.

[76] Akan Malici, Stephen G. Walker, *Role Theory and Role Conflict in U.S-Iran Relations: Enemies of Our Own Making*, (New York: Routledge, 2017), p. 49.

[77] 위의 책, p. 48. PIN 모델은 과거 상황이 리더의 신념을 변경하고(역할요구 모델에 해당), 리더의 행위는 초기의 상황을 결정한다(역할구상/기대 모델에 해당)는 것을 보여준다.

[78] 국가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게임의 균형도 다양한 관계를 반영한다. 게임 균형은 플레이어에 대해 전략들의 조합으로 정의되며, 이 때, 각 플레이어의 전략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는 다른 사람들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개인의 기대효용 또는 보상을 최대화해야 한다. Crawford, Vincent P. "New Directions for Modelling Strategic Behavior: Game-

【그림 2-2】역할 역학의 첫 접촉관계와 오래된 관계 가설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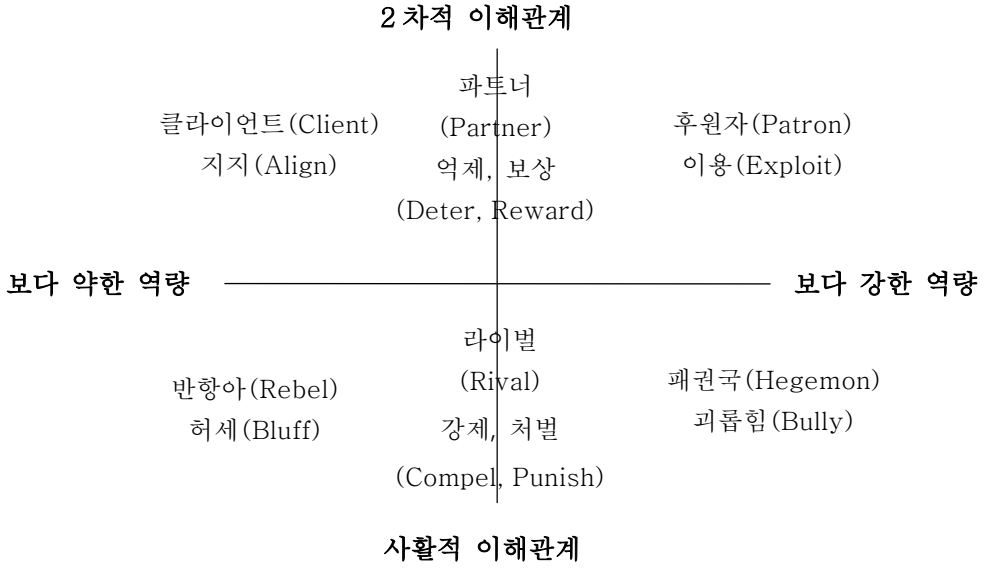
※출처: Akan Malici, Stephen G. Walker, 2017. Role Theory and Role Conflict in U.S-Iran Relations: Enemies of Our Own Making, Routledge, p. 49. (t1, t2, t3, t4, t5: 시간의 경과를 표시함.)

Malici 와 Walker 는 【그림 2-3】과 같은 "힘(권력관계)과 이해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역할 메뉴"를 제안했다.

Theoretic Models of Communicatio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 Economic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0, no. 4, (2016), pp. 131–49.

역할이 자국의 정책결정자와 함께 타자의 역할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게임과 동일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가진다.

【그림 2-3】 힘과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역할 메뉴



※출처: Akan Malici, Stephen G. Walker, 2017. Role Theory and Role Conflict in U.S-Iran Relations: Enemies of Our Own Making, Routledge, p. 12.

즉, '클라이언트', '파트너', '후원자', '반항아', '라이벌', '패권국'은 이해관계와 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 역할'이고, '지지', '억제, 보상', '이용', '허세', '강제, 처벌', '괴롭힘'은 각 역할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이다. '선호도에 따른 추정 이론(Theory of Inference about Preference, TIP)'은 【그림 2-3】에 보이는 역할들의 실행 가능 전략들과 전략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역할은 ‘합의’ 전략이 가장 우수하고(가장 나은 보수(payoff)를 제공하고), ‘지배’ 전략이 가장 불리하다(가장 낮은 보수를 제공한다).[79]

TIP 는 역할을 게임 플레이어로 간주하며, 할당된 역할에 기초하여 가장 유리한 ‘전략 별 보수’[80]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본 연구도 동일한 논리를 활용한다. 즉, 게임 보수의 추출을 위해 먼저 관련국의 역할을 도출한다. 관련국의 역할과 연관된 보수는 게임에 적용하고, 게임 결과인 균형의 합리성을 통해 검증되며 다시 역할 재조정의 재료가 된다. 재조정된 역할을 바탕으로 제안된 새로운 보수는 새로운 게임에 적용한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통해 게임의 신뢰성과 설명력을 높인다.

---

[79] 1~4는 각 전략의 보수를 의미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보수가 높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경우, 1~4의 보수가 할당되는데, ‘합의’는 4, ‘교착’은 3, ‘굴복’은 2, ‘지배’는 1의 보수가 주어진다. Akan Malici, Stephen G. Walker, *Role Theory and Role Conflict in U.S-Iran Relations: Enemies of Our Own Making*, (New York: Routledge, 2017), p. 18.

[80] 아래는 TIP에 의한 의한 역할 별, 최적의 보수를 보여주는 예다.

- 클라이언트(권력불리, 협력지향일 때): 합의(4) > 교착(3) > 굴복(2) > 지배(1)
- 파트너(권력동등, 협력지향일 때): 합의(4) > 교착(3) > 지배(2) > 굴복(1)
- 후원자(권력유리, 협력지향일 때): 합의(4) > 지배(3) > 교착(2) > 굴복(1)
- 반항아(권력불리, 갈등지향일 때): 지배(4) > 합의(3) > 굴복(2) > 교착(1)
- 라이벌(권력동등, 갈등지향일 때): 지배(4) > 합의(3) > 교착(2) > 굴복(1)
- 패권국(권력유리, 갈등지향일 때): 지배(4) > 교착(3) > 합의(2) > 굴복(1)

2. 미국의 국가 역할

역할 이론가들은 복잡한 국제구조와 관계를 반영하는 다양한 국가 역할들을 제시해왔다.[81] 앞선 논의에 따라, 각각의 역할은 선호하는 전략과 전략 별 보수를 가진다. 그런데, Malici 와 Walker가 제안한 보수 추출의 아이디어는 받아들이지만, 【그림 2-3】의 국가 역할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북핵 용인 구조에 맞게 국가 역할 분류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세분화함으로써 구분이 필요한 주요 보수(다시 말해, 매개변인)를 하나로 취급하지 않고, 또한 보수 누락을 피하기 위해서다.[82]

---

[81] K. J. Holsti가 찾은 국가의 역할 유형은 1965-1967년간, 'Bastion of revolutionary-liberator', 'Regional leader', 'Regional protector', 'Active Independent', 'Liberation supporter', 'Anti-imperialist agent', 'Defender of the faith' 등 17개가 있고, 이 기간 동안 국가들이 수행한 역할의 수는 평균, 4.6개다. 일반적으로, 국제 혹은 지역 과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연계성이 높을수록 리더는 보다 많은 국가역할들을 인식하고 수행한다. 참고로, 이 시기 미국의 역할 수는 8개, 소련과 중국은 7개, 프랑스, 헝가리, 이라크, 루마니아, 북 베트남은 6개, 벨기에,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쿠웨이트, 영국은 5개, 북한은 2개, 남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K. J. Holsti,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4*(3) (1970), p. 284.

다양한 역할 이론가들은 '중재자', '초보자', '지도자' 와 같은 다양한 역할과 더불어, '공격자', '추종자'와 같은 상대적 역할들도 제안해오고 있다. 유동원, "역할이론의 발전과 국제관계," 『국제정치논총』, 57(3) (2017), pp. 7-49.

[82] 【그림 2-3】의 국가 역할 분류에는 이해관계와 권력관계를 포함하지만 이념관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권력관계를 강약에 따라 나누지만, 본 연구는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로 나눈다.

Binnendijk 와 Kugler 의 미국 안보전략에 대한 분석 틀인 【표 2-1】은 미국의 네가지 역할들을 보여준다.[83] Malici 와 Walker 는 힘(권력관계)과 이해관계로 구분했던데 비해, Binnendijk 와 Kugler 는 역할 구분의 기준들로 '힘의 수단(권력관계; 소프트파워와 군사력)'과 '동기(이해관계와 이념관계; 힘의 균형과 민주주의확산)'를 선택했다.[84]

【표 2-1】미국의 안보전략 실현을 위한 네가지 역할

수단	동기(Motivation)	
	민주주의 확산	힘의 균형
군사력	Assertive Interventionist [강경한 개입주의자]	Traditional Conservative [전통적 보수주의자]
소프트파워	Progressive Multilateralist [진보적 다자주의자]	Offshore Balancer [역 외 균형자]

※출처: Hans Binnendijk, Richard L. Kugler, Seeing the Elephant: The U.S. Role in Global Security,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06, p. 162.

[83] Hans Binnendijk, Richard L. Kugler 에 의한 국가역할의 분류 기준인 힘과 동기로 나누었듯이, Akan Malici, Stephen G. Walker도 이해관계와 힘의 균형에 따라 클라이언트(Client), 파트너(Partner), 후원자(Patron), 반항아(Rebel), 라이벌(Rival), 패권국(Hegemon)의 여섯가지 국가역할을 제시했다.

[84] 힘의 종류를 바꾸거나, 동기를 수정 혹은 확장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은 변경 혹은 추가된다. 즉, '강경한 개입자주의자'는 '진보적 다자주의자' 또는 '전통적 보수주의자'가 될 수 있다. Hans Binnendijk, Richard L. Kugler, *Seeing the Elephant: The U.S. Role in Global Security*,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06), p. 162.

【표 2-2】의 Michael 이 제안한 미국의 전략적가치들은 ‘안보(Security)’, ‘번영(Prosperity)’, ‘가치 (Value)’의 세가지로 분류된다. 이러한 전략적가치는 미국의 국가역할을 결정하는 동기 혹은 ‘근본 요소’에 해당한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는 국가이익과 연동된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나열한다. Obama NSS 상의 전략적 가치들은 ‘안보(Security)’, ‘번영(Prosperity)’, ‘가치(Value)’, ‘국제질서 (International Order)’ 로 구분되는데 Michael 이 제안한 전략적 가치에 ‘국제질서’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85]

【표 2-2】미국의 전략적 가치, 1945-2014

안보	번영	가치
미국 시민과 영토 보호, 강대국 라이벌 부상봉쇄, 대량 파괴무기 확산방지	자원 접근 유지, 이동 경로 접근 유지, 시장 접근 유지	민주주의 증진, 자본주의 증진, 대량 학살 방지

※출처: Beckley, Michael. “The Myth of Entangling Alliances: Reassessing the Security Risks of U.S. Defense Pac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4, 2015, pp. 7–48.

본 연구는 Binnendijk 와 Kugler 의 실현 수단에 대한 구분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과 Obama NSS 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분류(‘가치’, ‘안보’,

[85] NATIONAL SECURITY STRATEGY,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검색일: 2024년 05월 13일).

‘관계(국제질서에 해당)’, ‘번영’)를 적용하여, 미국의 국가 역할을 【표 2-3】과 같이 분류했다. 이를 보수 추출을 위한 역할 분석의 툴로 활용한다.[86]

【표 2-3】미국의 역할들[87]

전략적가치	외교 수단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가치	양육자 [Carer]	교도관 [Correctional Officer]
안보	균형자 [Balancer]	패권국 [Hegemon]

[86] 각 측면의 역할은 다른 측면의 역할에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 관계 측면의 역할은 가치, 안보, 번영 측면의 역할들을 강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87] Holsti는 국가의 역할을 추출하기 위해, 외교정책과 역할 신념을 반영하는 탑 레벨 정책결정자에 의한 보통의 진술을 사용했다. K. J. Holsti,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4*(3) (1970), p. 256.

【표 2-3】에서 사용된 역할 명은 해당 위상에서 발현 가능한 대표적 역할을 표시한다. Malici와 Walker (2017)의 용어(미국은 패권국, 파트너, 라이벌 명칭, 동맹은 클라이언트, 북한은 반항아)와, K. J. Holsti(1970)의 용어(균형자)를 빌렸다. 용어를 차용했을 뿐, 역할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Akan Malici, Stephen G. Walker 의 역할분류와 달라 부족한 부분(양육자, 교도관, 설계자, 혁명가)은 필자가 새로 제안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국가의 역할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해왔다. Yasemin Akbaba, Özgür Özdamar는 국가의 역할들을 결정하는 원인들로 국내(domestic) 수준과 지역(regional) 수준 그리고, 관념적(ideational)인 것과 유물적(material)인 것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Yasemin Akbaba, Özgür Özdamar. *Role Theory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olitics, Economics and Identity* (New York: Routledge, 2019), p. 117-125.

번영	설계자 [Designer]	혁명가 [Revolutionary]
관계	파트너 [Partner]	라이벌 [Rival]

※필자 작성

【표 2-3】과 같은 미국의 국가역할 실현에 대한 근거는 다양하다. [88] 가치 측면에서, 미국은 옹호가치, 법제도, 신념을 실현할 때, 외교나 문화정책과 같은 소프트파워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양육자' [89] 역할과 함께 막후의 정치공작, 심지어 전쟁과 같은 하드파워 차원의 '교도관' [90] 역할을 활용하기도

[88] 국가의 '역할 집합(role-sets)'은 다수의 역할들을 포함하며, 제도와 권력의 분배관계를 반영한다. Sebastian Harnish, Cornelia Frank, and Hanns W. Maull (eds*). Introduction. In Role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pproaches and Analyses* (Oxon: Routledge 2011), p. 7.

[89] 바이든 행정부의 NSS에서 공공재, 공동과제에 대한 대응전략 즉, COVID-19 등 전염병, 기후변화, 식량불안, 테러리즘,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대응, 자유와 존엄성 추구를 위한 국제연대 등도 양육자의 역할에 속한다. (필자)

미국은 '세계 양육자'로서, 세계공공재를 공급하는 관대한 행위를 했다. 미국의 가장 관대한 모습은 이상과 이익이 일치할 때 목격되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유강은 역, 『기로에 선 미국』(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p. 148.

[90] 미국은 세계정치의 집단적 의사결정기관이 허약하므로 미국이 선 행동 후 승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Paul D. Wolfowitz, "Clinton's First Year," Foreign Affairs 73, no. 1(1994): p. 28~43. 여기서 행동은 하드파워적 조치를 말하기 때문에 교도관으로서의 역할에 해당한다.

미국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압력, 강제와 일방적 행동 방식을 적용 가능하다. 주평, 이상원 역, 『국제관계인론과 동아시아안보』 (성남: 북코리아, 2014), pp. 143-144.

한다. 핵확산방지 측면에서는 교도관과 양육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91] 또한, 겉으로는 양육자의 역할을 표명했지만, 미국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은 교도관이었던 사례도 있다.[92] 안보는 군사적 수단 외에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리더십 등을 통해 달성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균형자'의 역할이다.[93] 그러나, 북한과의 양자회담 거부, ABM(Anti-Ballistic Missile) 조약 무효화, 유엔안보리 승인이 없었던 이라크 전쟁과 같이, 미국은 때때로 테러행위를 지지하는 모든 국가들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국제법이나 국제레짐을 무시하기도

---

[91] 미국은 핵확산 시도 국가에 대해 군사적위협과 경제제재라는 강압수단과 함께, 협상을 통해 경제보상, 제재해제와 안전보장을 제공함으로써 핵폐기를 유도한다. 권영일, "핵 협상에서 이행 가능한 타협의 조건－원칙의 양보와 책임의 정당화," 『통일연구』, 27(2) ,(2023), pp. 43-89.

1985년, 채택된 프레슬러 개정안(Pressler Amendment)은 파키스탄이 조립된 핵폭발장치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통령이 매해 증명한다는 조건아래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계속된다고 명시했다. Mitchell Reiss, Bridled Ambition: *Why Countries Constrain Their Nuclear Capabilities*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1995), p. 186.

[92]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의 후세인을 후원할 때는 민주주의나 자유라는 말을 일체 꺼내지 않다가, 이라크 침공의 이유인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자 이라크의 문제를 민주주의와 자유로 옮겼다. 김동춘,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파주: 창비, 2005), p. 93-4.

[93] 말하자면, George F. Kennan이 "보편주의(universalism)"라 칭했던 접근법으로 "모든 국가들을 설득하여 특정한 행동 규약을 지키도록 하면 추악한 현실(국가적 편견, 권력욕, 비이성적 증오와 시기)은 법적 제약이라는 보호막 뒤로 감춰지게 된다. 또한, ・・・외교정책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의회절차와 다수결 결정과 같은 익숙한 용어로 단순화된다." 즉, 보편주의는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을 통한 해결을 추구하는데, 이 방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안보보다는 국제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우선시해야 한다. 존 루이스 개디스, 홍지수・강규형 역,『미국의 봉쇄전략』 (서울: 비봉출판사, 2017), p. 57-58.

한다.[94] 2022 년 발간된 미국의 핵태세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들에게 핵공격을 할 경우 '정권 종말(the end of regime)'로 이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95] 이것이 적대국에 대한 '패권국'의 역할이며, 또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번영 측면에서, 새로운 틀을 통해 미국 중심의 번영 구조를 만들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설계자'[96]와 미국 외의 질서를 거부하고 변경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혁명가'[97]의 역할을 맡는다. 관계 측면에서, 상호 원조를 바탕으로 하는 '파트너'의 역할과[98]

---

[94] 박홍석, "북한위협론과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재검토," 『21세기정치학회보』, 15(2),(2005), pp. 144-162. SALTI I, SALTI II(제2차 미소 전략무기제한협정), START(전략무기감축협상) 등의 미국이 수행한 소프트파워 차원의 군축 및 군비통제노력이나 핵확산금지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 국제 원자력기구 및 기타 유엔기구 강화'는 소프트파워 차원의 역할 즉, '균형자'에 해당한다. 반면, 소련, 중국과 같은 적성국들에 대한 봉쇄를 위해 NATO, QUAD, AUKUS 등의 다양한 동맹을 활용하는데 이는 하드파워 차원의 '패권국'의 역할에 해당한다.

[95] 이성훈, "2022 미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주요 내용 분석과 함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406호(2022), p. 3.

[96] 미국의 '설계자' 역할로 GATT, IMF, 세계은행 창설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위치는 지배적이었고, 미국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실현될 수 없었다. 세계를 성장시키고 통합하는 모든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앤 크루거(Anne Krueger). "미국의 경제・정치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16.9 (2016), pp. 88-121.

[97] 미국의 '혁명가'의 역할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즉, 미국은 기존의 CPTPP나 RCEP에 참여하기보다는 IPEF란 다른 틀을 통해 무역, 공급망 안정, 탈탄소 청정에너지, 인프라 협력,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어젠다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려 한다. 유인태,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과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 『패권의 미래-미중전략경쟁과 새로운 국제질서』(파주: 21세기북스, 2022), p. 205.

[98] '관계' 차원은 다른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동맹의 역할은 '파트너'에 속한다. 동맹의 '파트너' 역할은 안보측면을 강화하지만, '번영'측면에서는

적대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라이벌'의 역할로 나뉜다.[99] 관계 측면의 역할들은 다른 측면의 역할들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부수적인 측면도 있다. 패권국은 압도적인 물리력뿐만 아니라 지식, 생산, 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전용 가능한 힘을 바탕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국제 체계의 변화를 추진 혹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100] 패권국일수록 상대국가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집합(role set)은 유연하고 다양하고 안정적이다.[101]

3. 미국의 핵 관련, 이해관계

역할은 타국의 기대에 의해 결정되는가 하면, 자국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Guimarães 도 행위자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역할들을 선택한다고 했다.[102] 한편, Cottrell 은 역할이 지배적 목표 달성을 저해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다른 역할로 전환된다고 했다.[103]

'라이벌'역할이 대두될 수 있다.

[99] 미국은 냉전이 끝난 후, 성장한 경제력때문에 일본조차도 최대 위협으로 간주했다. 마고사키 우케루, 양기호 역,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서울: 메디치미디어, 2008), pp. 317-8.

[100] 백창재, 『미국패권연구』(고양: 인간사랑, 2009), p. 118.

[101] 비대칭동맹은 상호교환하는 것도 대칭동맹과 다르다. 즉, 강대국은 안보를 제공하고, 약소국은 강대국의 말을 따르는 즉, 자율성을 포기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박휘락, 『북핵 외통수-비핵화에서 핵균형으로』 (서울: 북코리아, 2022), p. 114-9.

[102] Feliciano de Sá Guimarães, *A Theory of Master Role Transition: Small Powers Shaping Regional Hegemons (Role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Routledge, 2021), p. 14.

[103] Cottrell, Leonard, 1942 "The adjustment of the individual to his age and sex roles." *U.S.A.n*

Malici 와 Walker 의 앞선 논의와 같이, 역할 분석을 통해 역할 수행자에 해당하는 게임 플레이어의 보수를 찾을 수 있다. 거꾸로, Brams 는 제안한 TOM(Theory of Moves) 에서 게임의 보수 매트릭스 내에서 플레이어가 선택한 자신과 타자 간의 전략의 교환 과정을 곧, '역할 만들기(role-making)' 또는 '역할 받아들이기(role-taking)'라고 하였다. [104] 즉, 역할을 통해 게임 전략과 보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게임을 통해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105]

【표 2-4】는 미국의 권력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역할들을 기준으로 한, 북핵 용인 관련 보수들이다. 이는 제 3 장에서 북핵 용인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게임 보수가 된다. 그런데, '가치' 관련 보수는 북한 민주화나 인권의 개선과 같이 미국적 이념 실현에 의한 이익이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가치' 관련 보수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의 영역이며 실제로도 '동맹의 핵무장 가능성'과 더불어 북핵 용인 협상에서 근저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Sociological Review 7 (October): 617-6

[104] 스티븐은 게임 플레이어들이 번갈아 전략을 선택하는 순차형 게임을 모델링한 TOM(Theory of Moves)을 제안했다. Brams. S. 1994. *Theory of Mo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TOM은 자국과 타국간에 합의(settlement), 제압(domination), 굴복(submission), 교착(deadlock)이라는 네가지 전략적 상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Akan Malici, Stephen G. Walker, *Role Theory and Role Conflict in U.S-Iran Relations: Enemies of Our Own Making*, (New York: Routledge, 2017), p. 17.

[105] 게임보수는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힘의 분배관계'에 대응한다. '역할 만들기'는 게임의 보수에 해당하는 '목표'를 향한 '전략의 선택과 교환' 과정에 해당한다. 게임보수는 역할을 결정하므로 보수의 변경은 역할 변경의 동기가 된다. 게임의 균형은 플레이어들이 '선호하는 역할들의 집합'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하나의 숫자 혹은 식으로 표현되는 게임의 보수로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 4 장에서 Breuning 의 모델을 활용하여 '가치' 영역의 북핵 용인 동기들을 재발굴한다.

【표 2-4】국가 역할에 기초한 미국의 북핵관련 이해관계

역할		이익	손실
가치	양육자	핵확산방지 리더십유지[106]	북핵위협 국내외정치적 손실
	교도관	핵확산방지 리더십유지	북핵위협 국내외정치적 손실
안보	균형자	핵보유희망국의 전략적가치 핵확산방지 리더십유지	북핵위협 국내외정치적 손실 동맹방기 협상거절로 인한 거래비용
	패권국	핵보유희망국의 전략적가치 핵확산방지 리더십유지	북핵위협 국내외정치적 손실 동맹방기
번영	설계자	핵보유희망국의 전략적가치 핵확산방지 리더십유지	북핵위협 동맹방기

106 미국과 인도 간의 핵협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 비확산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NPT를 훼손시킨다는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 연정례・김일수, "인도의 핵확산과 미국-인도 안보협력," 『국제정치연구』, 24(3) (2021). p. 96.

	혁명가	핵보유희망국의 전략적가치 핵확산방지 리더십유지	북핵위협 동맹방기
관계	파트너	핵보유희망국의 전략적가치 핵확산방지 리더십유지	국내외정치적 손실 동맹방기
	라이벌	-	북핵위협

※필자 작성

미국은 '핵확산방지 리더십'을 통해 미국적 가치 실현, 안보는 물론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질서를 안정화하는 측면에서 번영과 관계 측면도 개선한다.[107] '북한이 제공가능한 전략적가치'들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된 북핵 통제와 중러를 견제하는 세력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108]

---

[107] 미국이 2 차 핵시대를 관리할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2 차 핵시대가 미국을 관리할 것이다. 아직 2 차 핵시대의 역학관계를 알지 못하며 관리방법도 단언할 수 없다. 폴 브래큰, ,이시은 역, 『제 2 차 핵 시대』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pp. 321-322.

[108] 2021년 3월 16일, Eric Brewer 와 Sue Mi Terry는 국제문제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iars)'에서 '실질적인 거래'라는 전략을 제안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는 잠정적으로 용인하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장거리 고체연료 미사일,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 대륙간탄도미사일 탄두의 개발·실험·생산·배치)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라는 것이다. 마이클 그린, "미국이 북핵 보유 일단 용인할 수도", 『중앙일보』, 2021년 04월 09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31365#home (검색일: 2023년 09월 02일).

2차 핵시대에 핵확산 국가들은 강대국간 핵전쟁 위협을 줄인 정교한 안전장치, 지휘통제체계 또는 각종 위성 능력 등이 부재하기에 오사용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보미, 『2차 핵시대 미국의 비확산 정책: 파키스탄・이란・ 북한을 중심으로』(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p. 16.

‘북핵 위협’은 미국의 모든 역할 영역에 손실을 주지만 특히, 미 본토 직접 공격능력, 핵기술, 핵무기, 핵물질의 테러집단으로의 이전을 포함하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대한 손실을 야기하며 따라서, 미국이 대북 협상 제의를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109] 이외에도 ‘국내 정치적 손실’은 북핵 용인 과정에서 여론 분열, 정치 불안, 개별 정당의 정권 이양 등의 손실이다. ‘국외 정치적 손실’은 핵확산방지 리더십 훼손이나 국외의 반대세력과의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다.‘동맹방기’는 동맹이 핵무장을 통해 안보 주권을 획득함으로써 초래하는 손실이다. ‘핵보유희망국이 제공가능한 전략적가치’는 북미간 협상에서 합의될 ‘양보 수준’에 비례한다. ‘협상거절로 인한 거래비용’은 북한의 협상거절로 협상조건이 불리해짐으로써 얻는 손실이다.

미국은 9.11 이후,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의 결합을 구소련을 초월하는 근본 위협으로 규정했다. 신성호, “1·2차 북핵위기와 미국의 대북정책”,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파주: 한울, 2008), p. 172.

[109] 바이든의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 와 2022년 NPR(Nuclear Posture Review)를 기준으로, 핵확산금지조약 및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 강화, 군비통제노력과 같이 자유주의에 가까운 소프트파워 차원의 접근은 자율적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를 통한 WMD(대량파괴 무기)의 확산 방지, 핵확산금지조약 및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 강화를 포함하고, 현실주의에 가까운 하드파워 차원의 접근에는 군을 통한 억지력 강화를 포함한다.

제 2 절 핵보유희망국의 핵 보유 셈법과 이해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에서 '생존'은 최소한의 조건이다.[110] 북한은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국가로 미국을 꼽는다.[111] 북핵을 용인해야 하는 국가가 북한의 최대 위협국인 조건은 인도나 파키스탄과는 다른 경우에 속한다.

1. 중소국의 전략

중소국의 사활은 강대국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냉전체제 동안, 중소국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힘의 균형 속에서 평화를 유지했다. 【표 2-5】는 안보 위협 속에서 중소국이 가지는 선택지들이다.

---

[110] Morgenthau, H, "Another 'Great Debate:'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U.S.A.n Political Science Review* 46(1952), pp. 961-88.

김정은은 2024년 1월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방위력,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명실공히 전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공화국 령내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국사에 대한 옳은 판정을 가지고 군력 강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가장 질높게 보장하는 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로동신문』, 2024년 1월 16일.

[111] 2021년 10월11일, 김정은위원장은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 고 말했다. 또, "미국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산생시키고 있다"고 하며, "명백한 것은 조선반도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되어있다 "고 했다. 『로동신문』, 2021년 10월12일.

【표 2-5】안보위협에 대한 중소국의 선택[112]

<table>
<tr><td colspan="4">안보위협에 대한 중소국의 선택</td></tr>
<tr><td colspan="3">대응 포기</td><td>숨기/중립/고립</td></tr>
<tr><td rowspan="8">대응</td><td colspan="2" rowspan="3">위협국(강대국)의
요구 수용</td><td>편승</td></tr>
<tr><td>특화</td></tr>
<tr><td>유화</td></tr>
<tr><td rowspan="5">위협국(강대국)의
요구 불수용</td><td rowspan="3">관여정책</td><td>제도</td></tr>
<tr><td>경제적 상호의존</td></tr>
<tr><td>사회화[113]</td></tr>
<tr><td rowspan="2">세력균형</td><td>내적균세</td></tr>
<tr><td>외적균세</td></tr>
<tr><td>국제기구/제도활용</td><td>초월</td></tr>
</table>

※조동준,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중소국의 선택”, 『안보위협과 중소국의 선택』(서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9), p. 20.

---

[112] ‘숨기 ’는 강대국의 위협을 무시하고, ‘편승 ’은 강대국이나 안보위협국의 보호를 통해 안보를 유지한다. ‘특화 ’는 특정국가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유화 ’는 위협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위협을 줄인다. ‘관여정책’은 경제교류, 인적교류, 학술교류, 국제협력을 통해 안보위협국의 위협이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한다. ‘내적균세’는 국내자원, 새로운 정치/군사기법의 모방, 혁신 추구를, ‘외적균세’는 외부도움을 활용한다. ‘초월 ’은 국제기구나 국제규범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제도를 활용한 관여정책과 유사하지만, 안보위협국과 직접 상호작용하기보다 안보위협국을 상대로 제3자와 협력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동준,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중소국의 선택”, 『안보위협과 중소국의 선택』(서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9), p. 19-22.

[113] Martha Finnemore와 Kathryn Sikkink는 ‘사회화를 “국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여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기제 ”로 정의한다. Martha Finnemore and Kathryn Sikkink,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4 (1998), p. 902.

강대국의 위협에 무대응하기로 했다면 위협국과 접촉을 줄이는 정책들('숨기', '중립'과 '고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립국 선언 등의 방법을 통해 약소국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해도 강대국이 해당 국가를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 생존 보장은 어려워진다.[114] 여기서, 동맹의 전략은 다른 국가와 동맹을 형성하는 '균형' 과 위협의 원인이 되는 국가와 동맹을 맺는 '편승'으로 나뉜다. [115] 이것은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서, 자체의 군비증강과 같은 '내적균세'와 동맹체결과 같은 '외적균세'를 통해 균형을 달성하려 한다. 한편으로 북한은 그것이 기만이든 아니든 논란은 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강대국의 요구에 대해 부분적 '요구수용'을 채택하기도 했다. [116]

2. 북한의 역할과 핵 보유 후의 역할 변화

가. 북한의 국가 역할

불균형 동맹관계 등 종속적 입장에 처한 국가일수록 국가 역할의 수와 다양성은 줄어들며 수동적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또한, 권위주의 국가일수록 리더의 의지가 국가의 역할을 결정한다. 김정은은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

[114] 김신규, 『약소국의 국제정치』(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8), p. 78.

[115] 남한은 1953년에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북한은 1961년에 '우호, 협조 와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소련 및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체결했다.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불편한 동거의 역사』(서울: 오름, 2009), p. 14.

[116] 북한이 추진해온 모든 합의 내용이나 대화는 핵무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이었다. 박휘락, 『북핵 외통수-비핵화에서 핵균형으로』(서울: 북코리아, 2022), p. 202.

대내적으로 자신의 요구와 선호에 따라 리더십을 행사해 왔다.[117]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김정은의 현지지도나 대외 활동은 북한의 주요 역할을 짐작하게 한다.[118] 북한의 힘(power)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제정치 환경 속, 북한의 역할을 【표 2-6】과 같이 제시한다.

【표 2-6】북한의 역할들[119]

전략적가치	외교 수단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가치	신념수호자 (Defender of the faith)	수행에 한계 있음
안보	독립인 (Independent)	반항아 (Rebel)

[117] 박정하. “북한 역대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 특성 연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18] 최근 1년간 김정은의 현지지도와 대외활동은 다음과 같다. 직접적인 핵 관련 활동은 없는 대신, 안보와 경제 분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대북 협상에서도 두 분야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또한, 안보 분야를 제외한다면 하드파워 차원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로동신문』 2023년 5월 15일 ~2024년5월14일, 1년간 1면 분석, 필자작성)

【표 2-7】김정은의 현지지도와 대외활동

국방/군대/ 군수산업	정치활동	경제	ICBM/SLBM 위성/방사포	외교	기타(대회, 공연, 참배)
19	8	14	11	4	9

※필자 작성

[119] 반항아, 파트너, 라이벌은 Akan Malici, Stephen G. Walker (2017)의 용어를, 독립인, 외톨이, 신념수호자는 K. J. Holsti의 용어를 빌렸다.

번영	외톨이 (Isolate)	수행에 한계 있음
관계	(중・러에 대해) 파트너(Partner)	(한・미・일에 대해) 라이벌(Rival)

※필자 작성

가치 측면에서, 국가 구성원들이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구심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념수호자'의 역할을 볼 수 있다. 이 역할은 대내적으로 생존의 도구이자 존재의 이유였으며, 대외 정책의 기준점이기도 하다. 이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미국, 한국,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념과 사상은 핵용인 양상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퇴장한 국제지형이나 북한의 국력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다른 국가에 자국의 이념을 강압적으로(하드파워 차원에서) 전파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안보는 예외에 속한다. .[120] 안보 측면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소프트파워와 더불어 하드파워 차원의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12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인 김여정은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교환하지

[120] 엡스타인은 핵개발 동기를 군사안보, 정치적 위신, 경제적 이익으로 분류하였다. Williams Epstein, "Why States Go-And Don't Go-Nuclear,"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No.430 (March 1977), pp.16-28; 세이건은 핵개발 동기를 안보모델, 국내정치모델, 규범모델로 구분했다. Scott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21, No.3 (Winter 1996/1997).

[121] 북한이 NPT에 가입한 것도 소련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준호, 『핵무기와 국제정치』(파주: 열린책들, 2011), p 242.

않겠다"고 했다.[122] 북한은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독립인'과 같이 비동맹 자주국가(쁠럭 불가담)의 역할을 고수했지만,[123] 특히 핵개발이나 다양한 강도의 도발을 통해 '반항아(Rebel)' 와 같은 하드파워 측면의 역할에도 소홀하지 않았다.[124] 번영 측면에서 북한은 다양한 제재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외톨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125] 관계 측면에서 북한은 신냉전을 맞아 전통적 우호관계였던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함으로써 '파트너' 역할을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해 도발로 대응하는 것은 '라이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126]

---

[122]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조선중앙통신』, 2022년 8월 19일.

[123] 김정일은 김일성의 '비동맹 운동' 인 쁠럭 불가담을 이어받은 것은 세습 초기 권력의 안정화를 위해 반미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4] 헌법의 명기처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대외관계를 추구하는 북한은, 열위의 비대칭적 국제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구갑우,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 『현대북한연구』, 27(1) (2024), pp. 9-53.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우리 당의 립장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3.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125] 개번 맥코맥, 박성준 역,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 (서울: 이카루스미디어, 2006), p. 54.

[126] 남아시아의 라이벌 관계는 한반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도와 양 파키스탄 간의 복잡한 갈등 및 협력의 삼각관계가 냉전 시기에 세 강대국들의 개입을 불러 미-중-파 vs. 인-소-동파의 대립관계를 야기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미-인 대 중-파(-러)대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김태형, "냉전기 인도-파키스탄 숙적(rival)관계 발전과 미국의 역할: 3차 인도-

나. 핵무장 (특히, 2022 년) 이후, 역할 변화

2013 년 4 월 1 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에 비해 2022 년 9 월 8 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127]의 핵무기 사용원칙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모호해졌다. 이러한 광범위한 전략적 모호성은 재래식 무기의 상대적 열세를 보완함으로써[128] 안보이익을 최대화하고 향후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 중심의 패권적 국제 질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반항아'적 의지를 분명히 하며, 핵을 통해 강대국들이 취하는 전면적 균형 정책을 선택했다. [129] 2016 년 7 월 성명에서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5 대

파키스탄 전쟁과 닉슨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1) (2022), pp. 31-60.

[127] 이 법령은 김 위원장이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연설에서 언급한 '국가근본이익' 이란 모호했던 표현이 이번에 채택한 법령에서 선명해졌으며, 핵무기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는 공식선언을 한 것이다. 핵무력의 사명, 사용원칙, 지휘통제, 사용조건 등 핵무력과 관련한 11개 항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핵무력법 제정은 2006년의 7차 당대회 결정서에서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128] 북한의 경제와 핵무력 건설병진노선은 재래식 군비의 절감, 군수공업부문이 민간 부문을 지원하는 군민융합, 군사분야의 민수전환을 통해 선군정치에서 선경정치로 전환하고 있다. 정욱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파주: 서해문집, 2023), pp. 145-155.

[129] 인도의 핵개발 촉진 이유도 세이건의 안보모델, 국내정치모델, 규범모델로도 설명할 수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위협은 안보모델로, 국내 정치적 입지의 강화의 필요성은 국내정치모델로, 인도가 핵무기를 근대성의 한 방편으로 인식하고, 아시아 대륙에서 우세한 지위와 위신, 비동맹 세력의 리더국이 되고자 한 점에서 규범모델로 핵무기를

조건’을 제시했다. [130] 첫째, 한국 내 미국 핵무기 공개, 둘째, 한국 내 미국 핵무기와 기지 철폐검증 셋째, 한반도와 인근지역으로 미국 핵무기 반입 금지 넷째, 대북 핵무기 사용 및 위협 금지 약속 다섯째,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북한의 ‘비핵화 조건’ 은 비핵화 의지와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이다. 핵보유를 통해 강화된 북한이 가지는 안보 측면의 역할은 다른 역할의 변화와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자신뿐 아니라, 미국이나 미 동맹과 같은 관련국들의 역할 변화도 요구할 수 있다.

3. 북한의 핵 관련, 이해관계

북한의 역할들에 기초한 이해관계는 【표 2-8】과 같다. 3 장에서 게임을 통해 미국의 북핵 용인이 어떤 조건에서 합의될 수 있는지를 찾는다.

【표 2-8】국가 역할에 기초한 북한의 핵관련 이해관계

역할		이익	손실
가치	신념수호자	핵 보유로 인한 이익	-
	-	-	-
안보	독립인	핵 보유로 인한 이익 핵 우월지위	미 본토 공격 불가로 인한 손실

모색했음을 알 수 있다. 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ere Models in Search of the Bomb,” *International Security*,21:3(1996-7), P.55.

[130]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6년7월6일.

	반항아	핵 보유로 인한 이익 핵 우월지위	미 본토 공격 불가로 인한 손실
번영	외톨이	경제 개방	경제 제재
	-	-	-
관계	파트너	경제 개방	-
	라이벌	핵 보유로 인한 이익 핵 우월지위	미 본토 공격 불가로 인한 손실

※필자 작성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한 이익'은 다음을 포함한다.[131] 첫째, 안보 강화 둘째, 미국 과의 핵통제 협상 과정에서 보상측면 또는 국방예산 절감 효과) 셋째, 주민 결속이나 주민동원 효과[132] 넷째, 국가정체성이나 국가위상에서 긍정적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핵 우월 지위로 인한 이익'과 '미 본토 공격불가로 인한 손실'은 안보 관련 역할과 더불어 '라이벌' 역할의 수행과 관련이 있다. 특히,

[131] 인도 핵개발의 동기(국가 안보, 국가 위신, 국내정치적 문제의 해소, 그 밖의 경제적, 외교적 이유 등)에서도 같은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 김희수・신진. "인도의 핵무장 촉진요인 상호작용에 관한 함의." 『군사연구』, 148 (2019), pp. 259-289.

[132] 내부결집 및 동원효과는 북한에서도 핵무기 개발을 위한 주요 동인이 되었다. 이창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정치: 핵개발 동향 및 동기와 전망." 『인문사회』, 21 7.6 (2016), pp. 1049-1069. P. 1060.

인도도 마찬가지였다. 1998년, 새총리가 된 아탈 바지파이(Atal Vajpayee)는 선거 운동에서 중국과 파키스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를 주장했다. 기정사실이 된 핵무기 개발은 외부적 목적과 더불어 내부적 목적에 활용하기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본토 공격불가로 인한 손실’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 능력을 상실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북한 응징 보복이 자유로우므로 동맹에 대한 미국 핵우산 효과가 증대된다는 측면의 손실이다. ‘경제 제재’는 북한이 핵 협상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받는 경제적 손실이며, 북한의 이익과 손실 중에서, ‘경제 개방으로 인한 이익’만 북미 협상에서 합의된 양국의 ‘양보 수준’에 비례한다.

제 3 절 동맹의 북핵 대응, 역할, 그리고 이해

북핵 용인이 동맹에 끼치는 영향과 반대로 동맹이 북핵 용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표가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북핵 용인 양상과 전개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북핵 용인과 동맹에 대한 영향

【표 2-9】는 Philipp C. Bleek 의 핵확산 연표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인접에는 핵 보유를 추가로 희망하는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북한 인접에는 핵 보유를 모색 혹은 추진했던 미국의 동맹국들 즉, 한국, 일본, 대만이 존재한다. 여기서 북한이 아무리 미국에게 지대한 전략적가치를 제공한다 해도 인도나 파키스탄 수준의 핵용인을 달성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표 2-9】 필립 블리그의 핵확산 연표

국가	모색	추진	확보
미국	1939-	1942-	1945-
러시아	1942-	1943-	1949-
영국	1940-	1941-	1952-
프랑스	1945-	1954-	1960-
중국	1952-	1955-	1964-
이스라엘	1949-	1955-	1967-
남아공화국	1969-91	1974-91	1979-91
파키스탄	1972-	1972-	1987-
인도	1948-	1964-66, 72-75, 80-	1987-
북한	1962-	1980-	2006-
유고슬라비아	1949-62, 74-87	1953-62, 82-87	
한국	**1969-81**	**1970-81**	
리비아	1970-2003	1970-2003	
브라질	1966-90	1975-90	
이라크	1975-91	1981-91	
이란	1974-79, 84-	1989-	
시리아	2000-	2002-07	
독일	1939-45		
일본	**1941-45, 67-72**		
스위스	1945-69		
스웨덴	1945-70		
노르웨이	1947-62		
이집트	1955-80		
이탈리아	1955-58		
호주	1956-73		
서독	1957-58		
인도네시아	1964-67		
대만	**1967-76, 87-88**		

루마니아	1978-89		
아르헨티나	1978-90		
알제리	1983-91		

※출처: Philipp C. Bleek, “When Did (and Didn‘t) States Proliferate? Chronicling the Spread of Nuclear Weapon,” (2017)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성공하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은 낮아져 미국은 동맹으로부터 방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ICBM, SLBM 에 이어 SSBN(핵 잠수함)까지 개발하면, 미국은 자국에 대한 북핵 공격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한국 포기의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33] 북핵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체로 이견을 좁혀 협력을 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기와 연루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북미 간 북핵 용인 협상 내용이 동맹의 방기 위험을 촉진시키지 말아야 하며 아니면, 북한이 미국에게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의 수준 혹은 성격이 동맹으로부터의 방기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134]

---

[133] 박휘락, 『북핵 외통수-비핵화에서 핵균형으로』(서울: 북코리아, 2022), pp. 291-292.

[134] 이것은 동맹의 핵무장이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면 미국은 동맹의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동맹을 버리고 새로운 동맹의 핵용인을 추진할 정도로 세력균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면, 기존 동맹의 핵용인은 그 보다 먼저 고려되었을 수도 있다. (필자)

미 행정부는 일부 국가들에 대해 핵확산을 허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카터 행정부는 1979년 후반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파키스탄 지원을 위해 제재를 해제할 방법을 찾았다. 김보미, 『2차 핵시대 미국의 비확산 정책: 파키스탄・이란・북한을 중심으로』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p. 31.

2. 동맹의 역할과 역할변화

새로운 미중 관계와 같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차원의 국가능력 변동은 한반도에 미치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도 변화시킨다.[135] 동맹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변수가 '신뢰' 보다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때, 미국은 한국 안보의 수단이며 한국도 미국 안보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36] '주한미군'이 '핵우산'에 버금가는 북핵 억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북핵 공격에 대한 대응수단일 뿐 아니라, '주한미군'이 받는 피해는 핵보복의 주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즉, 주한미군은 북핵에 대한 핵억지와 동시에 남한 핵개발에 대한 억제 수단이기도 하다.[137]

안보와 관련하여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되는 것은 없으며, 그것은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일본,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138] 2022 년

---

[135] 박건영,『한반도의 국제정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서울: 오름, 1999), p 23.

[136] 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동맹에 대해 전통적 우의니 혈맹이니 하는 수사는 애초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상호 지지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는 수준이며 그것이 동맹정치의 본질적 출발점이다.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불편한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pp. 377-378.

[137] 6.25 전쟁시기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을 미국은 억제해야 했다. 주한미군의 초기 정체성은 북한 억지와 더불어 남한의 억제 측면도 동시에 포함했다. 박봉규, "북미 관계 개선과 주한미군," 『한국동북아논총』, *23*(3) (2018), pp. 201-217.

[138] 한국은 한반도가 핵시대에 진입했음을 인지하고 군의 전략과 교리, 태세와 훈련을 전면 쇄신해야 하며, 핵을 가진 북한이 선제사용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책을 찾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전성훈. 한반도 핵시대에 맞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 2023년2월27일;

발표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139]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에서 '평화국가로서 전수방위의 철저화', '비핵화 3 원칙의 견지'와 '확대 억제를 포함한 미일동맹'을 포함한다. 미국은 일본이 '역내 패권국', (중국과) '라이벌'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안보 측면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하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통해 국가안보 목표를 추구하는 보통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국제안보적 측면에서 일본과 구조적 유사성을 인식하면서[140], 일본의 안보대응 변화를 한국의 국가안보에 적극적으로 이식하거나 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패권의 약화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 측면에서 공통된 취약성을

---

https://www.kdi.re.kr/research/monNorth? pub_no=17874 (검색일: 2024년5월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고착됐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 2023년 12월 31일

윤석렬 대통령은 2023년 1월 11일, 국방부와 외교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해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핵의 자체 보유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대통령실, "尹 대통령,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관련 서면 브리핑," 2023년01월11일;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 GvCftpuP (검색일: 2023년 02월 02일).

[139] "2022년 일본 국가안보전략 전문(全文)-국문번역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https://kims.or.kr /publication/issue-focus/if-2212/ (검색일: 2023년 08월 22일).

[140] 공동의 동맹국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박영준, "군사대국의 부활 혹은 보통국가의 완성?: 일본 기시다 내각의 안보전략 3문서 공표와 '전후 안보정책의 대전환," 『일본연구논총』, 57(0) (2023), pp. 57-83.

야기한다. 만약, 일본에게 핵무장이 필요할 정도의 정세는 한국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141]

3. 동맹의 핵 관련, 이해관계

한국의 역할과 전략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동북아와 한반도에 대한 이익 분배와 생산 구조 속에서 결정된다.[142] 한국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바라는 역할과 현실적인 역할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143] 동맹의 역할도

---

[141]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즉, 미국의 핵우산으로 지켜지는 일본 국내에 (핵무기를) 두지 않는 것이 올바른 논의인가라고 문제제기하면서 역대 내각이 계승해 온 '갖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 라는 비핵3원칙의 재검토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기태, "일본의 핵무장 논의와 미일동맹 강화," 『한국일본학회 (KAJA)』, 제96회 국제학술대회(2018), pp. 303-306.

2016년 일본정부는 핵무기를 포함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실력 유지" 가 "국제분쟁의 수단으로서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포기한다는 헌법 제9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한 바가 있다. 박휘락, 『북핵 외통수-비핵화에서 핵균형으로』(서울: 북코리아, 2022), pp. 72-73.

[142] 전후의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과 함께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 유지와 함께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에 속하는 것이었다. 윤대엽,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관계: 관여-헤징의 전략모순,"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제2호, (2021), p 187.

냉전시기에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적 편승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지만, 탈냉전은 한국이 외적 균형을 확대하는 환경을 제공했다. 즉 소련의 개혁과 개방, 미국과 소련 간의 협력이라는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태우 정부는 '7·7선언'을 발표하고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했다. 윤대엽,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관계: 관여-헤징의 전략모순".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제2호(2021), p. 189.

[143] 개성공단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역할과 입장이 다름을 확연히 보여주는

마찬가지다. 【표 2-10】은 【표 2-5】미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중소국의 선택과 역할을 기초로 한 미국의 동맹국들(한국과 일본)의 역할들이다. 특히, 동맹은 핵무장 이전에는 패권국의 '추종자' 역할에서 핵무장 이후에는 '자유인'의 역할로 전환할 수 있다.[144] 나머지 역할들은 다른 중소국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표 2-10】동맹의 역할들[145]

전략적가치	외교 수단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가치 (Values)	클라이언트 (Client)	수행에 한계 있음.

사례다. 당시의 한국 정부는 개성 공단을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줄일 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는 주요한 과정이며 연습경험으로 받아들인 반면, 미국은 공단의 임금을 핵 프로그램에 전용할 수 있는 돈으로 본다. 찰스 프리처드(Charles L. 'Jack' Pritchard), Failed Diplomacy, 김연철・서보혁 역, 『실패한 외교-부시, 네오콘 그리고 북핵위기』(서울: 사계절출판사, 2008). p. 131.

[144] 전통적 동맹 형성의 이론은 '능력결집(capability aggregation)'과 '외적위협'을 전제로 하며, 동맹의 동인에 대해서는 세력균형(힘의 균형), 위협에 대한 균형, 이익균형, 대내적 정권으로 분석 수준을 낮춘 전방위 균형 이론이 있다. 동맹의 기능은 상대의 위협에 대한 '대항'이지만, 위협을 주는 국가와 동맹을 형성하는 편승도 있다. 한편으로는 안정을 해칠 정도로 열정적인 국가를 '제한'하는 관리의 수단일 수 있으며, 혹은 동맹을 통해 자국의 국제적 승인을 보장받으려 하기도 한다.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불편한 동거의 역사』(서울:오름, 2009), pp. 39-49.

[145] 클라이언트, 파트너, 라이벌은 Akan Malici, Stephen G. Walker (2017)의 용어를, 피보호인은 K. J. Holsti(1970)의 용어를 빌리고 부족한 부분(자유인, 참여자)은 필자가 새로 정의했다.

안보 (Security)	피보호인(Protectee) (핵무장 이전)[146]	자유인(Freeman) (핵무장 이후)
번영 (Prosperity)	참여자 (Participant)	수행에 한계 있음.
관계 (Relation)	파트너 (Partner)	라이벌 (Rival)

※필자 작성

【표 2-10】의 동맹들의 역할들에 기반하여 추출된 이해관계는 【표 2-11】과 같다. 3 장에서 게임을 통해 동맹의 북핵 용인에 대한 수락 조건과 동맹의 핵무장 조건[147]을 찾으며, 그 조건은 【표 2-11】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표 2-11】 국가 역할에 기초한 동맹의 핵관련 이해관계

역할		이익	손실
가치	(미국의) 클라이언트	미국 핵우산	-

[146] 대칭동맹과 달리 국력 차이가 있는 비대칭동맹은 상호 제공하는 것도 다르다. 즉, 강대국은 안보를, 약소국은 강대국의 말을 따르는 '자율성-안보 교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박휘락, 『북핵 외통수-비핵화에서 핵균형으로』(서울: 북코리아, 2022), pp. 114-115.

[147] Ashok Kapur는 인도의 핵개발을 핵에 의한 위협(안보모델), 비동맹노선에 의한 자주국방(규범모델), 국내정치적 이유(국내정치모델)로 설명한다. Kapur, Ashok, *India's Nuclear Option: Atomic Diplomacy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6) 한국과 일본에 안보모델을 적용할 수 있고, 국내정치적 여론도 호의적이지만, 규범모델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	-	-
안보	(미국의) 피보호인	미국 핵우산	-
	자유인	핵 보유로 인한 이익	핵개발 비용
번영	참여자	미국 핵우산	핵개발 비용 경제 제재
	-	-	-
관계	(미국과) 파트너	미국 핵우산	-
	(북한과) 라이벌	미국 핵우산 핵 보유로 인한 이익	북핵위협

※필자 작성

북핵위협으로 인한 손실 '핵보유'나 '핵우산'으로 인한 이익과 '북핵 위협'으로 인한 손실은 모든 차원과 관련된다. '핵보유'나 '핵우산'은 안보 보장(안보), 국가 위상 강화(관계), 국방비 절감(번영), 국가 정체성 강화(가치) 등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위협'도 동일한 논리로 동맹의 모든 측면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핵우산'은 동맹유지와 연계된 이익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효력은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 수준으로 북핵을 용인하기 이전까지로 가정한다.[148] 그 이유는 미국이 북핵을 인도와

[148] 핵용인을 할 정도로 우호적 북미 관계는 동맹이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했을 때,

파키스탄 수준으로 용인하게 된다면, 북한에 대한 공격이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3 장의 게임에서도 적용될 것이다. '국내정치적 이익'은 정권 유지 혹은 획득뿐만 아니라 국민 단결로 인한 이익을 포함한다.[149] '북핵 위협으로 인한 손실'은 모든 차원의 손실을 유발할 것이다. '핵개발 비용'은 개발에 필요한 비용만을 고려한다면 동맹의 경제력과 군사비 수준을 감안할 때 핵이 주는 이익에 비해 무시할만한 수준일 수 있다. 그러나, 동맹 파기로 인한 안보와 관계 악화 등 간접적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준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경제 제재'는 동맹이 핵무장 때문에 받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한 손실이다. 이 때,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은 '핵 보유로 인한 이익'과 '경제 제재 손실'에 비례하고, '북핵 위협'에 반비례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보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의심이 들게 하기 때문이다.

[149] 2012년 이후, 다수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60%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민병기, "<창간 22주년 특집-창간 기념 여론조사>"한국도 核무기 개발해야" '찬성' 62.0%, '매우 찬성' 20.5%," 『문화일보』, 2013년 11월 01일.

제 4 절 북핵 용인 관련국들의 전략

이 절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용인과 북핵 용인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북핵 용인 게임의 전략 구조를 도출한다.

1. 핵용인 사례와 관련국들의 용인 전략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 년 분할 이후, 네 번의 전쟁 (1947~1948, 1965, 1971, 1999 년)과 43 회의 군사분쟁을 일으켰다.[150] 인도는 안보를 위해 다양한 외적 균세와 내적 균세를 노력을 추구해왔다.[151] 인도의 핵개발 원인은 세이건의 모델들 즉, 안보모델, 국내정치모델, 규범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152] 핵 무기는

---

[150]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경쟁은 Maoz와 Mor가 제시한 숙적 국가의 요건들 즉, 미해결 이슈들의 축적, 상호 의존적 전략수립, 적대감 및 군사적 갈등의 반복도 충족한다. Ben D. Mor and Zeev Maoz (2002). *Bound by struggle: The strategic evolution of enduring international rivalrie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 5

[151] 중-베트남 전쟁에 소련의 참전을 막기위한 중국의 의도는 미중 데탕트의 계기가 된다. 미중 데탕트는 인도에게 비동맹 노선을 중단하고 소련에 기울게 했다.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전, 소련과의 '평화, 우애, 협력' 조약에는 중국 핵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포함했는데, 이는 중국-인도 간 화해 가능성에 대한 모스크바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Leonid Brezhnev는 Desai에게 인도 외무장관의 중국방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Garver, J. W, The Indian Factor in Recent Sino-Soviet Relations. *The China Quarterly*, 125 (1991), 55–85.

중국은 인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파키스탄을 동맹 혹은 안보 동지로 활용했기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군비 경쟁과 관련한 균형을 찾을 때는 그 셈법에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관계를 포함시켜야 한다. Geller, D. S, Nuclear Weapons and the Indo-pakistani Conflict: Global Implications of a Regional Power Cycl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4(1) (2003), pp. 137–150.

[152] 중국과 파키스탄의 위협은 안보모델로, 국내 정치적 입지의 강화의 필요성은

안보나 국가 지위와 같은 외부효과 외에 국가에 대한 동원과 결집, 정권에 대한 정당성 확보 등의 내부효과도 가진다.[153] 이장욱은 인도의 핵무장 추진 유인으로 냉전종식과 파키스탄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움직임과 이와 관련된 중국과 파키스탄의 협력관계를 든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지만, 인도라는 공통의 적 때문에 우호적인

국내정치모델로, 인도가 핵무기를 근대성의 한 방편으로 인식하고, 아시아 대륙에서 우세한 지위와 위신, 비동맹 세력의 리더국이 되고자 핵 무기를 모색한 것은 규범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Weapons? There Models in Search of the Bomb,” *International Security*,21:3(1996-7), P.55.

153 인도의 핵개발 동기에 대해서, 국가안보, 국가의 위신, 국내정치적 문제 해결, 핵기술력, 기타 경제적 이유와 외교적인 이유 등 다양하다. 주장의 옳고 그럼보다 이것은 관점의 문제라고 본다. 김희수・신진. “인도의 핵무장 촉진요인 상호작용에 관한 함의,” 『군사연구』, 148(2019), pp. 259-289.

인도는 평화적 핵정책을 유지해오던 중, 1962년 중국과의 전쟁 패배와 1964년 중국의 핵실험이 주는 안보위협 때문에 핵개발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먼저 강대국의 핵우산을 원했으나 1960년대 미국의 우호적 지원은 인도의 비동맹 노선으로 만족할 만한 안보보장은 불가능했다. 1971년 소련과의 우호조약이 핵시설 선제공격을 포함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느 정도 해소했으나 역시 불완전했다. 김태형. “냉전기 인도-파키스탄 숙적(rival)관계 발전과 미국의 역할: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과 닉슨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1) (2022), pp. 31-60.

관계를 유지했다.[154] 게다가, 인도는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했다.[155]

파키스탄도 비슷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2 차와 3 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미국뿐아니라 중국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느꼈다.[156]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파키스탄에게 핵무장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으며, 당시 총리였던 Zulfikar Ali Bhutto 총리의 국내정치적 의도도 핵개발 결정에 한 몫을 했었다. 즉,

---

[154] 하트펜스는 다음 4가지 영역에서 파키스탄은 중국에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을 통한 전략적 해양 경로는 세계 석유 무역의 20%를 차지함. 둘째, 인도의 지역 헤게모니 야망에 대한 견제자의 역할을 수행함, 셋째,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 것은 지역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중국 신장 지역의 극단주의를 저지하는데 필요함. 넷째, 중국은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연결의 역할을 할 파키스탄-인도 경제 파트너십을 목표로 하는 평화로운 남아시아 지역을 선호함. Hartpence M, The economic dimension of Sino–Pakistani relations: An overview.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71) (2011), pp. 581–599.

[155] 이장욱,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획득 가능성 연구: 기존 사실상 핵보유국 사례를 토대로," 『글로벌정치연구』, 10.2 (2017), pp. 35-87.

[156] 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미국뿐아니라 중국의 지원은 파키스탄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방글라데시 독립의 원인이 되었던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도 미국은 인도-파키스탄에 대해 군사원조를 중단했다.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기대했지만, 당시의 중국은 소련과 인도가 우호조약을 체결했기에 남아시아에 일어날 분쟁에 대한 직접 개입 의사나 여력이 없었다. 김태형,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이해』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p. 144

이러한 국제 정세에서 파키스탄에게 핵무장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라이벌 적대국가가 경제, 재래식 군사력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고, 강대국 동맹국으로부터의 '방기'를 경험한 후 독자적인 핵무장이 유일한 생존전략이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인데 이를 북한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다. 앞의 책, p. 269.

핵개발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군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반(反)인도'라는 공감을 통해 지지 확산을 꾀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생존을 위해 핵무장의 길 즉, '반항아'의 역할을 선택했다.[157]

미국은 인도의 핵무기 개발을 처음부터 용인하진 않았으며, 인도의 의도를 단념시키기 위해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했었다. 즉, 인도 안보를 위한 미국의 보증, 미소 공동 보증, 모든 핵보유국들의 보증, 영국의 보증, 핵확산금지조약과 연계된 보증을 포함하는 협상이 진행되었다.[158] 인도아대륙에 대한 미국의 핵에 대한 목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해관계들의 우선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비확산 정책도 요동쳤다.[159] 이러한 비확산정책의 비일치성과 비일관성은 국제 관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160] 프랑스와 중국은 파키스탄에 원자로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

[157] 적대 국가인 인도가 경제, 재래식 군사력 등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었고, 강대국인 동맹국들로부터 '방기'를 경험한 후, 유일한 생존전략은 핵무장뿐이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김태형,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이해-신현실주의 이론으로 바라보는 양국의 핵개발과 안보전략변화』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p. 269.

[158] Joyce Battle. "India and Pakistan – On the Nuclear Threshold",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6/, (검색일: 2023년 09월 30일).

[159] 남아시아 지역의 핵 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우호적 협력관계로 이어지거나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미국은 보다 완화된 태도나 묵인을 선택했다. 중국 핵개발 이후 인도 핵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파키스탄의 전략적가치 활용을 위해 핵개발을 묵인한 경우가 그것이다. 손한별.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과 선택적 비확산정책: "전략적 균형"을 위한 수평적 핵확산," 『국방연구』, 62(1) (2019), pp. 63-98.

[160] 파키스탄 핵용인의 동기를 보면, 미국이 원하는 전략적가치를 알 수 있다. 즉, 1970년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되었던 파키스탄의 핵개발은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급변했다. 미국은 즉시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파키스탄에 전폭적인

소련도 1960 년대와 70 년대 중소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핵을 묵인했다. 미국이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용인한 것은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에서의 대테러전을 위한 거점으로 인도를 활용해야 했었고, 1990 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잠재적 패권 도전국이 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인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즉, 양국의 보수체계를 갱신한 새로운 이해관계는 인도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변경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파키스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9.11 테러는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들었고, 아프가니스탄의 인접국인 파키스탄은 활용가치 때문에 부시정부로부터 무제한의 원조와 함께 핵을 용인받는 계기를 맞는다. 즉, 처음부터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핵용인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능한 것이었다.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지원에는 파키스탄의 핵개발 묵인과 함께 핵투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F-16 전투기의 수출도 포함하고 있어 인도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김태형,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이해』(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p. 110.

인도 핵에 대한 용인 동기는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지역에서 수행된 대테러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써 활용 가치 때문이었다. (필자)

부시정부는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여 전통적으로 중국-인도 간 갈등관계를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적어도 중국과 협력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미-인도 핵협력을 추진했다. Kapur, S. Paul and Sumit Ganguly, 2007, "The Transformation of U.S.-India Relations" *Asian Survey*, Vol. XLVII, No. 4.

프랑스도 이스라엘이 알제리 식민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 이스라엘에 연구용 원자로와 기폭 기술을 제공했다. 폴 브래큰, 이시은 역, 『제2차 핵 시대』(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p. 138.

요약하자면,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을 용인한 것은 '세력 균형'과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활용성' 등의 미국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인 때문이었다. 이 부분은 북핵 용인에서도 유효하다. 차이점은 무엇일까? 북한은 인도·파키스탄과 달리, 이념과 정체성 측면에서 괴리감이 있으며, 동맹의 핵도미노를 유발하고, 북한과 북핵에 반대하는 국내외의 정치세력과 여론이 존재하고, 적국으로서 유용성이 사라진다는 반대유인을 가지고 있다.

2. 북핵 용인 게임의 전략과 구조

북핵 용인의 다양한 양상들을 핵보유희망국(북한)과 핵용인국(미국), 그리고 동맹(한국과 일본) 간의 게임을 통해 찾을 것이다. 이러한 게임의 대전제는 모든 국가는 '생존'과 같은 사활적 이익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161] 생존을

---

[161] 미국 국가이익 위원회 (The Commission for U.S.A.'s National Interests)는 미국의 이익을 사활적 이익, 매우 중요한 이익, 중요한 이익, 덜 중요한 이익으로 구분하고 사활적 이익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 미국 혹은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핵, 생물학, 화학 무기를 이용한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억제 및 감소
- 미국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 시스템을 위한 동맹의 존립과 활발한 협력
- 미국 경계에서 주요 적대국 방지, 파탄 상태의 국가 방지, 핵심적 지구적 시스템(무역, 재정적 시장, 에너지 공급과 환경)의 생존성과 안정성 보장
- 미국 이익과 관련하여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전략적 적이 될 수도 있는 국가와 생산적인 관계 설정

사활적 이익은 영토와 주권과 같이 구성원의 안전과 자유, 번영을 위한 필수적 이익이고, 매우 중요한 이익은 경제적 이익과 같이 양보 시에 손해가 발생하지만 국가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이익이고, 중요한 이익은 안정적 국제질서, 평화와 같이 타협 시에 국익에 부정적인 이익이고, 마지막으로 덜 중요한 이익은 이념이나 가치와 같이 국익과 간접적인

중심으로 다른 이해관계들을 저울질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다른 이해 관계들은 북핵 용인 협상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기존 용인 사례와 유사한 것과 다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 장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북핵 용인 게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I. 미국은 북핵에 대해서도 인도나 파키스탄 수준의 용인을 할 수 있는가? 그 때의 조건은 무엇인가?

II. 인도나 파키스탄 수준의 북핵 용인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양상 혹은 다른 수준의 용인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관련이 있는 이익을 말한다. Robert Ellsworth, Andrew Goodpaster, and Rita Hauser, 『*U.S.A.'s National Interests: A Report from The Commission on U.S.A.'s National Interests*』 (Washington, D.C.: Commission on U.S.A.'s National Interests, July 2000), pp. 9-18.

구영록은 모든 국가가 공히 원하는 국가이익은 안보, 경제의 번영, 호의적인 또는 유리한 국제질서 창출, 자국의 가치증진 등을 제시했고, 국가이익에서 일반적인 우선순위로 1) 생존의 이익(Survival interest); 2) 핵심 이익(Vital interest); 3) 중요 이익(Major interest); 4) 부수 이익 (Peripheral interest) 등으로 분류한다.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서울: 법문사, 1996) P. 31-34. 국가 이익들에 대한 자세한 정리는 다음 논문을 참조 김혜원. "냉전시기 북한의 대미외교행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III. 북한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수준의 북핵 용인 양상을 원하는가? (다시 말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수준의 핵통제를 수용할 수 있는가?)

동맹을 포함하는 게임 전략 IV 로 인해, 동북아의 핵 문제는 3 국 관계가 된다. 다음의 게임 전략 4 는 동맹에 대한 핵확산을 고려한 조건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용인 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경우다.

IV. 동맹은 어떤 조건에서 핵무장을 선택하는가?

3 장에서는 네가지 게임에 대한 북핵 용인 관련국들 간의 전략 게임을 통해 북핵 용인의 다양한 양상과 그 양상을 결정하는 조건을 찾는다. 특히, 동맹의 핵무장에 대한 태도 전환은 북한과 미국의 핵용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보이고자 한다.

제 5 절 소결

북핵이란 주제가 예측 가능하지도 않으며, 당위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북핵의 가능성, 불가능성, 불가피성을 현 상황에서 논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그 조건과 그 조건에 따르는 결과만을 따질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주제를 대할 때, 그것도 관련국들의 이해관계와 권력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세에서 게임 이론은 적합한 도구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게임의 전략과 보수를 임의로 결정한다면 빈약한 근거로 인해 설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Malici 와 Walker 과 Theory of Inference about Preference 의 논리를 통해 역할의 분석을 통해 북핵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 3 장에서 이러한 전략은 게임전략으로, 이해관계는 보수로 활용될 것이다. 역할분석을 통해 도출한 보수를 적용한 게임의 균형은 균형이 일어날만 하다는 합리성과 균형 간 형평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역할은 재정립되고 재정립된 역할은 새로운 보수들을 제안한다. 새로운 보수는 다시 게임에 적용된다. 이 순환 검증을 통해 게임 결과는 세련화되고, 관련국들의 역할 지정의 논리는 정당화된다.

국제 정치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은 게임 플레이어와 같다. 제 2 장에서는 제 3 장에서 필요한 게임 보수와 게임 전략을 찾았다. 게임 전략은 제 1 장의 문제 제기에서 거론한 북핵 용인 관련국들의 전략들을 바탕으로 한다.

제 3 장 북핵 용인 게임

이 장에서는 1 장의 선행연구를 통해 발견한 독립변인으로서 '북미간 양보수준(λ)'과 '동맹의 핵무장가능성(π)'과 2 장에서 발견한 매개변인들을 포함하는 게임을 통해 북핵 용인 양상에 해당하는 게임 균형을 발견한다.

제 1 절 게임 모델과 게임 보수

1. 게임 모델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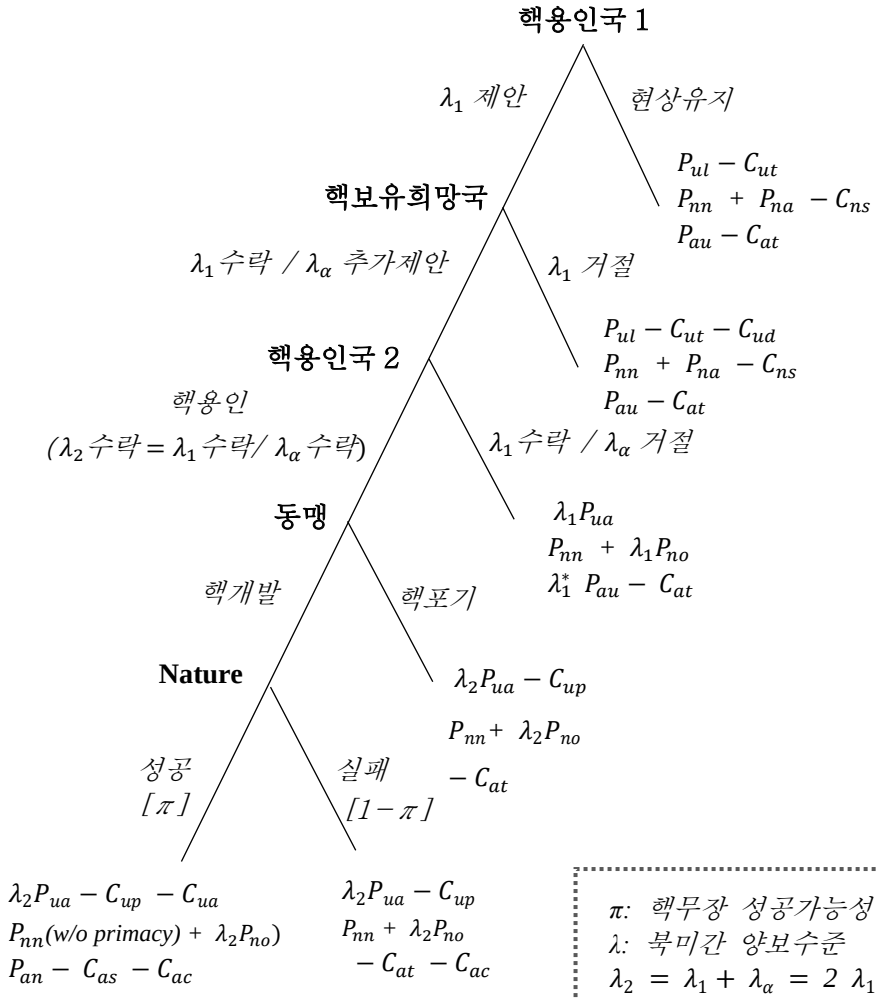
【그림 3-1】은 북핵 용인 관련국들인 핵용인국(미국), 핵보유희망국(북한), 동맹(한국과 일본)의 세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전개형 게임이다. 전개형 게임에서 내쉬 균형을 찾는 역진귀납법의 원리는 마지막 수(전략)를 기준으로 현재의 수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바둑과 유사하다.[162] 본 연구의 게임에서는 모두 7 가지 균형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용인 양상을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 게임의 마지막 수는 동맹이 두도록 디자인했다. 즉, 마지막 전략 결정 마디에 동맹이 배치된다. 동맹의 핵무장은 핵용인에 의해 촉진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동맹 보다 선행하는 플레이어는 핵용인국이다.

---

[162] 플레이어의 수는 상대 플레이어의 응수를 예측하고 계산에 넣어 행동하기 때문이다. 한동근, 『게임이론-전략적 의사결정의 이론과 응용』(서울: 경문사, 1995), pp 2-3.

【그림 3-1】 핵용인 게임



π: 핵무장 성공가능성
λ: 북미간 양보수준
$\lambda_2 = \lambda_1 + \lambda_\alpha = 2\ \lambda_1$

P_{u*}: 핵용인국이 받는 이익
C_{u*}: 핵용인국이 받는 손실
P_{n*}: 핵보유희망국이 받는 이익
C_{n*}: 핵보유희망국이 받는 손실
P_{a*}: 동맹이 받는 이익
C_{a*}: 동맹이 받는 손실

※ 필자 작성

본 연구는 핵용인 양상을 세가지로 구분한다. 즉, 어떠한 수준의 핵용인도 거부하는 '침묵(미합의)', 낮은 수준의 핵용인인 '한계용인(λ_1수준에 합의)', 높은 수준의 '핵용인(λ_1 보다 높은 λ_2 수준에 합의)'이다. 이러한 세가지 양상은 '동맹의 핵무장가능성(포기하는 경우, 낮은 경우, 높은 경우)'과 '북미의 양보수준'에 따라 7 가지 균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식들을 비교하기 위해 λ_2= 2 λ_1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가정의 근거는 λ_1이 기존 동맹을 유지하면서, 핵용인국 혹은 핵보유희망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양보 수준인데 반해, λ_2는 기존의 동맹을 일시적이든 아니면 보다 영속적이든 포기해야 할 정도로 강한 양보 수준이기 때문이다. 즉, λ_2 라는 조건을 적용 시, 미국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방기될 가능성을 동반하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방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용인 게임에서 마지막 수는 동맹이 두었지만 첫 수는 핵용인국이 두는 이유는 용인의 주체인 핵용인국이 핵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첫번째 의사결정점에 위치한 핵용인국은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1'에서 사활적 이익인 안보를 위해(예를 들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핵공격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λ_1 (양보) 수준의 제안'을 하거나 '현상유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핵용인국이 '현상유지'를 선택하면 게임은 종료되는데 이 균형이 '침묵'이다.

핵용인국은 핵보유희망국의 제안에 대해, 'λ_1 수락 + λ_α 거절' 아니면 'λ_2 수락(핵용인)'을 선택한다. 핵용인국이 'λ_1 수락 + λ_α 거절'을 선택하면 게임은 종료된다. 이 종착지가 '한계용인' 균형이다. 핵용인국의 '핵용인(λ_2 수락)'은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에 따라, 핵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맹은 핵용인국의 '핵용인'에 대해 '핵개발' 혹은 '핵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인 π 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즉, (식 1)이 나타내는 π_1은 동맹이 핵을 포기할 정도로 가장 낮은 π의 범위에서 상한점이다. 반면, (식 2)가 나타내는 π_2는 낮은 범위의 π와 높은 범위의 π의 경계이며, π_1은 π_2의 낮은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π_1은 π_2 보다 낮다.[163]

양보수준인 λ 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고려도 필요하다. 핵용인국, 핵보유희망국이 갖는 λ 는 그 구성 성분이 완전히 다르므로 그 크기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경우의 수를 따질 수밖에 없다. 즉, 식 4, 식 6, 식 7, 식 9, 식 11 이 나타내는 핵용인국의 λ 값들이 식 3, 식 5, 식 8, 식 10 이 표시하는 핵보유희망국의 λ 값들보다 큰 경우와 그 반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

[163] π_1은 π_2 보다 작다. 즉, π_1은 핵용인국이 핵용인을 선택한 조건에서 동맹이 선택할 수 있는 π의 범위에 속한다. π_1은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영역과 핵무장을 포기할 정도로 핵무장가능성이 매우 낮은 영역의 경계이고, π_2는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영역과 높은 영역의 경계다.

2. 게임 보수

핵용인국과 핵보유희망국의 양보 수준인 λ 는 북핵 용인 협상에서 1 보다 크며 양국의 양보 수준은 비슷하며 따라서 양국이 협상을 통해 받는 이익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가정한다.[164] 동맹의 핵무장 성공 가능성인 π 는 $0 \leq \pi$

---

[164] 즉, 북한이 양보한 만큼 미국은 북핵을 통제할 수 있고, 미국이 양보한 만큼 북한의 경제개방으로 인한 이익은 커진다. 특히, 북한이 양보한 λ 만큼, 동맹도 안보이익(예를 들어, 핵우산으로 인한 안보적 이익은 북한이 양보한 λ에 비례함)을 얻는다.

- λ_1 : 1 보다 큰 값으로 북미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의 양보 수준을 의미한다. 미국의 이익인 λ_1 은 북한의 이익인 λ_1 에 상응하며 유사한 수준이다. λ_1^* 는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능력을 폐기함으로써 동맹이 얻는 이익이다. 즉, λ_1^* 은 북한의 이 능력이 통제되면 미국의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력(핵우산 효과)이 증대되어 동맹이 얻는 간접적 이익이므로 북미의 직접적 이익보다는 낮다고 가정한다. ($\lambda_1 > \lambda_1^*$)

- λ_2 :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 수준. $1 < \lambda_1 < \lambda_2$, 여기서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lambda_2 = 2 \ \lambda_1$ 그리고, $\lambda_2 = \lambda_1 + \lambda_\alpha$ 라고 가정한다. 그렇게 가정한 이유는 아래 표와 같이 λ_2 가 λ_1 의 모든 조치와 함께 λ_1 보다 발전된 조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얻는 λ_2 와 미국이 얻는 λ_2 의 수준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북미 간 양보 수준이 상응하는 수준일 것이기 때문이다.

【표 3-1】북미의 양보수준

플레이어	보수	안보 차원	기타 차원 (가치, 번영, 관계 등)
핵용인국	$\lambda_1 P_{ua}$	ICBM, SLBM 등 미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 능력에 대한 통제, 핵 능력을 가진 잠수함 수출 통제 등 핵무기, 핵기술, 핵물질의 이전 통제, 미래 핵에 대한 통제 등	거의 없음

≤ 1 의 범위를 갖는다.[165] 제 2 장의 【표 2-4】, 【표 2-8】, 【표 2-11】을 반영하여 추출된 게임의 보수는 【표 3-2】와 같다. 【표 2-4】에서 '핵확산방지리더십유지'는 P_{ul}, '핵보유희망국이 제공가능한 전략적가치'는 P_{ua}, '국내정치와 국외정치적 손실'은 C_{up}, '북핵위협'은 C_{ut}, '동맹방기 손실'은 C_{ua}, '북핵협상에서 핵보유희망국의 거절'로 인한 거래 비용은 C_{ud}로 표기한다. 【표 2-8】에서 '핵 보유로 인한 이익'은 P_{nn}, '핵 우월지위를 제외한 핵보유로 인한 이익'은 P_{nn} *[w/o primacy]*, '경제 개방' 이익은 P_{no}, '미 본토 공격 불가능으로

	$\lambda_2 P_{ua}$	$\lambda_1 P_{ua}$를 포함함. 핵 전략 등에 대한 변경, 과거 핵에 대한 통제	$\lambda_1 P_{ua}$를 포함함. 중국 봉쇄, 러시아 견제 등 세력 균형, 인권 개선 기대.
핵보유 희망국	$\lambda_1 P_{no}$	잠정적 핵 묵인, 평화 협정, 종전 협정 등을 통한 신뢰 구축	제재 해제, 테러 국가 지명 해제 등
	$\lambda_2 P_{no}$	$\lambda_1 P_{no}$*를 포함함.* 인도 및 파키스탄 수준의 핵용인	$\lambda_1 P_{no}$*를 포함함.* 세계 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 등을 통한 지원 등 국제 자본주의 체제 편입, 관계정상화

※필자 작성

$\lambda_2 P_{no}$에서 인도 수준의 핵용인을 살펴보면, 미국은 평화용 핵시설에 대해 기술과 연료를 제공하고, 인도가 군사용으로 구분하는 핵시설에 대해서는 비밀성과 사찰면제를 보장하고, 미국의 우방 및 핵공급그룹(NSG)을 설득해서 평화용 핵협력을 제공할 것을 포함한다. 김태우, "미·인도 핵 합의, 새로운 핵문제의 시작 - 한국은 장·단기적인 국가 생존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핵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 (2006), pp. 68-76.

[165] π는 동맹(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핵무장 성공가능성으로 기술적, 경제적 역량과 함께 핵무장 의지, 안보 구조, 안보 위험도, 내외부의 정치적 계기 등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고, 기술적, 국제정치적, 경제적 제재와 같은 다양한 장애물을 국복하고 핵무장을 달성할 확률이다.

인한 손실'은 C_{na}, '경제 제재'는 C_{ns} 로 표기한다. 【표 2-11】에서 '핵 보유로 인한 이익'은 P_{an}, '미국 핵우산에 의한 이익'은 P_{au}, '북핵 위협으로 인한 손실'은 C_{at}, '핵개발 비용'은 C_{ac}, '경제 제재'는 C_{as} 로 표기한다.

【표 3-2】 플레이어 별 보수

플레이어	보수	설명
핵용인국 (미국)	P_{ua}	핵용인을 통해 미국이 얻는 이익. 핵보유희망국이 미국에 대한 직접 핵 공격을 통제함으로써 미국이 얻는 안보적 이익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 가치의 이식, 핵 보유국 희망국이 속한 지역에서 미국이 원하는 국제 질서 수립 효과, 중국과 러시아 견제 혹은 봉쇄 효과, 그 밖에 자원활용, 무역효과 등 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 (Profit_U.S.A._acquiescence)
	P_{ul}	미국이 핵확산 리더십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 이 이익은 핵을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즉,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킴으로써 유지된다. (Profit_U.S.A. _leader)
	C_{ut}	핵보유희망국의 핵 위협이 핵용인국에게 주는 손실. 구체적으로 미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 능력과 함께 핵물질/무기/기술의 미 적성 국가 혹은 집단에의 이전 위험을 포함하는 위협으로 인한 안보 손실. (Cost_U.S.A._threat)

	C_{ua}	동맹의 핵 보유가 원인이 되어 동맹에 의한 미국 방기로 인한 핵용인국의 손실. 동맹의 미국 방기는 동맹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동맹이 핵무장에 성공했을 때만 이 손실을 입는다. (Cost_U.S.A_abandon)
	C_{ud}	핵용인국의 북핵 용인 협상에서 핵보유희망국의 거절로 인한 거래 비용. 예를 들어, 북한의 거절은 핵용인국의 리더십이나 북핵 용인 협상에서 협상조건을 불리하게 한다. (Cost_U.S.A_deal)
	C_{up}	핵보유희망국의 핵을 용인함으로써 입는 국내외 정치차원의 손실. 즉, 국내적으로 핵보유 반대세력으로부터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받는 손실과 국외적으로 핵확산 사례 추가로 리더십 손상에 의한 손실. (Cost_U.S.A._politics)
핵보유 희망국 (북한)	P_{nn}	핵보유희망국이 핵 무기 보유로 얻는 다양한 이익으로 미 동맹에 대한 핵 우위를 통한 이익을 포함한다. (Profit_North Korea_nuclear weapon)
	P_{no}	핵용인을 통해 얻는 제재해제, 개방이나 지원을 통해 핵보유희망국이 얻는 주로 경제적 이익과 국제사회참여, 국가위상개선 등 기타이익. (Profit_North Korea_open)
	P_{na}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 능력 획득으로 인한 이익. 협상력 제고나 대미 전쟁 억지효과, 미국 동맹에 대한

		핵우산을 무력화하는 등 다양한 안보적 이익을 포함한다. (Profit_North Korea_attack)
	P_{nn} *[w/o primacy]*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으로 인해 사라진 동북아 핵우위 이익을 제외한 P_{nn}.[166] (Profit_North Korea_nuclear weapon without primacy)
	C_{ns}	핵 보유로 인한 경제 재제가 주는 손실. (Cost_North Korea_sanction)
	C_{na}	미사일 및 핵 실험 등 도발로 인한 추가적 경제재제가 주는 손실. (Cost_North Korea_attack)
핵용인국의 동맹 (한국과 일본)	P_{au}	핵용인국의 핵우산을 통해 얻는 안보 이익. (Profit_Ally_umbrella(nuclear)) λ_1^* P_{au}는 북핵의 미국 본토타격 능력을 통제함으로써 핵용인국의 동맹에 대한 핵우산 효과는 핵보유희망국의 양보수준만큼 증가한다. 이때, λ_1^* 는 핵용인국이 북핵통제를 통해 얻는 이익인 λ_1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이므로 λ_1^*로 구분하였다.[167]

166 북한의 핵우위 이익에는 다음과 같은 억제 역량을 포함한다. 북한은 최소억제를 초과하는 능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필자)

보유국가의 핵억제전략태세에는 최대억제, 제한억제 그리고 최소억제 등으로 구분된다. 최대억제는 적의 핵능력을 제거하면서 공격자의 손실은 최소화하는 선제타격과 완전승리를 추구하고, 제한억제는 적의 승리를 거부할 정도의 공격능력을 지향하고, 최소억제는 선제 공격을 받은 후 잔존 핵전력으로 보복가능한 제2격 능력을 중시한다. Alastair Iain Johnston, “China’s new old thinking”,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3(1995)

167 미국의 동맹들은 적국인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역량

	P_{an}	안보, 내부 결집, 내부 정치, 국가 위상 강화, 정체성 강화, 국방비 절감 등 핵 보유로 인한 이익. (Profit_Ally_nuclear weapon)
	C_{at}	북핵 위협, 도발로 의한 안보 손실. (Cost_Ally_threat)[168]
	C_{as}	핵무장으로 인한 경제제재가 주는 손실. (Cost_Ally_sanction)
	C_{ac}	핵무장 개발비용이 주는 손실. (Cost_Ally_cost)

※필자 작성

을 증명할 수 없거나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약화될 때 즉 미국으로부터 방기와 유사한 조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는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168] 한반도에서 영토완정을 두고 주권경쟁을 벌이는 한국입장에서 독자적인 핵무장 이전에는 이 보수를 제외할 수 없다.

제 2 절 동맹의 핵개발과 핵보유희망국에 대한 핵용인

1. 동맹의 핵개발 조건

전개형 게임의 부분게임 완전내쉬균형(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을 찾기 위해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을 적용한다.[169] 제일 먼저, 최종 의사결정점 '동맹'에서 동맹(한국, 일본)은 두가지 대안들('핵개발'과 '핵포기')를 가지며,[170] 동맹이 '핵개발'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산식은 보론 1 참조)

$$\pi \geq \frac{C_{ac}}{P_{an} - C_{as} + C_{at}} = \pi_1 \qquad \text{(식 1)}$$

---

[169] 역진 귀납법을 적용하려면 플레이어들의 완전합리성과 보수구조에 대해서도 플레이어 전원이 완전하고(complete: 상대방이 무엇을 결정할 지 알아야 하고) 완비된(perfect: 상대방의 보수 함수를 알아야 함.)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가정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 분석된 예측과 현실은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김영세, 『게임이론-전략과 정보의 경제학』(서울: 박영사, 2020), p. 166.

본연구의 게임에서, 국가전략은 엄정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게임 참여국가들의 협상 보수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보수와 보수구조가 잘알려진 완비성을 가지며, 게임 결정이 순차적이며 명징한 국가 간 제안에 따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측면에서 역진귀납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며 그 결과 하부게임 완전 균형(Subgame Perfect Equillibrium)을 찾을 수 있다.

[170] 핵무장 실패'와 '핵포기'시 동맹의 보수에서 'P_{au}'가 제외된 것은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핵용인을 받았다는 것은 미국의 동맹이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 간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핵우산을 사용하기는 힘들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식 1)에서 분자인 C_{ac} (동맹의 핵개발 비용)는 동맹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을 고려할 때 다른 변수들에 비해 미미할 수 있다.[171] 또한, 사활적 이익과 관련한 P_{an}의 전략적 가치와 C_{at} 의 수준은 영속적이며 지대한 반면[172], C_{as} 는 인도나 파키스탄의 사례에 비추어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가정하면, [173] (식 1)은 대략

---

[171] 2014 년, 한국은 해외에서 약 9 조원의 무기를 구입했는데 핵무기 개발 비용은 약 1 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핵자강) 반대론자들의 논리에 대한 반박 – 정성장,” SPN 서울평양뉴스, 2022 년 10 월 17 일; http://edu.copykiller.com/edu-source/faq/ ?mod=document&uid=156, (검색일: 2024 년 3 월 7 일).

[172] 북한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동맹(한국과 일본)은 비핵보유국이지만 적국의 동맹이므로 공격대상이 된다. 최고인민회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2022년 09월 08일.

[173] 1998년의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실험이후 단행된 미국의 제재는 2001년 9월 22일의 대통령 정책결정 No. 2001-28 (President Determination No. 2001-28)에 의해 완화가 아닌 완전한 철회를 하게 된다. 박재석・황태희, "핵무기 보유 추진 국가들과 경제제재," 『한국정치학회보』, 52.4 (2018), pp. 103-130.

파체코 파르도는 "계속적인 북한의 군사도발은 한국의 핵무장론을 정점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현재의 한국 안보 환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한국의 핵무장) 결정을 이해하게 될 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한국, 핵무장 비용 감수 가능…타국도 이해할 수도,” 『뉴시스』, 2023년 3월 17일;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317_ 0002230977 #_PA (검색일: 2024년 03월 07일).

황일도는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다. “제재로 인한 한국의 고통은 북한의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한국경제는 수출지향형으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에도 위협이 될 것이므로 중국의 제재는 더욱 강력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 BBC NEWS 코리아, 2017년 9월 28일 입력; https://www.bbc.com/korean/news-41303423 (검색일: 2024년 03월 07일) .

핵무장을 시도할 때, 동맹은 ‘핵개발’이외에 나머지 부문에서는 미국과 협력을

$\pi_1 \cong 0$ 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즉, 이러한 가정하에서는 북핵 용인이 일어나면 핵보유희망국에 인접한 적국인 동맹은 무조건 핵무장을 시도한다는 것을 뜻한다.[174] 어떻게 보면, 북핵 용인 시 동맹의 처지는 냉전 종식 당시의 기댈 곳 없었던 북한과 유사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동맹 방기에 해당한다.[175] 동맹이 핵무장을 통해 자주성을 획득하면 핵용인국도 방기될 수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동맹이 핵개발시 미국은 압력과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동맹이 중국 봉쇄 등 다른 전략적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미국의 제재에는 한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새로운 동맹을 희망하는 북한의 핵을 용인할 정도로 세력균형이 시급한 과제라면 기존의 동맹의 핵을 용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174] 일본은 미국 국력의 축소, 중국 위협의 확대와 일본 내 반핵정서의 약화 등과 같은 일본의 핵무장 제한 요인들이 줄어들면 일본은 핵무장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원승종, "일본의 핵무장 제한 요인 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24(0) (2017), pp. 123-150.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NSC 선임국장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하면 한국의 핵무장 요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본,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가들은 계속 증가한다. 핵용인은 북한과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핵 도미노 가능성을 제기한다. "북핵 인정하면 역내 핵 도미노…한·일·타이완 연쇄 반응할 것," 『VOA』, 2023년 9월 30일; https://www.voakorea.com/a/7292437.html (검색일: 2024년3월8일)

[175] 1990년 초, 냉전 해체 과정에서 방위조약을 맺은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는 배신과 방기의 경험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에 들어서게 했다. 김태형, "파키스탄의 핵 보유 이후 전략변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p. 333.

북한의 핵 위협은 일본의 대외전략에 이중적 영향을 갖는다. 즉. 일본 안보의 취약성과 외교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미·일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지역적 안보역할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국 위협론과 함께 북한 위협론은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한다. 북한에 의한 도발이 강화 및 반복될수록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의 제한선을 넘어 '적극적 평화주의'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조양현, "북핵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인식 및 대응-북한 핵 위협

있으며,[176] 동북아에서 핵용인국의 패권적 지위도 흔들릴 것이다.[177] 그러므로, 핵용인은 기존 동맹을 대체하는 새로운 동맹관계의 탄생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맹의 핵무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용인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맹(북한)의 전략적가치가 기존의 동맹(한국과 일본)보다 상회해야 한다.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핵용인의 실현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맹이 핵용인이 일어나도 핵무장을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무장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어떨까?

현실화에 대한 평가 및 자국 이익 확대 노력," 『한국국가전략』, 2(1) (2017), pp. 353-403.

176 이 상황은 모든 플레이어들이 자백하지 않는 것(핵무장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선택(핵무장 선택)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동맹의 핵무장은 명백우월전략(strictly dominant strategy)에 속한다.

177 미국이 북핵을 용인한다고 해서 미국의 동맹을 비롯한 핵보유희망국들에 의한 무조건적인 핵 도미노가 일어날 것이라는 추측은 근거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것은 동맹에게는 핵 보유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 핵 지형의 불균형성뿐 아니라, 핵 보유 기준의 불공평성(북한보다 남한과 일본에게 더 높은 핵 보유기준을 요구할 수는 없다.)은 북한의 국지 도발과 같은 사건들과 결합되어 동맹을 핵무장의 길로 내몰 수 있다. 아직까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핵을 선택하는 것은 북핵 용인 여부에 좌우되기 보다는 미국의 패권 유지나 자국의 안보 여건과 보다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 즉, 동맹의 입장에서, P_{au} 가 P_{an}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동맹은 핵개발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P_{au} 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발생한다면, 동맹은 핵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 즉, 미국이 갖는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거나,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전략적가치를 발견할런지는 미지수지만 북핵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북핵을 용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확실한 것은 동맹에게 P_{an} 은 영속적이고 안정적 안보를 제공하지만, P_{au} 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2. 핵보유희망국에 대한 핵용인 조건

‘핵용인’을 위해서는 핵보유희망국이 핵용인국이 원하는 전략적 가치를 보유해야 하며, 핵용인국의 ‘핵용인’이 기존 동맹의 동맹의 핵무장을 유인하지 않아야 한다.[178] 아니면, 동맹이 핵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을 핵보유희망국이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의 전략적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pi \geq \pi_1$ (식 1) 조건에서, ‘핵용인’은 동맹은 ‘핵개발’을 야기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핵용인국은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2’[179]에서 두가지 대안들 (‘핵용인’과 ‘λ_1 수락 + λ_α 거절’)을 가지며, (식 2)의 조건에서 ‘핵용인'을 선택한다.[180] (산식은 보론 2 참조)

$$\lambda_1 \geq \frac{\pi C_{ua} + C_{up}}{P_{ua}} \quad \Leftrightarrow \quad \pi \leq \frac{\lambda_1 P_{ua} - C_{up}}{C_{ua}} = \pi_2 \text{ (식 2)}$$ [181]

---

[178] 2022년의 미국의 Nuclear Posture Review는 군사적 무게중심은 미국의 세계적인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에 있으며,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는 이 네트워크의 기반이기 때문에 동맹에 대한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은 국방 및 안보 전략의 핵심이라고 쓰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은 동맹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동맹의 핵무장을 차단한다. 그러나, 미국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미국과 동맹/파트너의 핵심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다. *2022 Nuclear Posture Review*, p. 9.

[179] ‘핵용인국1’과 ‘핵용인국2’는 동일한 플레이어이며 숫자는 전략 결정의 순서를 뜻한다.

[180] 미국은 북핵 협상에서 북핵을 용인하는 반대급부로 ‘중국봉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전략적가치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북핵 용인은 미국 내 정치에서 북한이라는 ‘적’이 주는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또한, 동맹이나 핵보유희망국에게 핵무장 감행과 같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181] (식2)에서 그 기울기는 $\frac{C_{ua}}{P_{ua}}$ 이며, y 절편은 $\frac{C_{up}}{P_{ua}}$ 인데, 북한의 미 본토 타격능력이 증대하고 현실화될수록 그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y 절편도 낮아진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제 3 절 북핵 용인 시, 동맹이 핵개발을 하는 경우

1.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높은 경우 [$\pi > \pi_2$]

가. '(a)한계용인' 균형

'(a)한계용인' 균형은 예를 들어, 핵용인국의 사활적 이익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λ_1 이란 양보 수준에 합의함으로써 조성된다. [182] λ_1 으로 인해, 핵보유희망국은 잠정적 핵용인과 경제적 이익을, 핵용인국은 '핵통제'라는 보수를 받는다. 여기서 '한계용인'이란 명명은 Hugh Gusterson 의 'liminal status'에서 착안했다. [183]

능력 고도화가 핵용인을 용의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식2)를 통해 '핵용인'을 위해서는,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에 의해 크기가 결정되는 '동맹방기로 인한 손실(C_{ua})'과 '국내외 정치적 손실(C_{up})'을 새로운 동맹인 '핵보유희망국이 주는 전략적가치 (P_{ua})'가 만회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182] 이 사활적 이익에 대한 위협은 이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나 이익 집단 혹은 이 위협에서 정치적 가치를 발견한 정치가에 의해 부각되고 확대될 수 있다.

[183] Hugh Gusterson 은 '어느 정도 핵을 보유한 국가'인 북한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하며, 비핵화란 목표를 포기하긴 힘들지만, 핵보유와 비보유의 사이의 북한을 즉, '한계(限界) 상태(liminal status)'의 핵보유를 받아들이도록 할 창의적 방법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헨리 키신저는 '약간 혹은 조금 임신했다'는 불가능하다.'며 최근의 워싱턴포스트 사설에서 "핵보유국이냐 비핵국가냐 사이에 중간이 없다."라고 했다. 이 말은 틀렸다. 이것은 미국 안보분야 지식층이 창의적 사고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일 뿐이다. 핵보유는 임신과는 완전히 다르다. 북한이 약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북한과의 여러 협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Hugh Gusterson, "Thinking creatively about the North Korean stalemat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09년 8월 12일; https://thebulletin.org/2009/08/thinking-creatively-about-the-north-korean-stalemate (검색일: 2024년

(식 2)의 반대조건인 $\pi > \pi_2$ 에서 '핵용인국 2'가 'λ_1 수락 + λ_α 거절'을 선택하면, 핵보유희망국은 의사결정점, '핵보유희망국'에서 두가지 대안들('λ_1 수락+λ_α 추가제안'과 'λ_1 거절'[184])을 가지며, [185] 다음 조건에서 'λ_1 수락 + λ_α 추가제안'을 선택한다. (산식은 보론 3 참조)

$$\lambda_1 \geq \frac{P_{na} - C_{ns}}{P_{no}} \qquad \text{(식 3)}^{186}$$

06월19일).

미국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하여 북한에 의한 미 본토에 대한 직접공격능력을 무력화하는 대신, 미국은 평화협상과 함께 제재해제 등의 보상을 교환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핵용인을 말한다. 북미 간의 완전한 수교, 인도와 파키스탄 수준의 핵용인이라기 보다는 부분적인 핵통제와 부분적인 제재해제를 기반으로 하는 잠정적 과도적 단계에 해당함으로 '한계용인' 은 다시 말해, '어정쩡한 용인'이라고 할 수 있다.

[184] 핵보유희망국이 '거절'을 선택했을 때 얻는 보수 중 하나인 P_{nn} 은 핵고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핵 역량이나 협상력 관점에서 개선된다. P_{na} 은 미국 본토 공격 능력 때문에 동북아에서 미국의 핵우산 능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함한다. 반대로, λ_1 수준의 협상 성공의 여파로 미국 본토 공격능력 상실로 동맹에 대한 핵우산 효과는 λ_1^* 만큼 증가하여, λ_1^* P_{au}가 된다.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만 제거하면 남한에 대한 절대적 핵우세가 보장되기 때문이었다. 박휘락. 『북핵외통수-비핵화에서 핵균형으로』 (서울: 북코리아, 2022), p. 290.

[185] 북한이 '거절'을 선택한 시기에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북한은 핵고도화를 지속한다.

[186] P_{no}로 인해 북한은 일부 핵능력을 보유한 채,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경제 중심이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중국으로 이동한다면, 미 핵우산을 무력화하는 P_{na}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식 3)의 조건에서, 핵보유희망국이 ‘ λ_1 수락+ λ_α 추가제안’을 선택하면, 핵용인국은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1’ 에서 두가지 대안들(‘현상유지’와 ‘λ_1제안’)을 가지며, 다음 조건에서 ‘λ_1제안’을 선택한다.[187] (산식은 보론 4 참조)

$$\lambda_1 \geq \frac{P_{ul} - C_{ut}}{P_{ua}} \qquad \text{(식 4)}$$

결과적으로, 【표 3-3】과 같이 (식 1), (식 2 의 반대조건), (식 3)과 (식 4)를 만족할 때, ‘(a) 한계용인’ 균형이 성립된다. 【그림 3-3】은 다른 균형들과 ‘(a) 한계용인’ 균형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표 3-3】‘(a)한계용인’ 균형의 전략과 관련 식

플레이어	전략	조건 (식)
핵용인국	λ_1 제안 (핵용인국 1)	$\lambda_1 \geq \frac{P_{ul} - C_{ut}}{P_{ua}}$ (식 4)
	λ_1수락 + λ_α거절 (핵용인국 2)	$\pi > \pi_2$ (식 2 의반대조건)
핵보유희망국	λ_1수락 + λ_α추가제안	$\lambda_1 \geq \frac{P_{na} - C_{ns}}{P_{no}}$ (식 3)
동맹	핵개발	$\pi \geq \pi_1$ (식 1)

[187]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직접적이지 않고 미국의 도발 없이 북한이 선제 핵공격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P_{ul} 을 희생하면서 북핵을 통제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식4)의 $\frac{P_{ul} - C_{ut}}{P_{uc}}$ 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값을 유지할 것이다.

※필자 작성

‘(a)한계용인’ 균형은 미국에게는 ICBM, SLBM 등 핵위협에 대한 심각성이나 그에 상응하는 안보위협사건으로 인한 사활적이익에 대한 우려가,[188] 북한에게는 경제적이익이 협상의 동기가 될 것이다.[189] ‘(a)한계용인’ 균형에서 일어나는 용인은 전면적이고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 묵인’ 형태가 될 것이다. ‘소극성’은 동맹을 포함한 새로운 핵보유희망국에 의한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고, ‘묵인’의 이유는 핵보유희망국의 직접 도발이나 핵무기, 핵기술, 핵물질의 테러집단 혹은 적성국가로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190]

---

[188] 이러한 북미 간의 협정은 빌 클린턴 당시의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에 의한 핵문제 해결절차와 유사하다. 페리 보고서는 남북한, 일본과의 정책 조율을 거쳐 작성됐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면 미국과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거부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1단계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체제 해제, 2단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3단계는 북미, 일북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문화일보』, 2008년 1월7일.

남아시아의 핵사용 위험성으로 첫째, 인도와 파키스탄이 계획적으로 핵무기를 사용, 둘째 우발적인 핵전쟁, 셋째 권위없는 자에 의한 핵무기 사용을 꼽았다. 국내 권력 변동에 따라 핵장악력을 정부가 가지느냐 군이 가지는지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곤도 다카후미, 김선희 역, “파키스탄의 핵무기개발 문제와 그 위상,” 『핵확산 문제와 아시아』 (서울: 문, 2012), p. 156.

[189] 북한은 경제개방이 체제생존과 영구화에 오히려 부정적이고, 반면 핵무력의 고도화는 체제생존과 영구화에 긍정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을 통한 안보와 경제안보의 딜레마를 풀기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김황록,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상대하기』(서울: 블루리본, 2020), pp. 284-285.

[190] 2017년 11월 29일, 미국 전역에 도달가능한 13,000 km의 사거리를 보유한 강압수단인 화성-15형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미본토에 대한 위협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김황록,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상대하기』(서울: 블루리본,

그러나, $\lambda_1 \geq \frac{P_{ul} - C_{ut}}{P_{ua}}$ (식 4)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핵확산방지리더십(P_{ul})'이 시급하다는 여론 내지 공감대가 형성되는 동시에, '북핵 위협(C_{ut})'이 줄어들고 '북핵통제를 포함하는 미국의 이익(P_{ua})'이 줄어드는 경우, 예를 들어 북한이 유화정책으로 일관하거나, 미 적성국가나 테러집단의 위협이 줄어들거나, 미사일 다층방어 시스템의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북핵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λ 의 수준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한계용인' 균형은 도래하기 힘들어 진다.[191]

핵보유희망국은 경제재제를 받으면서도 핵 능력을 계속 고도화할 것이다. 핵보유희망국의 핵 고도화는 λ_1 이란 대가에 의해 멈출 것이다. 핵용인국이 제안하는 λ_1 의 수준이 낮다면, 'λ_1 거절'을 선택한다. ((식 3)의 반대조건, $\lambda_1 < \frac{P_{na} - C_{ns}}{P_{no}}$)은 【그림 3-4】에서 '가' 영역에 해당한다. 핵용인국 입장에서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1'에서 '현상유지'를 선택한 경우($P_{ul} - C_{ut}$)보다 명백하게 낮은 보수($P_{ul} - C_{ut} - C_{ud}$)를 제공하므로 핵보유희망국이 'λ_1 거절'을 선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핵용인국은 'λ_1 제안' 조차 하지 않을 것이므로 '가'는 도달 불가능하다.

2020), p. 235

191 북한이 '한계용인' 단계를 선호하거나 현재의 제재 국면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에 대한 도발과 핵위협을 멈출 수 없다. 북한은 위협수준을 높임으로써 보다 낮은 λ(북한의 양보) 수준으로도 '한계용인' 단계 혹은 그와 비슷한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식 3)이 (식 4)보다 낮은 위치를 차지한 것은 미국의 핵확산방지 리더십과 북한이 제공가능한 전략적 가치의 비가 북한의 대비직접공격과 경제개방/제재해제의 비보다 높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은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릴 것이다. 이것은 핵을 어느 정도라도 포기하는 대신 개방과 제재해제를 선택하려 했던 최근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192] 국제 정세의 변화는 그렇지 않은 환경도 만들어낼 것이다. (식 3)의 λ 수준이 (식 4)보다 높은 조건은 제 4 절의 두번째 섹션, 【그림 3-5】에서 다룬다.

나. '(b)침묵' 균형

핵용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미련만 남았을 뿐,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든 것이 '침묵' 균형의 특징이다. '침묵' 은 가장 소극적이며, 가장 어정쩡한 묵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 때,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6 자 회담의 주체인 러시아는 새로운 냉전 체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 편에 서있고[193], 중국은 미중 간 패권전쟁이나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의

---

[192]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및 플루토늄 재처리 등 핵시설 완전폐기를 제안하며 그 대가로 2016~17년간 적용된 유엔안보리의 결의 11건중 민생·민수분야 5건의 해제를 요구했다. 김강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현황과 전망," 『한국과 세계』, 2(1) (2020), pp. 5-42.

[193] 2023년 9월 1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0분이나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달라진 러시아의 절박한 처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진 (2023년 09월 23일), "文 땐 2시간 지각한 푸틴, 김정은 회담엔 30분 먼저 왔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2228 (검색일: 2023년9월16일).

갈등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북핵에 대한 논의를 유예하고 있다.[194]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경제제재 등 여러가지 고립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침묵' 균형에서는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195]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미국 마저도 소극적 묵인의 주체가 된다.

핵용인국은 '현상유지' 시의 보수($P_{ul} - C_{ut}$)가 비교적 낮으므로 '현상유지'를 선택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식 4)의 반대조건, $\lambda_1 < \frac{P_{ul} - C_{ut}}{P_{ua}}$)에서[196], 핵용인국은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1'에서 'λ_1 제안' 대신 '현상유지'를 선택하고, 【표 3-4】와 같은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b)침묵' 균형이

[194] 중국은 28일 대북제재 감시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투표에서 기권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표결은 부결돼 전문가 패널은 활동을 중단한다. 중국이 북한 제재 대열을 이탈해 북핵을 '미·중 경쟁'의 지렛대로 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국입장에서 대북한 제재는 사문화된 것이나 같다. 북한의 강고한 핵개발 의지와 북·러 연대를 감안할 때 제재를 통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힘 빠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기권한 중국의 속내는?", 『경향신문』, 2024년 03월 29일; https://www.khan.co.kr/world/china/article/202403291750001 (검색일: 2024년 06월 06일).

[195]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3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자체의 핵우산을 보유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이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상찮은 북핵 묵인·타협론, 비핵화의 위기", 『The Joongang』, 2024년 03월 1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5599#home (검색일: 2024.년 06월 06일).

[196] (식4)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선제 공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핵통제보다는 핵확산 리더십 유지가 미국에게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북한의 미 본토에 대한 핵위협이 완성되거나 핵기술, 핵무기, 핵물질의 이전에 대한 우려는 북핵 통제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럴 경우, λ의 수준은 낮아진다.

성립된다. 【그림 3-4】는 '(b)침묵' 균형을 다른 균형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표 3-4】'(b)침묵' 균형의 전략과 관련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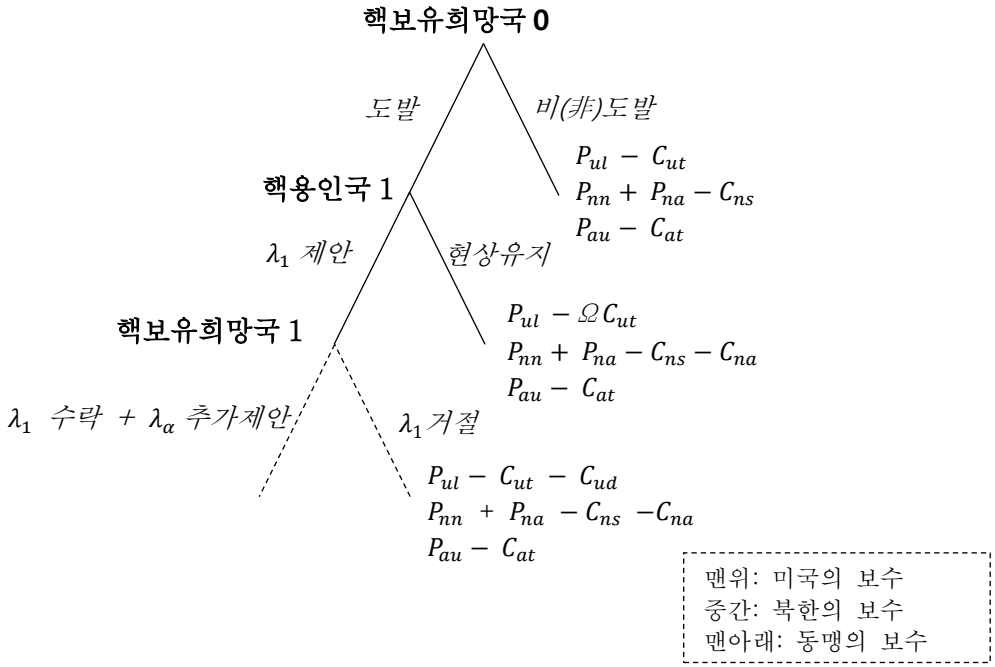
플레이어	전략	조건 (식)
핵용인국	현상유지 (핵용인국 1),	$\lambda_1 < \frac{P_{ul} - C_{ut}}{P_{ua}}$ (식 4 의 반대조건)
	λ_1수락 + λ_α 거절 (핵용인국 2)	$\pi > \pi_2$(식 2 의반대조건)
핵보유희망국	λ_1수락 + λ_α 추가제안	$\lambda_1 \geq \frac{P_{na} - C_{ns}}{P_{no}}$ (식 3)
동맹	핵개발	$\pi \geq \pi_1$ (식 1)

※필자 작성

의사결정지점 '핵용인국 1'의 상단에 핵보유희망국의 전략을 추가한 【그림 3-2】는 핵보유희망국의 '도발'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핵보유희망국 0'는 '도발'과 '비(非)도발'이라는 선택지를 가지며, '도발'을 선택하면 의사결정지점, '핵용인국 1'은 'λ_1 제안'과 '현상유지'라는 선택지를 갖는다.[197]

[197] 핵보유희망국이 도발을 했을 때, 핵용인국이 침묵을 선택하면 보수는 도발 강도인 Ω 만큼 북핵 위협으로 인한 손실(ΩC_{ut})은 증가한다. 여기서, Ω는 핵용인희망국의 위협지수로 1보다 큰 값이다.

【그림 3-2】 핵보유희망국의 '도발' 효과



※필자 작성

핵용인국이 '현상유지'를 선택하면, 핵보유희망국의 보수는 C_{na}[198] 때문에 '핵보유희망국 0'에서 '비도발'을 선택했을 때보다 낮다. 그러므로, 핵보유희망국이 '도발'을 선택하는 것은 '핵용인국 1'이 'λ_1 제안'을 선택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199] 그러므로, 핵보유희망국은 향후의 북미 협상에서

[198] C_{na}는 계속된 장거리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추가적 경제제재로 인한 손실에 해당한다.

[199] 북한의 모험주의의 원인으로 이정철은 후계안정화 및 (시장)체제 통제를 내부 불만 극복, 대미 억지력 확보 및 '현상유지', 분쟁지역화와 평화협정 성취를 위한 미국과의 직접 담판, 경제건설의 동력 및 경제지원 확보로 보고 있다. 이정철, "북한의 공세적 대외정책과 경제확장전략: 핵-경제 병진 노선의 역조합", 『북핵, 오늘과 내일』

협상력을 올리기 위해 도발과 핵 고도화를 지속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용인국이 이 위협을 낮게 평가하는 한, '침묵'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핵용인국이 '현상유지'를 선택했을 때, 핵보유희망국이 추가로 받는 손실인 C_{na} (추가적 제재로 인한 손실)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제재에 적응하거나 제재에 대한 우회로를 마련하는 등 제재 효과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00]

2.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 $[\pi_1 \leq \pi \leq \pi_2]$

가. '(c)침묵' 균형

(식 1) 조건에도 불구하고, (식 2) 조건, $\pi \leq \pi_2$ 에서는 '핵용인'이 선택된다.[201] (식 2)의 조건에서 핵보유희망국은 의사결정점, '핵보유희망국'에서 두가지

경남대극동문제 연구소편, (서울, 늘품플러스 ;2008), p. 92-95.

그러므로, 핵보유희망국은 도발을 멈추지 않는 것이며,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의 도발 명분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평화나 종전선언을 통해 대북 위협의 중지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대북 위협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력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발의 효과성을 무력화한다는 차원에서 핵보유희망국의 도발을 일관성 있게 무시하면 될 것이다.

200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의 미진함에 대한 논거는 첫째, 1차 핵실험 이후의 국제경제제재에 이미 생존기술을 확보했고, 국제 경제제재에는 허점이 너무 많고, 세계경제의 통합 과정에서 외화를 벌 수 있는 방법(관광, 인력송출 등)을 습득했다. 또한 중국의 행보는 일관되고 엄격한 제재와 거리가 있다. 박영자, "국제사회 대북제재 효과와 북한 동향," 『북한』, (2016), pp. 76-81.

201 미국과 북한 간의 북핵 용인 협상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용인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은 '중국봉쇄에 대한 협조'와 같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안이

대안들('λ_1 수락 + λ_α 추가제안'과 'λ_1 거절')을 가진다. 핵보유희망국은 (식 5)의 조건에서 'λ_1 거절' 대신, 'λ_1 수락 + λ_α 추가제안'을 선택한다. (산식은 보론 5 참조)

$$\lambda_1 \geq \frac{P_{na} - C_{ns} - \pi(P_{nn(w/o\ primacy)} - P_{nn})}{2\,P_{no}} \quad \text{(식 5)}$$

(식 5)의 반대 조건에서 핵보유희망국은 'λ_1 거절'을 선택한다. 핵보유희망국이 'λ_1 거절'을 선택하면 동북아에서 핵우월지위를 지킬 수 있다. 반면, 'λ_1 수락+λ_α 추가제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핵우월지위를 포기하는 대신, 핵용인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핵용인국 주도의 세계 경제질서에 참여할 수 있다.

(식 5)의 조건에서 핵용인국은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1'에서 두가지 대안들('현상유지'와 'λ_1 제안')을 갖는다. 핵용인국은 다음 조건에서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1'에서 'λ_1 제안'을 선택한다. (산식은 보론 6 참조)

$$\lambda_1 \geq \frac{P_{ul} - C_{ut} + \pi\, C_{ua} + C_{up}}{2\,P_{ua}} \quad \text{(식 6)}$$

포함될 것이다. '중국봉쇄'는 북한이 동맹의 일원임에 대한 검증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핵 용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수 정권이 유지되는 일본과 달리,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집권하는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입장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봉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며 일관적인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 또한, 미중 패권경쟁의 승패에 따라서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태도는 변경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표 3-5】와 같이, (식 1), (식 2), (식 5)와 (식 6 의 반대조건)을 만족할 때, '(c)침묵' 균형이 성립된다. 【그림 3-4】는 '(c)침묵' 균형을 다른 균형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표 3-5】'(c)침묵' 균형의 전략과 관련 식

플레이어	전략	조건 (식)
핵용인국	현상유지 (핵용인국 1)	$\lambda_1 < \frac{P_{ul} - C_{ut} + \pi C_{ua} + C_{up}}{2 P_{ua}}$ (식 6 의 반대조건)
	핵용인 (핵용인국 2)	$\pi \leq \pi_2$ (식 2)
핵보유희망국	λ_1수락 + λ_α추가제안	$\lambda_1 \geq \frac{P_{na} - C_{ns} - \pi(P_{nn(w/o\ primacy)} - P_{nn})}{2 P_{no}}$ (식 5)
동맹	핵개발	$\pi \geq \pi_1$ (식 1)

※필자 작성

나. '(d)핵용인' 균형

'(d)핵용인' 균형은 전면적인 핵통제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다 전면적인 북미수교 관계와 경제지원이 제공된다. 핵용인의 두가지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다. 즉, 핵용인 시, 동맹이 핵무장을 하는 경우와 핵을 포기하는 경우다. 이 섹션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고 제 4 절에서 후자를 다룬다.

【표 3-6】과 같이 (식 1), (식 2), (식 5)와 (식 6)을 만족할 때, '(d)핵용인' 균형이 성립된다. 【그림 3-4】와 같이, π의 수준이 $\pi \leq \pi_2$ (식 2)에서 '(d)핵용인' 균형이 선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d)핵용인' 균형의 전략과 관련 식

플레이어	전략	조건 (식)
핵용인국	λ_1 제안 (핵용인국 1)	$\lambda_1 \geq \frac{P_{ul} - C_{ut} + \pi C_{ua} + C_{up}}{2 P_{ua}}$ (식 6)
	핵용인 (핵용인국 2)	$\pi \leq \pi_2$ (식 2)
핵보유희망국	λ_1수락 + λ_α 추가제안	$\lambda_1 \geq \frac{P_{na} - C_{ns} - \pi(P_{nn(w/o\ primacy)} - P_{nn})}{2 P_{no}}$ (식 5)
동맹	핵개발	$\pi \geq \pi_1$ (식 1)

※필자 작성

'(d)핵용인' 균형의 양보수준 (식 6)은 '(a)한계용인' 균형의 양보수준인 $\lambda_1 \geq \frac{P_{ul} - C_{ut}}{P_{ua}}$ (식 4)보다 다소 낮다.[202]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λ 값은 절대치가 아니라 비(比)일 뿐이며 특히, (식 4)와 (식 6)의 항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치는 비교될 수 없다는 점이다.

[202] 두식의 관계는 (식6)과 (식2)의 연립방정식, (식4)과 (식2)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의 선과, 두 식이 (식2) 위의 동일한 점($\pi = \frac{P_{ul} - C_{ut} - C_{up}}{C_{ua}}$)에서 만난다는 것은 식들의 연립방정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식4)와 (식6)을 그리면 (식6)은 (식4)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그림 3-3】참조.

(식 6)을 보면, 핵보유희망국으로부터 기대되는 전략적가치의 기준이 2 배 증가되었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기대하는 λ_2 수준의 핵통제는 λ_1 수준의 핵통제를 포함하며 추가로 북한의 핵운용 전략의 변경이나 과거핵에 대한 통제 등 보다 광범위하고 세밀한 핵통제 매커니즘을 포함한다.[203] 또한, (식 4)가 고려하지 않았던 πC_{ua} (동맹의 방기 손실) 와 와 C_{up} (국내외 정치적 손실)을 추가한 이유는 '핵용인'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이러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204]

【그림 3-4】는 북핵 용인과 관련한 모든 균형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하므로, 균형의 조건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203] 북미가 합의하는 λ_2 수준의 핵통제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핵무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발사체와 탄두를 분리하여 핵 사용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신중한 핵 무기 사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어뢰, 핵지뢰, 핵전자기파, 전술핵, 핵배낭 등 다양한 핵 무기를 단순화하고, 핵 무기 사용 지침을 방어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정영태・홍우택・김태우 등,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서울: 통일연구원, 2014), p. 125

[204] 북미 '핵군축 협상'은 NPT 이후 미국이 유지해온 국제 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며, 북한은 '핵군축 회담'을 핵보유국 지위 확보라고 선전하고 다수의 국가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잠재적 핵보유희망국들에게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미 핵군축협상은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일본, 대만과 같은 국가들이 핵개발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북미 군축협상은 한미동맹 와해의 시작이다," 『아산정책연구원』, 2023년 1월 20일; https://www.asaninst.org/contents/북미-군축협상은-한미동맹-와해의-시작이다/ (검색일: 2024년3월30일).

제 4 절 동맹이 '핵포기'를 선택하는 경우 [$\pi < \pi_1$]

동맹이 핵을 포기하는 경우란 다시 말해, 핵용인국이 핵을 용인해도 핵을 포기하는 편이 핵개발을 시도하는 것보다 나은 보수를 제공할 정도로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1. '(e)핵용인' 균형

동맹은 $\pi \geq \pi_1$ (식 1)의 조건에서 핵무장을 한다. 분자인 C_{ac}는 동맹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을 감안할 때 미미한 수준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C_{ac}의 경제적 비용뿐 아니라, 핵용인국 혹은 우방과의 관계 악화나 국제관계 단절로 인한 비용을 감안하여 우려할만한 수준이 되는 경우, 동맹은 핵용인국이 '핵용인'을 선택해도 핵무장을 포기한다.[205]

(식 1)의 반대 조건에서 동맹이 핵포기를 선택할 때도, 핵용인국은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2'에서 두가지 대안들('핵용인'과 'λ_1 수락 + λ_α 거절')을 갖는다. 핵용인국은 의사결정지점, '핵용인국 2'에서 다음 조건에서 핵을 용인한다. (산식은 보론 7 참조)

$$\lambda_1 \geq \frac{C_{up}}{P_{ua}} \quad \text{(식 7)}$$

[205]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 높은 무역 의존도, 5년 단임의 대통령제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핵을 용인하기 어렵다. 이병철. "'핵 오리엔탈리즘' 관점에서 본 한국 핵무장 담론의 새로운 방향모색,"『 IFES 정책보고서』, 2020.4 (2020), pp. 1-46.

(식 7)을 동맹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핵용인 조건인, $\lambda_1 \geq \frac{P_{ul} - C_{ut} + \pi C_{ua} + C_{up}}{2 P_{ua}}$ (식 6)과 비교하면, 동맹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의 (식 7)은 핵확산이나 동맹의 방기에 의한 손실이 계산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

(식 7)의 조건에서 '핵용인국 2'가 '핵용인'을 선택하면, 핵보유희망국은 의사결정점, '핵보유희망국' 에서 두가지 대안들('λ_1 거절'과 'λ_1 수락 + λ_α 추가제안')을 갖는다. 핵보유희망국이 의사결정점, '핵보유희망국'에서 'λ_1수락 + λ_α 추가제안'을 선택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산식은 보론 8 참조)

$$\lambda_1 \geq \frac{P_{na} - C_{ns}}{2 P_{no}} \quad \text{(식 8)}^{206}$$

$\lambda_1 \geq \frac{P_{na} - C_{ns} - \pi(P_{nn(w/o\ primacy)} - P_{nn})}{2 P_{no}}$ (식 5)에 P_{nn}이 $P_{nn(w/o\ primacy)}$ 보다 높을 것이므로 어떤 π 값이 오든, (식 5)의 λ 는 (식 8)의 λ 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 조건은 【그림 3-3】과 【그림 3-4】에 반영하였다.

(식 8)의 조건에서, 핵보유희망국이 의사결정점, '핵보유희망국'에서 'λ_1수락 + λ_α 추가제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핵용인국은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1'에서 두가지 대안들('현상유지'와 'λ_1 제안')을 가진다. 핵용인국은 다음 조건에서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1'에서 'λ_1 제안'을 선택한다. (산식은 보론 9 참조)

$$\lambda_1 \geq \frac{P_{ul} - C_{ut} + C_{up}}{2 P_{ua}} \quad \text{(식 9)}$$

---

206 $\lambda_1 \geq \frac{P_{na} - C_{ns}}{P_{no}}$ (식3)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그림 3-4】에서 (식8)의 위치는 (식3)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었다.

(식 9)를 $\lambda_1 \geq \frac{P_{ul} - C_{ut} + \pi C_{ua} + C_{up}}{2 P_{ua}}$ (식 6)과 비교했을 때, (식 9)의 λ가 (식 6)의 λ 보다 'πC_{ua}' 만큼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핵용인국은 동맹이 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동맹방기 손실을 핵용인 협상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핵용인을 결정하는 λ 수준 $\lambda_1 \geq \frac{C_{up}}{P_{ua}}$ (식 7)은 한계용인을 결정하는 λ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 다음 섹션에서 다룰 (식 11)은 $\lambda_1 \geq \frac{P_{ul} - C_{ut}}{P_{ua}}$ (식 4)와 동일하다. 따라서,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식 7) > (식 4) = (식 11) ≥ (식 6) > (식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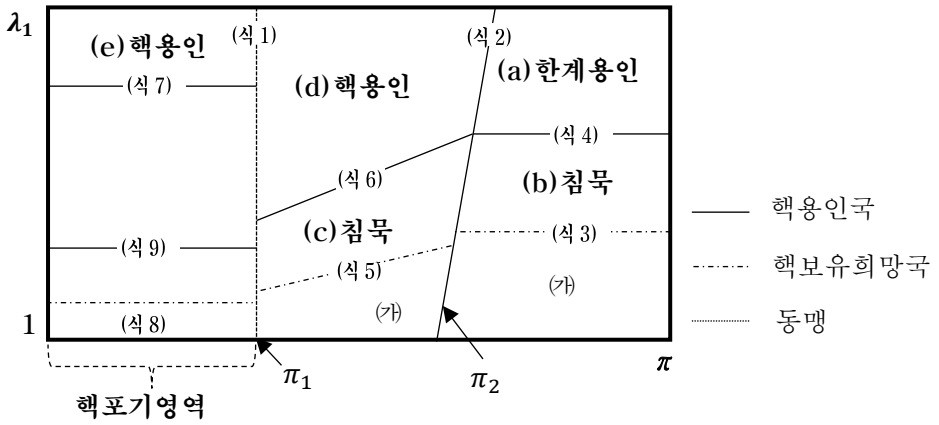
그에 비해, (식 8)은 (식 5)보다 낮고, $\lambda_1 \geq \frac{P_{na} - C_{ns}}{P_{no}}$ (식 3)의 절반 수준이다. (식 5)와 (식 3)의 우열은 비교하기 힘들다.[207] 다음 섹션에서 다룰 (식 10)은 (식 3)과 동일하므로 결과적으로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식 3)= (식 10) > (식 8), (식 5) > (식 8)

따라서, 【그림 3-3】과 같이 (식 4), (식 6)과 (식 9)를 종합적으로 보면 '(e)핵용인' 균형을 결정하는 (식 7)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207] 본 연구는 (식3)이 (식5)보다 높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두 식은 주체는 모두 핵용인희망국이며, 논리적 차별성은 양 식의 구성 성분에 있다. 즉, 동맹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핵용인을 위해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을 고려한다. 반면,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림 3-3】 동맹 핵포기 시의 '(e)핵용인' 균형



※필자 작성

결과적으로, (식 1 의 반대조건), (식 7), (식 8)와 (식 9)를 만족할 때, 【표 3-7】과 같은 동맹이 핵을 포기하는 경우의 '(e)핵용인' 균형이 성립된다. 【그림 3-4】에서 '(e)핵용인' 균형을 다른 균형들과 비교할 수 있다.

【표 3-7】'(e)핵용인' 균형의 전략과 관련 식

플레이어	전략	조건 (식)
핵용인국	λ_1 제안 (핵용인국 1)	$\lambda_1 \geq \frac{P_{ul} - C_{ut} + C_{up}}{2P_{ua}}$ (식 9)
	핵용인 (핵용인국 2)	$\lambda_1 \geq \frac{C_{up}}{P_{ua}}$ (식 7)
핵보유희망국	λ_1수락 + λ_α 추가제안	$\lambda_1 \geq \frac{P_{na} - C_{ns}}{2P_{no}}$ (식 8)
동맹	핵포기	$\pi < \pi_1$ (식 1 의반대조건)

※필자 작성

2. ‘(f)한계용인’과 ‘(g)침묵’ 균형

(식 7)의 반대조건, $\lambda_1 < \frac{C_{up}}{P_{ua}}$ 에서 핵용인국 2 가 ‘λ_1 수락 + λ_α 거절’을 선택하면 핵보유희망국은 의사결정점, ‘핵보유희망국’에서 두가지 대안들(‘ λ_1 거절’과 ‘ λ_1 수락 + λ_α 추가제안’)을 가진다. 핵보유희망국이 의사결정점, ‘핵보유희망국’에서 ‘λ_1 수락 + λ_α 추가제안’을 선택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식 10)은 $\lambda_1 \geq \frac{P_{na} - C_{ns}}{P_{no}}$ (식 3)과 동일하다. (산식은 보론 10 참조)

$$\lambda_1 \geq \frac{P_{na} - C_{ns}}{P_{no}} \quad \text{(식 10)}^{208}$$

(식 10)의 조건에서, 핵보유희망국이 의사결정점, ‘핵보유희망국’에서 ‘λ_1수락 + λ_α 추가제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핵용인국은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1’에서 두가지 대안들(‘현상유지’와 ‘λ_1 제안’)을 가진다. 핵용인국은 다음 조건에서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1’에서 ‘λ_1 제안’을 선택한다. (산식은 보론 11 참조)

$$\lambda_1 \geq \frac{P_{ul} - C_{ut}}{P_{ua}} \quad \text{(식 11)}$$

【그림 3-4】에서 (식 7)의 위치를 볼 때, 동맹이 북핵 용인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한다면, 핵용인국은 $\lambda_1 \geq \frac{P_{ul} - C_{ut} + \pi C_{ua} + C_{up}}{2 P_{ua}}$ (식 6)보다 높은 λ 조건에서

[208] (식3)과 비교할 때, (식10)의 λ 수준은 동일하다.

북핵 용인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식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때의 양보수준은 절대치가 아니므로 구성 성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식 7)에서는 동맹 방기로 인한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그림 3-4】에서 '(f)한계용인' 균형을 다른 균형들과 비교할 수 있다.

【표 3-8】'(f)한계용인' 균형의 전략과 관련 식

플레이어	전략	조건 (식)
핵용인국	λ_1 제안 (핵용인국 1)	$\lambda_1 \geq \frac{P_{ul} - C_{ut}}{P_{ua}}$ (식 11)
	λ_1 수락 + λ_α 거절 (핵용인국 2)	$\lambda_1 < \frac{C_{up}}{P_{ua}}$ (식 7 의 반대조건)
핵보유희망국	λ_1수락 + λ_α 추가제안	$\lambda_1 \geq \frac{P_{na} - C_{ns}}{P_{no}}$ (식 10)
동맹	핵포기	$\pi < \pi_1$ (식 1 의 반대조건)

※필자 작성

결과적으로, 【표 3-9】와 같이 (식 1 의 반대조건), (식 7 의 반대조건), (식 10)과 (식 11 의 반대조건)을 만족할 때 '(g)침묵' 균형이 성립된다.

【표 3-9】'(g)침묵' 균형의 전략과 관련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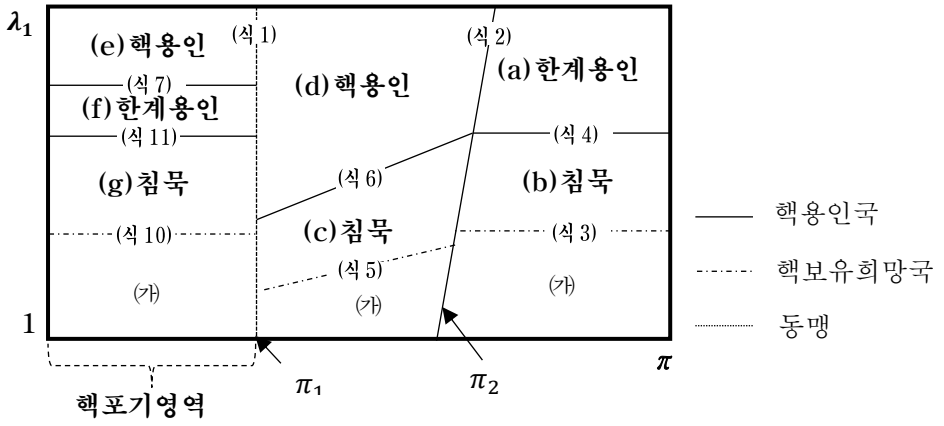
플레이어	전략	조건 (식)
핵용인국	현상유지 (핵용인국 1)	$\lambda_1 < \frac{P_{ul} - C_{ut}}{P_{ua}}$ (식 11 의 반대조건)
	핵용인	$\lambda_1 < \frac{C_{up}}{P_{ua}}$ (식 7 의 반대조건)

	(핵용인국 2)	
핵보유희망국	λ_1수락 + λ_α 추가제안	$\lambda_1 \geq \frac{P_{na} - C_{ns}}{P_{no}}$ (식 10)
동맹	핵포기	$\pi < \pi_1$ (식 1 의 반대조건)

※필자 작성

모든 균형들을 표시하는 【그림 3-4】는 균형 간의 조건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4】 북핵 용인 균형들



※필자 작성

지금까지의 분석은 【그림 3-4】에서 (식 3)과 (식 4)의 위치는 역전되기 힘들다는 가정에 기초하였다. 그 이유는 북한에게 핵(P_{na}) 대비 개방(P_{no})의 비(比)보다, 핵용인국의 핵확산리더로서 의미(P_{ul}) 대비 핵통제(P_{ua})의 비가

크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209] 그러나, 국제 정세의 변화는 【그림 3-5】와 같이 (식 3)과 (식 4)의 위치의 역전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a)한계용인'을 결정하는 것은 핵용인국이 아니라 핵보유희망국이 원하는 λ 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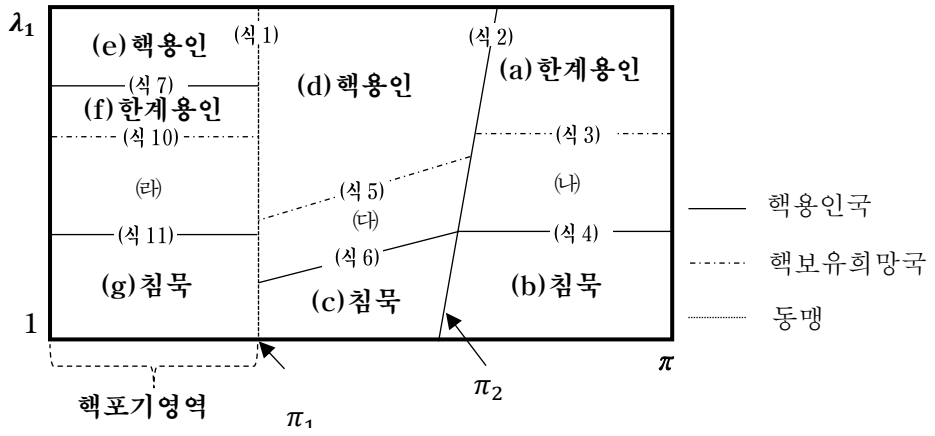
(식 3)과 (식 4)의 역전은 동일한 식들인 (식 10)과 (식 11)의 역전을 의미하고, 이어서 연결되는 식들인 (식 5)과 (식 6)의 역전을 의미한다. 즉, (식 5)와 (식 6)이 역전되면, '(d)핵용인'을 결정하는 것은 핵용인국대신 핵보유희망국이 된다. (식 10)과 (식 11)이 역전되면, '(f)한계용인'은 핵용인국 대신 핵보유희망국이 결정한다. '나', '다', '라' 영역은 핵보유희망국이 원하는 λ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λ_1거절'을 선택하는 영역일 뿐 아니라, 핵용인국 입장에서도 해당 영역이 '현상유지'보다 낮은 보수를 제공하기에 도달할 수 없는 균형이 된다. 마지막 경우의 수는 (식 7)과 (식 10)이 역전되는 경우다. 이 같은 경우, '핵용인'을 위한 λ 수준 마저도 북한이 결정한다.

---

[209] 핵확산리더십은 미국에게 국제 핵질서와 관련한 가치이며, 북핵 통제는 북한이라는 하나의 국가에 국한된 가치일 뿐이다. 핵확산리더십의 가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용하려 했던 경제개방보다는 지대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4)의 위치는 (식3)의 위치보다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신냉전체제를 활용하여 경제개방의 필요성이 줄고,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할수록 식들의 위치는 역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의한 각종 지원을 피원조국의 국가상징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북한은 개혁개방과 연결해 한계를 갖는다. 최은석, 김동엽, "분단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윤대규 편,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파주: 한울, 2016), p. 190-1

【그림 3-5】 북핵 용인 균형들 [(식 3)과 (식 4)가 역전된 모형][210]



※필자 작성

제 5 절 소결

이 장은 북핵 용인 관련국들인 핵용인국(미국), 핵보유희망국(북한), 동맹(한국과 일본)의 세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전개형 게임을 통해 북핵 용인 양상들을 반영하는 다수의 균형들을 도출했다. 전개형 게임에서 내쉬 균형을 찾는 역진귀납법의 원리는 마지막 수(전략)를 기준으로 현재의 수를 결정한다. 본 연구는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용인 양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210] 식들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식7) > (식4) = (식11) ≥ (식6)
- (식3) = (식10), (식5)와 (식3)의 우열은 가릴 수 없음.

게임의 마지막 수는 동맹이 두도록 설계되었다. 핵용인 게임에서 마지막 수는 동맹이 두었지만 첫 수는 핵용인국이 두는 이유는 용인의 주체인 핵용인국이 핵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핵용인 양상을 세가지 경로로 구분한다. 즉, 북핵 용인이 일어나도 핵무장을 포기할 정도로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침묵'-'한계용인'-'핵용인'의 경로가 주어진다. 동맹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는 동맹의 핵무장 가능성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낮은 경우에는 '침묵'-'핵용인'의 경로가 주어지고, 높은 경우에는 '침묵'-'한계용인'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동맹은 핵무장에 대한 태도, 의지, 능력, 준비 정도를 아우르는 '핵무장가능성'을 통해 북핵 용인의 양상과 전개 과정에 해당하는 북핵 용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제 4 장 북핵 용인의 양상과 전개

3 장에서는 도출된 게임 균형들을 통해 북핵 용인의 양상과 유인들을 찾았다. 게임의 내쉬 균형들은 게임 플레이어가 전략을 선택하고 그 전략을 바꿀 동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안정적이다.[211] 그런 뜻에서, 3 장에서 발견한 게임 균형은 북핵 용인 양상에, 균형 전략이 선택한 보수는 북핵 용인의 양상 별 조건에 해당한다.

게임을 통해 다수의 내쉬 균형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균형의 다중성 문제'다.[212]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역할 이론의 '역할 충돌'과 '역할 모호성' 개념을 통해 다음 목적을 달성한다.[213] 먼저, 북핵 용인 균형들 간의 '역할 충돌' 가능성을 비교하여 각 핵용인 양상(혹은 균형)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한다.

---

211 브람스는 내쉬 균형보다 더 안정적인 균형으로 '근시적이지 않은 균형(nonmyopic equilibrium)'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Brams, S. J., & Wittman, D. Nonmyopic Equilibria in 2 × 2 Gam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6*(1 (1981), 39–62. 이를 도중의 역할이 아닌 '최종 역할'을 도출하는데 적용하기도 한다. Akan Malici, Stephen G. Walker, *Role Theory and Role Conflict in U.S-Iran Relations: Enemies of Our Own Making*,(New York: Routledge, 2017), p. 42.

212 균형의 다중성을 해결하기 위해, 직관성을 강조하는 초점(focal point), 초점개념을 이론화한 보수우위(payoff dominance)와 위험우위(risk dominance), 진화(evolution)이 있다. 김영세, 『게임이론,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서울: 박영사, 2020), pp. 134-144. 본 연구는 각 균형의 역할 충돌을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우위 비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필자)

213 선차성은 역할 안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역할안정도는 역할 충돌이 덜한 상태를 의미한다. '역할 집합'은 다수의 역할을 포함하고, '역할 집합'의 안정성은 제도와 권력 분배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했다. Sebastian Harnish, Cornelia Frank, and Hanns W. Maull (eds). *Introduction. In Role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pproaches and Analyses* (Oxon: Routledge 2011), p. 7.

[214] 다음으로, 실현 난이도를 통해, 북핵 용인 전개 과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Breuning, M 의 '행위자-구조 인지모델 (Cognitive Model of the Agent-Structure Relationship)'을 바탕으로 북핵 용인의 양상 별 유인(혹은 조건)을 보충한다.

제 1 절 균형 간 '선차성' 비교

1. 국가의 '역할 충돌'과 균형 간의 '선차성'

가. 국가의 '역할 충돌'

행위자 속에 잠재하는 역할 레퍼토리 속의 역할들은 끝없이 경쟁한다. 국가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주역할과 보조역할의 관계는 평화롭지 않으며, 두개 이상의 양립 불가능한 기대들이 동시에 출현하면 '역할 충돌(role conflict)'이 일어난다.[215] 행위자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역할은 다른 역할로 교체되며

---

[214] 역할이론이 '역할 충돌'과 '역할 모호성'을 통해 '역할 전환'의 유인을 찾듯이, 제도주의는 '역할 전환'에 해당하는 '제도변화'의 유인을 설명한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긍정적 환류(자기강화요인)와 부정적 환류(자기부정요인)로 설명했고, 합리적선택 제도주의 관점에서는 균형을 파괴하는 새 외부변수의 등장과 행위주체의 변화를 주요인으로 본다.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는 유사한 형태와 구조를 받아들이도록 제도가 받는 압력으로 설명했다. 김태은, 『신제도주의-권력, 집단행동 딜레마, 동형화』(서울:대영문화사, 2023), pp. 58-68.

[215] 역할 충돌은 A의 역할기대가 B의 역할기대와 무효화하거나 모순됨으로써, 한 역할 수행이 다른 역할 수행을 배제할 때 일어난다. Walker, S, *Role Theory and Foreign Policy Analysis: An Evaluation. In Role Theory and Foreign Policy Analysis*, ed. S. Walker, 241-59. (Durham:

이러한 ‘역할 전환(role change)’의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 집합 (role-set) 내부의 역할 충돌은 ‘역할 전환’을 일으킨다.[216] 둘째, 역할의 구성이 복잡해지면 역할에 대한 창조적 해석을 낳고, 이것이 ‘역할 전환’ 또는 ‘새로운 역할 학습(role learning)’의 원인이 된다.[217] 셋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행위를 유발하기에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할 때 발생하는 ‘역할 모호성(role ambiguity)’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218] 이러한 원인들을 매개로 한 ‘역할 전환’ 메커니즘은 게임에서 찾은 ‘균형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

Duke University Press, 1987), p. 86.

[216] Aggestam, Lisbeth, *Role Theory and European foreign policy: A framework of analysis. In The European Union's Roles in International Politics: Concepts and Analysis*, edited by Ole Elgstrom and Michael Smith. (London: Routledge, 2006), p. 23.

[217] Harnisch, Sebastian. 2012. Conceptualizing in the minefield: Role Theory and foreign policy learning. *Foreign Policy Analysis*, Vol. 8, No. 1. 49.

Sarbin 과 Allen은 ‘역할 충돌’을 해결하는 네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즉, 기간 내 두개 이상의 역할 병존, 두개 이상의 역할 결합, 두개 이상의 역할의 결합 없는 상호침투(interpenetration), 새로운 역할 선택(역할 전이)이다. Sarbin, T., and V. Allen, *Role Theory. I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ed. G. Lindsey and E. Aronson,. (Reading: Addison-Wesley, 1968), pp. 501-503.

[218] 사회체제의 문제는 역할 모호성 외에, 역할들이 상호 어울리지 않을 때 발생하는 ‘역할 통합실패(role malintegration)’, 통합적이지 않은 역할들을 계속해서 수행할 때 발생하는 ‘역할 단절(role discontinuity)’, 너무 많은 기대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역할 과부하(role overload)’ 가 있다. Bruce Biddle, “Recent development in role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86), pp. 83.

나. '역할 충돌'과 균형들의 '선차성' 비교

【표 4-1】을 통해 비핵화 혹은 핵용인과 관련하여 관련 국가들의 손익을 보자. 숫자(①~⑥)가 낮을수록 국가의 보수는 우수하다. 우선, ㉮ 도메인은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한 영역이고, 3 장의 게임 균형들은 ㉯ 도메인에 속한다. 이 영역에서 북한은 핵을 유지한다. 북핵에 대해 국제사회의 전면적 제재가 가해지는 ⓒ가 현재이므로, 북핵 용인 단계는 ⓒ인 '침묵' 균형에서 시작한다.

【표 4-1】비핵화와 북핵 용인 비교

<table>
<tr><th colspan="2">결정 항목</th><th>북한보수</th><th>미국보수</th><th>동맹보수</th></tr>
<tr><td rowspan="2">㉮북한 핵무장 포기</td><td>ⓐ예방 전쟁</td><td>⑤</td><td>⑤</td><td>⑤</td></tr>
<tr><td>ⓑ비핵화 수용</td><td>④</td><td>②</td><td>②</td></tr>
<tr><td rowspan="3">㉯북한 핵무장 (게임 균형들)</td><td>ⓒ'침묵' 균형</td><td colspan="3" rowspan="2">㉰ 우선순위가 모호한 영역</td></tr>
<tr><td>ⓓ'한계용인'균형</td></tr>
<tr><td>ⓔ'핵용인' 균형 (동맹의 핵무장)</td><td>①</td><td></td><td>①</td></tr>
</table>

※필자 작성

ⓐ는 모든 국가들에게 가장 낮은 보수를 제공하는 '열등 전략'이다.[219]

[219] '예방전쟁'은 핵개발의 초기 단계에 효과적이며, 핵에 대한 잠재력까지 완전히 파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케네스 왈츠, 임상순 역, "핵 무기가 전파될수록 세계는 더 나아질 것이다", 『핵 무기 전파, 그 끝없는 논쟁』 (서울: 박영사, 2022), pp. 21-22.

미국은 자국의 이해가 결정적으로 위협받는다고 느끼거나 어떤 국가도 자신을 상대할

동맹과 북한에게 ⓔ는 핵무장을 통해 '생존'이라는 사활적 이익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최상의 보수를 얻게 한다.[220] 북한 입장에서, ⓑ는 안보를 적국(미국)에게 맡겨야 하므로 ⓐ 다음으로 낮은 보수를 얻는다. 반면, ⓑ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과 동맹의 핵을 한꺼번에 저지할 수 있으므로 가장 높은 보수를 얻게 한다.[221] 동맹도 ⓑ가 ⓔ 다음의 보수를 제공한다. 그 이유는

수 없는 국면에서 예방공격을 검토한 적이 있지만, 그러한 대응은 예외적이었고 대체로 CIA의 조직적 활동이나 공식적 외교채널을 통해 정치적으로 반미국가나 친미국가 내의 반대세력을 통제해왔다. 그러한 방식의 개입이 먹히지 않을 경우, 국지전을 유도해왔다. 김동춘,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서울: 창비, 2005), p. 81.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한 1차 북핵 위기 시, 북한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 장호근은 다음 네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대한 준비부족, 둘째, 플루토늄의 은닉 장소를 모름, 셋째, 북한의 강경 대응, 넷째, 동북아 이해 당사국의 반대이다. 장호근, 『예방외교-조기경보 문제로 살펴본 한국전쟁과 제1차 북한핵 위기』,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p. 276.

미국의 대북폭격이 가까스로 철회됐던 1994년 위기 당시에, 대통령이던 김영삼은 주미대사 James Laney에게 영변 원자로 폭격으로 전쟁발발 시, 65만 한국군은 단 한사람도 미국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로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남북 간 전쟁은 없다. ・・・우리 땅에서 전쟁을 벌이려는 미국의 계획을 비판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개번 맥코맥, 박성준 역,『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서울: 이카루스미디어, 2006), p. 175.

[220] 파키스탄의 경험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1998년 인도 핵실험에 대해 격론 끝에 경제가 어려운 경제가 더욱 타격을 받아도 국민의 여론과 전략적 이해를 고려할 때 핵실험을 감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태형, "파키스탄의 핵 보유 이후 전략변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p. 307.

[221] 동맹도 핵을 통한 안전 확보가 가장 높은 보수를 제공하고 다음으로 ⓑ가 북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선의 보수를 제공한다.

핵 보유와 같이 다양한 이익[222]은 아니지만, 비핵화를 통해 사활적 이인인 안보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도메인은 국가 별로 선호도가 다르다. 북한 입장에서, 전면적 제재가 가해지는 ⓒ와 부분적 핵용인과 부분적 제재해제가 이루어지지만 개방으로 인해 정권의 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는 ⓓ간의 보수우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223] 게다가 북한은 ⓓ를 위한 협상 결과로,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상실하면 동맹에 대한 핵우산의 억지 효과가 증강되기 때문이다.[224] 유사한 딜레마는 동맹에게도 있다. 사실상, 북핵 용인 경로의 첫 단계로,

---

[222] 프랑스는 물리적 방어 역량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율성을 위해 핵을 보유하고자 했다. 이것은 후견국가의 안보 공약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경성 공약과 더불어 연성 공약이 보완돼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재원, "동맹의 안보 공약과 핵확산: 한미동맹과 북중동맹 사례 연구," 『국제지역연구』, 32.2 (2023), pp. 117-140.

[223] 북한은 개혁 및 개방정책은 체제의 원심력으로 작동하여 즉 외부와 교류를 통해 체제 응집성이 약화함으로써 체제전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류길재, “김정일 정권하 북한의 개방정책과 안보정책,” 『전략논총』, 9(1998), pp. 61-117.

정당성 기반이 취약한 독재정체는 ‘적대관념’을 이용해 주민을 동원하고 체제결속력을 높인다. 그러나, 국가가 ‘개방된 국경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적대관념’의 해체는 ‘이념적 정당성’을 흔들어 구성원은 정권을 불신하고 이는 정권안보를 훼손하게 된다. 김태현, “적대관념과 정권안보: 동독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국가전략』, 25(2) (2019), pp. 119-145.

[224] 당연하게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처럼, 미국도 서울을 지킬 목적으로 뉴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핵 능력이 고도화하자 ‘핵우산’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다. 북한이 SLBM이나 ICBM을 완성한다면 미국은 한국 포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다. 박휘락. 『북핵외통수-비핵화에서 핵균형으로』 (서울: 북코리아, 2022), p. 239. 즉, 북한의 핵 고도화는 미국의 동맹에 대한 핵우산을 손상시킬 수 있다.

비핵화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하는 ⓓ가 비핵화의 끈을 놓지 않은 ⓒ보다 안보 측면에서 낫다고 단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는 단기적으로 평화체제의 구축과 장거리미사일의 폐기 등으로 미국 핵우산의 억지력을 증가시키지만, 북핵 위협에 대한 궁극적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다. 즉, ⓓ와 ⓔ가 장래의 핵보유희망국들에게 핵용인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여 핵확산방지 리더십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논의를 통해 확정된 것은 북핵 용인 단계에서 현재 단계인 ⓒ가 첫 단계이고, ⓓ 또는 ⓔ가 다음 단계라는 것뿐이다. ⓓ 또는 ⓔ 속에서, 모든 관련국들은 딜레마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225]

3 장의 게임 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λ 의 크기는 대부분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크기의 비교가 기대만큼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λ 는 절대치가 아니라 단지 순서변수 간의 상대적인 비(比)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각 용인 양상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고, 또한 북핵 용인의 전개 과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각 균형 간의 실현 난이도 즉 선차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λ 의 크기가 양상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할이론의 '역할 충돌'이나 '역할

[225] Ikenberry, G. John의 제도주의적 설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제도적 구조는 집단의 조직적 특성과 행위자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규칙 및 규범이고, 진화를 원하는 사회적 권력 때문에 한번 형성된 제도는 변화가 어렵다. 또한, 과거의 역사적 상황은 현재 무엇이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이 바람직한 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Ikenberry, G. J. (1988).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1), pp. 219–243. http://www.jstor.org/stable/2706775 (검색일: 2024년 2월5일).

모호성’ 개념을 활용한다.

역할 이론의 관점에서 【표 4-1】을 다시 보자. 미국은 현재 ⓒ에서 북핵에 대해 비핵화를 통한 안보를 꾀하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미국의 ‘균형자’ 역할은 동맹의 ‘역할 기대’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그러므로 ⓒ의 ‘침묵’ 균형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226] 그러나, ⓒ에서 ⓓ로 이행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역할 내 충돌’과 더불어 ‘역할 간 충돌’을 야기한다.[227] 즉, 미국은 ⓓ를 통해 미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차단하는 대신, 핵확산방지 리더십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는 ‘소프트파워에 의해 안보를 개선하려는 미국의 지위’[228] 내부에서 핵확산방지 리더십을 원하는 역할 기대와 그러한 기대를 후순위로 하는 대신 북한의 핵위협을 통제하기를 바라는 역할 기대가 상충되어 ‘역할 내 충돌’이 일어난다. 또한, 이념과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며 테러 지원국인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교도관’ 혹은 ‘패권국’의 비우호적 역할과 평화협정 대상국으로서 ‘파트너’라는

---

[226] 이 기간을 정확하게 추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면서 그 가치와 협상력 증가로 비핵화나 핵용인 협상에서 북한의 요구수준도 까다로워질 것이다. 이것은 핵관련 협상이 점점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227] 역할과 다수의 역할을 포함하는 역할-셋들(role-sets)은 (그 생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할 내 충돌’(타자와 자아의 기대 충돌, 하나의 지위에 대한 두개의 역할 간의 갈등상황)과 (이미 생성된) ‘역할 간 충돌(다른 지위에 대한 다른 역할 간의 갈등상황)’ 가능성을 갖는다. Sebastian Harnisch, S. Berstick, and J. Gottwald, *China’s international roles* (New York: Routledge, 2016), p. 6.

[228] 【표 2-3】미국의 역할들’에서 균형자라는 역할 위치를 말한다.

우호적 역할은 '역할 간 충돌'을 일으킨다.[229] 이러한 역할 충돌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로 전환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든다.

이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다. ⓓ는 미국에 대해 유지했던 '반항아'의 역할을 약화시킴으로써 '역할 모호성'을 갖게 하며, 이것은 안보나 자력갱생 등을 위한 내부결집과 동원을 어렵게 하므로 북한 역시 ⓓ로의 전환을 주저하게 된다. 북한은 구심적 집단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유일적 영도체제를 추구한다. 폴라메나쯔는 이데올로기의 네가지 정치적 목적을 제시했다. 즉, 이데올로기는 집단을 일체화하고 민중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조직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활용된다.[230] 북한에서 통치 이념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231] 정책이나 정세 변화가 북한의 주축인 이념을 흔들 수 있다면, 구성원이 겪는 역할의 충돌이나 모호성이 일으키는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즉, 북한에서

---

[229] 이러한 역할 충돌은 미국이 북한 내 인권이나 민주화 수준에 대한 불만이 많은 미국내 유권자와 후원자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거나, 동맹의 안보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역할 전환을 시도할 때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인도-파키스탄 사례도 동일하다.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인도 아대륙이 지정학적으로 요충지라는 점 등은 역할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

[230] 존 폴리메나쯔(John Plamenatz), 진덕규 역,『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1982), p. 32.

[231] 세종연구소에서 2002~2005년 사이, 탈북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와 '매우 높다'가 49.4%이고, '낮다'와 '매우 낮다'는 19.5%로 나타났다. 정성장, "통치이념",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편, 『북한의 사상과 역사인식』 (서울:한울아카데미, 2006), p. 59.

정책의 변동은 새로운 이념의 설계 혹은 수정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232]

북한은 ⓓ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통제를 수용하는 대신, 제재나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협상의 교환조건은 북한 내부에서 미국과 '라이벌' 관계를 원하는 세력과 '파트너' 관계를 원하는 세력 간의 팽팽한 긴장과 함께 '역할 간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이 핵용인 과정에서 내외부의 여론과 동맹의 눈치를 보듯이, 북한도 핵용인이 원인이 되는 북한의 역할과 내부 청중들이 지도부에게 기대하는 역할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동맹의 입장에서도 ⓓ에서 조성된 평화 무드는 그야말로 분위기일 뿐 안보를 영속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북한과 주권경쟁을 벌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

[232] 북한이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할 때, 4항견지와 같이 고수할 이념가치가 무엇일까? 이 때, 순수이데올로기로서 "주체 사상"이 포함될 것이다. 북한은 개혁개방이 체제에 가할 부정적 영향 때문에 주저하겠지만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체제안정이 보장되면 적극적 개혁개방을 선택하고 자기정당화를 위해 실천이데올로기에서 획기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곽승지,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주체사상의 이론체계" 『북한의 사상과 역사인식』(서울:한울아카데미, 2006), p. 122.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해온 수십년의 력사에서 한번도 정치적 불안정과 동요가 있은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지만 우리의 사회주의는 그들의 비렬한 공격과 비방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따라 계속 힘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조선중앙년감』(평양:조선중앙통신사, 1992), p. 62-83.

‘라이벌’과 ‘파트너’의 역할이 충돌한다.[233]

인도・파키스탄 수준의 핵용인에 해당하는 ⓔ는 핵확산방지 리더인 미국에게 ⓓ보다 치명적인 ‘역할 충돌’을 일으킨다. ⓔ는 북미 간에 ‘파트너-파트너’ 관계를 정립시키고, 동맹은 주권경쟁 중인 북한에 대한 역할 구상과 역할 결정에 혼동을 겪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피보호자’인 동맹은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자유인’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은 ⓔ가 가장 부담스럽다.

다. 균형 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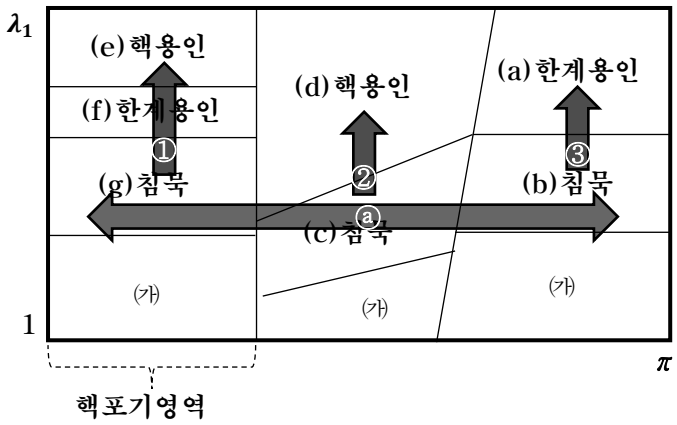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표는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에 따른 북핵 용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게임분석을 위한 역진귀납법의 원리에 따라 마지막 전략 마디에 기준이 되는 동맹의 핵무장가능성(π)이 배치되었다. 그러므로 【그림 4-1】과 같이, 동맹이 선택한 π 에 따라서, ①, ②, ③과 같은 북핵 용인의 행로가 결정된다. 그런데, 동맹과 핵용인국의 역량을 고려할 때, λ 와 π 의 이동은 기술적, 경제적 변수보다는 정치적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234]

---

[233] 정권의 성격(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역할 충돌 양상과 수준은 달라질 것이다. 또한 남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34] π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미국의 북핵 억지효과의 하락, 북한의 도발 등을 들 수 있고, π가 감소할 수 있는 원인으로 북핵 개발을 막는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원인들과 함께, 기존 핵 강대국의 견제, 핵경쟁의 회피, 국제 핵 확산 방지 레짐의 출현 또는 성장을 들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림 4-1】 북핵 용인 균형 간 전환



※필자 작성

대규모 투자에 의한 집합행위나 인식의 제약이 초래하는 '경로의존성' 때문에 한번 정해진 λ 와 π 는 쉽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235] 그러나, λ 와 π 는 매몰비용에 의한 경로의존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갖는 '유연성' 때문에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다.[236] 그러한 증감이 북핵 용인 양상의 전환을 결정하는데, 국제정세와 다양한 환경 조건 때문에 한 양상이 생략되거나, 이전 양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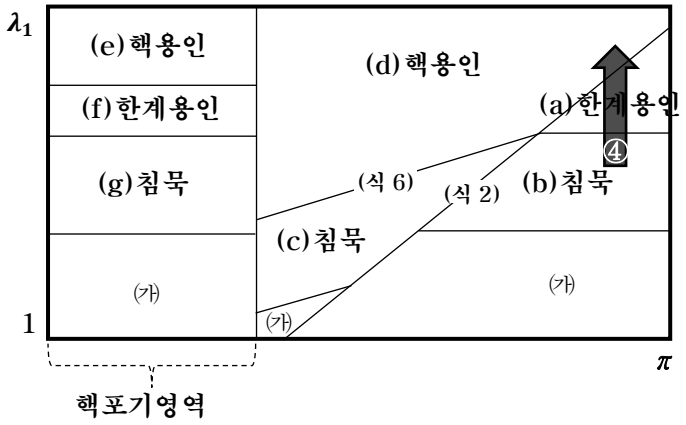
[235] (대규모 투자에 의해 결정되어 돌이키기 힘든) 집합행위의 문제, (원래 강한 권력자가 권력을 더 강하게 하는) 권력 불균형 문제, (인식을 바꾸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현실 및 인식의 제약, (한번 만들어진 제도와 정책을 바꾸기 힘든) 제도의 점착성, 제도의 상호의존성으로 제도는 경로의존성을 갖게 되고 따라서, 반대방향의 전환은 쉽지 않게 된다. 하연섭, 『제도분석』(서울:다산출판사, 2004), pp. 179-183.

[236] 정책 결정자가 첫번째 외교 행위도 합리성을 전제로 했지만, 중간에 다른 메뉴로 변경된 외교 행위도 합리성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김기정・김정섭・남궁곤 등, 『미중 경쟁과 한국의 외교 유연성』,(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p.74.

후퇴하거나, 아니면 무한히 정체될 수 있다.[237] ①은 동맹이 핵을 포기하면, '침묵', '한계용인' 그리고 '핵용인'과 같은 다양한 북핵 용인 유형들이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②는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핵용인' 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③은 동맹의 핵무장 확률이 높을 때로, '핵용인' 대신 '한계용인' 균형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lambda_1 \geq \frac{\pi\ C_{ua} + C_{up}}{p_{ua}}$ (식 2) 에서, 핵보유희망국의 전략적가치가 동맹 방기와 국내외적 정치적 손실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라면 (식 2)의 기울기는 【그림 4-2】와 같이 완만해질 수 있다.

【그림 4-2】 [(식 2)의 변화를 반영한] 북핵 용인 균형들



[237] π와 λ는 감소할 수 있으며, 상호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맹에게 설득력 없거나 합의되지 않은 λ의 증가는 동맹으로 하여금 π를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핵확산방지 레짐의 출현 또는 성장은 π의 수준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북미 간 핵용인 협상에서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λ를 유연하게 선택하게 한다.

※필자 작성

이 경우, 동맹의 핵무장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식 6)보다 다소 높은 (식 2) 수준으로 λ 를 증가시키기만 하면, 【그림 4-2】의 ④와 같이, '(a)한계용인' 단계뿐 아니라 '(d)핵용인' 단계도 선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절 Breuning 모델에 의한 북핵 용인 유인

경합이나 휴면 중인 역할들은 역할 수행자의 역할 레퍼토리 내에서 번갈아 기능한다.[238] K. J. Holsti 에 의하면, 국가의 역할이 국가정치문화에 광범위한 인식의 뿌리로 작동하여 실현가능한 정책대안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국가행위는 예측될 수 있다고 한다.[239] 이 절에서는 이러한 역할이론의 예측능력을 바탕으로 게임분석에서 찾은 '핵용인의 지속 및 전환 유인'들을 보충한다[240].

[238] Cantir, Cristian and Juliet Kaarbo. 2012. Contested roles and domestic politics: Reflections on Role Theory in foreign policy analysis and IR theory. *Foreign Policy Analysis*, No. 8, 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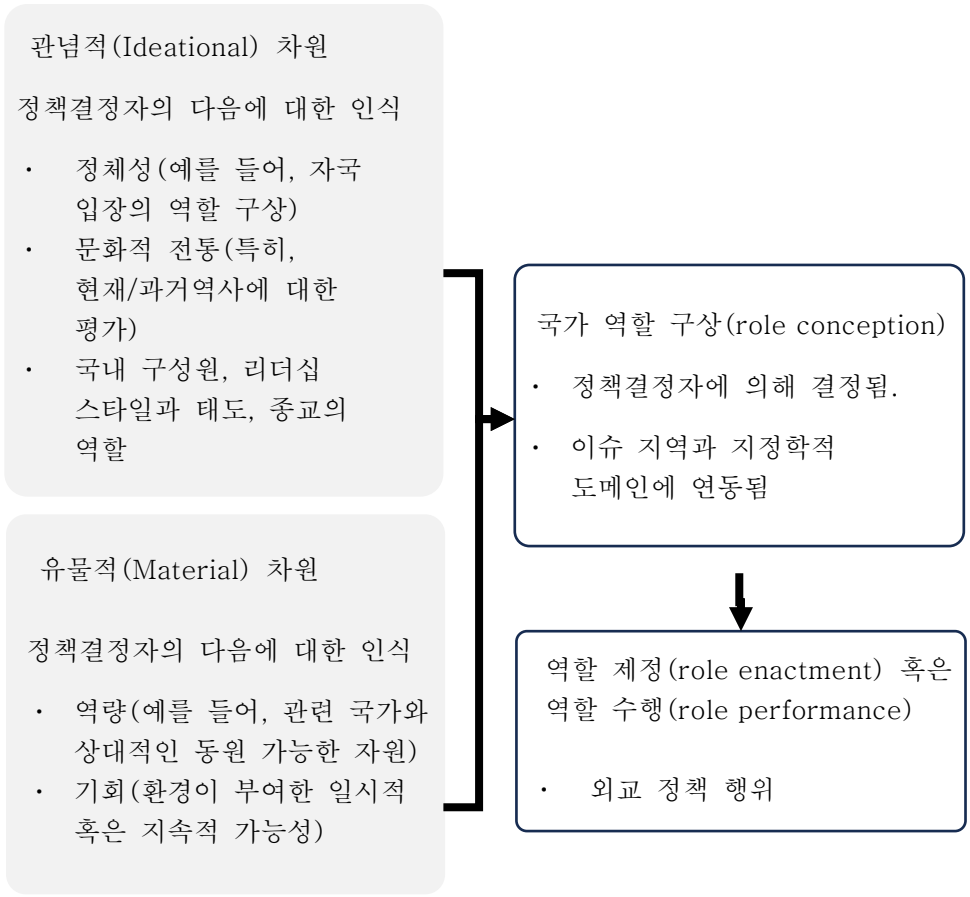
[239] Holsti, KalJ. (1970)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4: 233-309

[240] 역할이론의 장점은 변화와 적응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로스만은 역할이론이 국가 행위의 변화들을 포착하는데 유용한 툴이라고 주장했다. Grossman, Michael, Role Theory and Foreign Policy Change. *International Politics* 42(2005): pp. 334-351.

1. ‘역할 구상’과 북핵 용인 단계의 전환

【그림 4-3】은 Breuning, M 의 ‘행위자-구조 관계의 인지모델’이다.

【그림 4-3】Breuning 의 행위자-구조 관계의 인지모델



※출처: Breuning 의 “Cognitive Model of the Agent-Structure Relationship” Breuning, Marijke. 2011, “Role Theory Research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ate of the Art and Blind Spots,” in S. Harnisch, C. Frank, and H. W. Maull (eds.) *Role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pproaches and Analyses.* New York: Routledge.

이 모델은 국가에 대한 정치 리더의 관념적, 유물적 차원의 '역할 구상(role conception)'이 외교행위를 결정한다는 것과 함께,[241] 한 국가의 정체성, 문화적전통(역사적경험), 국내구성원의 인식과 같은 국내/관념적 차원과 역량, 기회와 같은 국제/유물적 차원의 유인이 역할 구상을 결정하고 다시 외교정책행위로 이어지는 역할을 제정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242]

국가도 다른 행위자와 같이, 관념차원의 이념관계와 더불어 물질차원의 이해관계와 힘의 균형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역할 집합(role set)'을 보유한다. '역할 집합' 내부의 주 역할과 보조 역할은 상호보완 혹은 경쟁관계에 놓이며 이 중, 양보 가능한 역할은 열성의 역할이 되고, 그 반대의 역할은 지배적 역할이 된다.[243] 한 국가의 '역할 구상'이 쉽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면 외교정책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증가한다.[244] 한편, 역할을 만든 조건과 전후사정이 변하여 '역할 집합' 내의 양립 불가한 '역할 구상'들이 생기면 '역할 충돌'이 일어난다.[245] 또한, 국가 간에 대응하는 역할 쌍이 부적합할 경우에도

---

[241] Ikenberry, G. J. (1988).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1), 219–243. Roles and Realities: When and Why Gatekeepers Fail to Change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Analysis,* 9(3) (2013), pp. 307–325.

[242] Breuning, M. *"Role Theory Research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ate of the Art and Blind Spots,"* in S. Harnisch, C. Frank, and H.W. Maull (eds.) *Role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pproaches and Analyses.* (New York: Routledge, 2011).

[243] Bates, F. L, Position, Role, and Status: A Reformulation of Concepts. *Social Forces*, *34*(4) (1956)., pp. 313–321. https://doi.org/10.2307/2573663 (검색일: 2023 년 12 월 23 일).

[244] Breuning, M, Roles and Realities: When and Why Gatekeepers Fail to Change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Analysis*, 9(3) (2013), 307–325.

[245] Aggestam, Lisbeth, Role Theory and European foreign policy: A framework of analysis. In *The*

‘역할 충돌’이 일어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역할 전환’을 꾀하게 된다.[246] ‘역할 충돌’ 외의 ‘역할 전환’ 조건으로, 터너는 이익 대비 비용 비율, 역할 선택의 자율성, 역할 수행자의 변화에 대한 열의와 동원력 등을 꼽았다.[247]

2. 북핵 관련국들의 λ와 π에 대한 결정 유인들

λ 와 π 를 결정하는 유인들을 Breuning 모델을 활용하여 찾을 수 있다. 유인들은 네가지 경우들 즉, ‘낮은 π’, ‘높은 π’, ‘낮은 λ’, ‘높은 λ’로 나누었다. π는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므로 동맹과 관련된 유인이고 λ 는 ‘북미 간 양보수준’이므로 미국과 북한과 관련된 유인이다.[248]

European Union’s Roles in International Politics: Concepts and Analysis, edited by Ole Elgstrom and Michael Smith. (London: Routledge, 2006), p. 23.

[246] Akan Malici, Stephen G. Walker, *Role Theory and Role Conflict in U.S-Iran Relations: Enemies of Our Own Making,* (New York: Routledge, 2017), p. 20.

[247] 이외에도 Turner, R. H는 역할이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숫자, 새 역할에 대한 문화적 신뢰성, 마지막으로 새로운 역할에 대한 법적, 사법적 조치를 포함한 제도적 지원의 여부를 포함시킨다. Turner, R. H, *Role: sociological aspects.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3* (New York: Macmillan & Free Press, 1968,) pp. 552-57.

Gustavsson, Jakob 은 근본적인 구조적 조건의 변화, 전략적 정치 리더십, 몇몇 종류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때, 역할 구상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외교정책도 변한다고 한다. Gustavsson, Jakob, *How Should We Study Foreign Policy Change? Cooperation and Conflict, .* (1999) , pp. 73-95.

[248] Breuning모델에서 역할제정은 정책결정자의 역할 구상에 의해 결정된다. Yasemin Akbaba, Özgür Özdamar의 연구에서 국가역할 구상의 유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외교장관, 종교지도자 등 공적인 외교정책 연설을 수집했다. Yasemin Akbaba, Özgür Özdamar. *Role Theory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olitics, Economics and Identity* (New York: Routledge, 2019), p. 23.

가. 동맹이 '낮은 π'를 선택하는 이유

동맹은 언제 핵을 포기할까? Breuning 의 행위자-구조 관계의 인지모델에 기초한 '낮은 π'의 원인은 【표 4-2】와 같다.[249] 굵은 글씨는 게임의 보수와 일치하는 원인들이다.

【표 4-2】 Breuning 모델을 통해 본 '낮은 π'의 원인들

동맹의 역할 구상 유인들(national role conception sources)	
관념적(Ideational) 차원	유물적(Material) 차원
정체성: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역사: 한미동맹	역량: **(비핵화와 미국의 북핵통제와 핵우산을 통한) 안보**, 동맹, 남북간 국력차이[250], **경제적/기술적 핵개발 역량부족 및 비용문제**,

본 연구는 정책결정자의 의중을 반영한 문서로 북한은 조선로동당 규약, 제8차 당대회 보고 문서들을, 미국은 바이든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한국은 윤석렬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참조하였다.

[249] 동맹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동맹으로부터 방기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북한은 동북아에서 핵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북미 양국은 핵용인 양상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북한도 동맹에 대한 불필요한 도발이 동맹의 핵무장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250] 종합국력은 자국민 보호, 타국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한 나라의 종합적 힘으로 자국의 전략과 정책을 실행하여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G20 종합국력 평가에서 한국은 9위를 차지했다. 현은희 편, 『G20 국력평가, 한눈에 보기』 (서울:국회도서관, 2023), pp. 27-31.

남북한의 국력 차는 다른 체제의 흡수능력을 보여준다.(필자)

구성원: 비우호적인 핵보유 여론 혹은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지지, **핵우산에 대한 신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	완전한 MD 체제 등 핵대응 수단 구축. 기회: 핵보유국의 견제, 일본 등 핵경쟁에 대한 우려, **경제재재,** 핵기술/핵물질 조달 불가능, 신규 비확산체제의 출현 혹은 기존 비확산체제의 강고화, (비핵화 기반의) 주권경쟁, 북한의 체제전환.

※필자 작성

'낮은 π' 조건에서 동맹은 '자유인' 대신 '피보호인', '클라이언트', '참여자', '파트너'의 역할들을 맡는다. '민주주의'와 '평화'는 '낮은 π' 조건에선 비핵화를 통해 달성되지만, '높은 π' 조건에서는 핵무장을 통해 달성된다. [251] '주권경쟁'과 '안보'도 비슷하다. 즉, '낮은 π' 조건에선 비핵화를 기반으로 하지만, '높은 π' 조건에서는 핵무장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한미동맹'은 π를 낮추는 유인인 반면, '대북불신'은 π 를 증가시키는 유인이다. [252] '동맹'은 기본적으로 '낮은 π'의 유인이지만, 동맹에 대한 실망은 '높은 π'의 유인이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251] 윤석렬 정부의 국정과제는 북한 비핵화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포함한다.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대통령실, 2022년 7월; file:///C:/Users/USER/Downloads/120%EB%8C%80%20%EA%B5%AD%EC%A0%9 5%EA%B3%BC%EC%A0%9C%20(1).pdf (검색일: 2024년 6월8일).

[252] 윤석렬 정부의 국정과제는 한미동맹에 대해 "협력 지평을 확장하여 안보협력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관계 진화"할 것을 밝힘. Ibid.

경제력이나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 '남북간 국력차이'로 인한 자신감이나 북한의 '체제전환 조짐'은 π 를 낮출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 정책이 선제불사용(no-first-use) 원칙 등을 천명하고 실천하거나,[253]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유지를 기초로 핵우산이나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안보 보장'이 내실을 갖추거나, 미국 등 핵 강국들이 비확산과 핵 군축의 주도적 모범이 되거나, 핵보유희망국이 동의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비확산체제'가 성립된다면, 동맹의 π는 낮아진다.[254]

나. 동맹이 '높은 π'를 선택하는 이유

동맹은 언제 π를 높일까? Breuning 모델에 기초하여 '높은 π'의 원인은【표 4-3】과 같다. 굵은 글씨는 게임의 보수와 일치하는 유인이다.

【표 4-3】 Breuning 모델을 통해 본 '높은 π'의 원인들

동맹의 역할 구상 유인들(national role conception sources)	
관념적(Ideational) 차원	유물적(Material) 차원

[253] 북한은 '핵보유국법'에서 상대 공격에 대한 핵보복과 핵억제를 핵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각종 성명에서는 남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으로 위협하고 있어, 핵선제불사용원칙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강녕. "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 『한국과 국제사회』, 1(2 (2017), pp. 171-208.

[254] 한용섭, "핵무기 없는 세계: 이상과 현실" 이수훈 편, 『핵의 국제정치』(서울: 경남대학교출판부, 2012), p. 108.

정체성: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역사: 대북불신 구성원: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255], 우호적인 핵 보유 여론[256], **핵우산에 대한 불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	역량: **(핵무장을 통한) 안보**, 기술적/경제적 핵보유 역량, 남북간 국력차이 기회: (제재에도 불구한) 국제지위 향상, **국내 정치적 이득**[257], (핵무장 기반의) 주권경쟁, 비확산체제의 무력화, 동맹에 대한 실망.

※필자 작성

동맹이 π를 높이려 할 때, '클라이언트', '피보호인', '참여자', '파트너' 역할들은 '자유인'의 역할과 '역할 간 충돌'을 일으킨다. '낮은 π'의 유인을 나타내는 【표 4-2】와 '높은 π'의 유인을 나타내는 【표 4-3】을 나란히 놓고 보면, π 의

[255] 북한은 남한에게 '경계 대상'(39.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적대 대상'(36.2%)으로 보는 의견이 높음. 전체 응답자의 75.9%가 북한을 경계 및 적대적인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2023년 국민 통일 의식 조사", KBS, (2023년 8월 9일), https://news.kbs.co.kr/datafile/2023/08/20230815_XQV918.pdf, (검색일: 2023년 6월 23일)

[256] 한국 핵무장에 관한 여론조사는 일관되게 50% 이상의 찬성을 보인다. 한편, 핵무장에 반대되는 전문가 정보(응답자들에게는 비용, 현실성, 제재 등)를 보여준 후, 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은 크게 낮아졌다. 손상용・박종희, "한국 유권자들은 정말 핵무장을 원하는가? 실험 설문을 이용한 핵무장 여론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4(2) (2020), pp. 175-204

[257] λ가 높은 조건에서 핵 무기 보유에 대한 주장을 동맹국이 선거에 활용하는 등, 내부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할 때. 북핵 용인에 대한 논의는 도화선은 누가 제공할까? 대북 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민주 진영의 '선거'를 들 수 있다. 고은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게임이론적 분석: 중국과 북핵문제의 교차점." 『大韓政治學會報』, 30.2 (2022), pp. 79-102.

변경은 '역할 충돌'의 원인이 됨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핵 억지력 약화, 동맹을 배려하지 않는 핵용인, 북한의 핵 혹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도발과 국제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동맹의 동기는 '높은 π'의 계기가 된다. 백준기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맹국들 간의 안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거나 인식은 같아도 각자 유리한 대응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안보 갈등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러한 동맹의 딜레마는 동맹방기 혹은 연루의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고자 다른 안보적 보험을 추구할 수 있다고 했다.[258]

Vipin Narang 은 잠재적 핵 추구 국가의 네가지 획득 전략을 소개한다. 즉, 핵에너지 프로그램과 더불어 핵무기화 역량을 키우는 위험회피(Hedging),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핵개발을 완성하는 전력질주(Sprinting), 핵개발을 숨기는 은폐(Hiding), 강대국의 보호를 받아 핵무기를 완성하는 보호개발(Sheltered Pursuit)이 있다.[259] 이 중, '보호개발'은 미국과 동맹이 동맹의 핵무장에 동의하는 경우다. 미국이 세력균형을 위해 북핵을 용인할 정도면 동맹의 핵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 [260] 이 경우, 미국과의 역할 충돌을 피하기 때문에 동맹의 핵무장은 훨씬 용이할 것이다.

---

[258] 백준기. (2004). "한국문제의 역사적 재구성과 6자회담(한반도 협조체제의 일 전망)". 한신대사회과학연구소편. 『서울. HWB』. p214.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추진으로 미국은 한국의 중단된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감지했다. CIA, 의회보고, 민간 연구소에서 그 전망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윤섭,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비사-자주국방을 위한 도전』(남양주: 출판시대, 2019), p. 256.

[259] Narang, Vipin. "Strategies of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41, No. 3 (Winter 2016/17), p. 110-150.

[260] 부통령 재직 당시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16년 6월 20일 PBS 인터뷰에서 "사실상,

다. 북미가 '낮은 λ'를 선택하는 이유

'낮은 λ'는 '(b)침묵, (c)침묵, (g)침묵' 단계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낮은 λ'에 대한 원인을 Breuning 의 행위자-구조 관계의 인지모델을 적용하여 찾은 것이 【표 4-4】다. 굵은 글씨는 게임의 보수와 일치하는 원인이다.

【표 4-4】 Breuning 모델을 통해 본 '낮은λ'의 원인들

구분	미국과 북한의 역할 구상 유인들(national role conception sources)	
	관념적(Ideational) 차원	유물적(Material) 차원
미국	정체성: (비핵화를 통한) 평화, 민주주의, 인권 역사: 대북불신 구성원: 북한에 대한 부정적감정	역량: **국가전략실현을 위한 동맹과 연대**[262] 기회: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우호적 국제협력(북한비핵화에 대한 중국/러시아 협조기대),**

일본은 하룻밤에 핵무기 제조 능력이 있다"면서 "이 점을 중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병구. "잠재적 핵능력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 『한국외교협회 외교광장』 XXII-2(2022).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미 행정부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대중봉쇄라는 전략적 이익과 부합된다면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박용수. "한국의 핵무장가능성," 『아세아연구』, 65(2) (2022), pp. 101-132.

[262] 바이든 행정부의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6가지 정책 방향에서'동맹과 파트너십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꼽고 있다. 김현욱,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분석,"『IFANS FOCUS』, (26),(2022), p. 1-3.

	리더십: 미국주도의 패권적 지위유지[261], **핵확산방지리더십**	(비핵화 노력으로부터 얻는) **내부정치적 득실**,
북한	정체성: 김일성-김정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인민생활중시), 공산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 (강성대국), 외교이념(자주, 평화, 친선) 역사: 반미불신 리더십:유일적영도체계	역량: **(핵을 통한) 안보**, 자력갱생, **동북아핵우위유지**. 기회:남한과 주권경쟁[263], 신냉전체제.

※필자 작성

'낮은 λ'의 원인들은 북미 양국을 북핵 용인 협상에 소극적으로 만들 것이다. 현재, 미국이 '낮은 λ'와 제재를 유지하는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핵확산방지 리더십' 유지나 '비확산체제에 대한

261 "경쟁국을 능가하고 공유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중요한 국내 투자를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는 대외 정책과 국내 정책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다."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WHITE HOUSE』, 2022년 10월 12일;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검색일: 2024년 06월 22일).

263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규약』, 2021년 1월.

국제적 협력과 동맹과의 연대', 비핵화 이슈와 관련한 '내부정치적 이득'을 위해 미국은 λ 를 낮춰 놓은 상태다.[264] 열악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태', '대북불신', '북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미국이 λ 를 높여 북핵 용인 협상에 나서기 힘들게 하는 유인들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내부정치적 득실'은 '높은 λ'나 '낮은 λ'에 대한 공통 유인이다.[265] 즉, 북한에 대해 '낮은 λ'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이며, 또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높은 λ'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266]

---

[264] "핵, 화학, 생물학 무기 확산은 매우 중요하고 지속적인 전 세계적 과제로, 대량살상무기와 핵분열성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고 그 전달 수단과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특히 분쟁 시 군비통제 및 비확산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 시민사회,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이다."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WHITE HOUSE』, 2022년 10월 12일;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검색일: 2024년 06월 22일)

[265] 관념적 차원의 유인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에게도 주요한 역할 구상의 유인이다. 바이든 NSS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국가의 대결구도 속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한다.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WHITE HOUSE』, 2022년 10월 12일;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검색일: 2024년 06월 07일).

[266] "미국인은 보편적 인권을 지지하고 자유와 존엄성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와 연대할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법에 따라 형평성과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과 같다. 또한, 우리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적 거버넌스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권위주의를 능가하고, 더욱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고, 미국을 더욱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및 안보 파트너로 만들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장려하기 때문이다."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WHITE HOUSE』, 2022년 10월 12일;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검색일: 2024년 06월 22일)

‘내부정치적 득실’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파는 ‘낮은 λ’와, 다른 정파는 ‘높은 λ’와 연결시켜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할 것이다.

북한이 ‘낮은 λ’를 유지하는 원인들은 핵과 관련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핵과 관련 있는 원인으로는 ‘핵을 통한 안보’, ‘동북아 핵우위’, ‘핵우위를 통한 남한과 주권경쟁에서의 승리’ 등이 있다.[267] 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원인으로는 북한의 ‘이념과 정체성 수호’, ‘반미불신’, ‘자력갱생 성과’가 있다.[268] 김진환은 관념적 혹은 물질적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

[267] 핵억제력 강화가 ‘가장 의의 있는 민족사적 공적’으로 핵억제력 강화를 들며 핵무기 소형경량화,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사정권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미사일, SLBM · ICBM 개발, 핵잠수함, 군사정찰 위성 등과 같은 개발 노력을 천명함.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탈냉전 시기 이후,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핵개발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추구했다. 이 현상타파적인 속성은 지역내 안보환경에 어울리는 ‘균형’ 전략 보다는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함과 함께 ‘핵억제력 강화’를 통한 대미 협상력 제고와 자국에 유리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균형’ 전략을 추구했다. 하유수. “김정은 정권의 대미전략 연구 :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268] 적대 관념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적 트라우마(cultural trauma)’와 ‘신성한 가치(sacred value)’를 이용할 수 있다. 미소냉전기의 동구권은 서독을 유태인 학살의 파시스트 정권으로 비난함으로써 서독의 ‘트라우마’를 일깨웠다. 트라우마의 주범인 국가나 집단은 심리적 콤플렉스에 빠진다. 거꾸로 이것을 이용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적’ 이미지를 쉽게 만들고, 대내적 동원과 선전이 용이하다. ‘신성한 가치’는 특정 집단이 문화적, 역사적으로 자긍심을 주는 가치로, ‘적’이 아니더라도 해당 가치를 건드리면 ‘적’으로 인식되는 ‘신성불가침 영역’이다. 북한은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남한을 강점한 채 사람들을 학살하고 북한에 대해 재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다 김태현, “적대관념과 정권안보: 동독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국가전략』, 25(2) (2019), pp. 119-145.

지배정당성은 일정 수준 보장되며 둘 다 충족되면 지배정당성은 매우 높아진다고 한다. 특히, 피지배-지배 집단은 재화와 권력의 한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갈등관계에 놓이지만 지배집단이 피지배집단으로부터 지배정당성을 확보하거나 관념적·물질적 동의기제가 잘 작동하면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269] 북한의 버리기 힘든 이념과 미국의 버릴 수 없는 이념 간의 거리는 북미가 북핵 용인 협상에서 겪을 '역할 충돌'의 강도를 높인다. [270]

2013년 3월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국가경영 독트린'으로 경제·핵 병진노선을 제시하였다. 흔히 경제-핵 병진노선을 1960년대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재현이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경제-국방 병진노선은 국방에 방점이 있는 반면, 이번의 병진은 경제에 초점이 있다. 조동호, "경제·핵 병진노선의 의미와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전망," 『국가전략』, 19(4) (2013), pp. 33-56.

[269] 김진환, 『북한위기론-신화와 냉소를 넘어』 (서울:선인, 2010), pp. 42-49.

[270]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의 첫 줄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이어서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선로동당규약』(2021년 1월)

김정일이 혁명과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발전시키고 이를 기초로 선군사상을 정립했는데, 이것을 김정은이 독창성과 정당성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제기하여 북한을 새 역사적 단계로 올려 놓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대한 100년대가 시작되는 역사의 분수령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추켜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따라야 한다"고 역설한다.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韓國政治 硏究』, 22.3 (2013): 187-211.

김정은 시대의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통해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높이겠다는 "사상감정"이다. 선 강국건설 후 국제적 인정으로 읽히는 시대담론이다. 구갑우,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 『현대북한연구』, 27(1) (2024), pp. 9-53.

우리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첫째, 선대 수령의 업적과 사상의 계승/강화 둘째, 당과 인민의 단결 셋째,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념의 거리’는 ‘동맹의 핵무장가능성’과 함께 ‘침묵’ 균형을 벗어나기 힘들게 하는 반대 유인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낮은 λ’의 원인이 된다.[271]

라. 북미가 ‘높은 λ’를 선택하는 이유

‘높은 λ’는 ‘(a)한계용인’, ‘(f)한계용인’ 단계를, ‘매우 높은 λ’는 ‘(d)핵용인’, ‘(e)핵용인’을 결정하는 조건이다. ‘높은 λ’에 대한 유인을 Breuning, M 의 모델을 적용하여 찾은 것이 【표 4-5】이다. 굵은 글씨는 게임의 보수와 일치하는 원인이다. 양국의 이념적 구조가 변경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272] 균형 전환의 계기는 그 외 원인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와 과학기술의 비약발전 등을 제시했다. 신문은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김일성, 김정일조선제일주의”라고 주장한다. 유철, “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로동신문』, 2019년 1월 27일.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고 “전반적인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이자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으로 “조국과 인민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결합”시키고 “전체 인민을 국가부흥을 위한 투쟁에로 떠밀어 주는 사상정신적 원천”이라고 함. 『로동신문』, 2022년 9월 1일

[271]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다” “북핵이야기”, 『로동신문』, 2015년 3월 16일.

[272] 북미는 관념적 차원의 정체성, 사상, 구성원의 인식 등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침묵’, ‘한계용인’, ‘핵용인’ 균형들에서 거의 비슷하다.

【표 4-5】 Breuning 모델을 통해 본 '높은λ'의 원인들

구분	미국과 북한의 역할 구상 유인들(national role conception sources)	
	관념적(Ideational) 차원	유물적(Material) 차원
미국	정체성: **(핵통제를 통한)평화**[273], 북한에 대한 민주주의나 인권 개선의 가능성 발견. 리더십: 미국주도의 패권적 지위유지	역량: **(핵통제를 통한) 안보**, (러중 비협조와 북핵 고도화로 인한)비핵화 기대약화, 제재의 한계성, **기존 동맹의 유지가능성 혹은 동맹 방기의 위험.** 기회: 중재, **내부정치적 득실, 경제 혹은 기타이익, 세력균형(중·러봉쇄견제)**
북한	정체성: 순수 및 실천 이데올로기 변경, 외교이념의 수정 가능. 강성대국	역량: **(평화협정과 핵보유를 통한)안보**, **(동맹과 핵경쟁을 벌일 수 있으므로) 동북아 핵우위유지는 불투명**[275],

[273] 평화는 소프트파워 혹은 하드파워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비핵화나 핵통제를 통한 평화는 정부가 아니라 여론이나 시민운동이 출발점일 수 있다.(필자)

미국의 이라크 침공전인 2003년2월15일 그리고 3월15일에 전세계 수백개의 도시에서 수천만명이 참가한 반전시위는 미국의 '전쟁동맹' 구성에 치명타를 입혀 다수의 국가들이 미국에 줄서는 대신 중립을 표명하거나 반전연대에 가담하도록 했다. 정욱식, "한국 평화운동의 성과와 전망, 그리고 과제", 한신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미국의 신보수주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평화문제』(서울: HWB, 2004), pp. 84-85.

[275] "우리의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토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선것만큼 앞으로 조선반도의 정세격화는 곧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불안정으로 이어질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구성원: 개방으로 인한 자율성 증대. 리더십:유일적영도체계[274]	자력갱생의 한계, 남북간 국력차이, 북한의 체제전환. 기회: **경제적효과(제재해제, 지원, 개방)**, 남한과 주권경쟁, 내부정치적 득실, **정상국가화 (미국주도 국제질서 참여, 미국과 관계개선)**.

※ 필자 작성

투쟁강령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1년 1월 9일.

[274] 김정은이 통치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채택하고, 당규약과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당 제1비서에 오른 것은 자신의 유일영도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장성택 제거도 절대 권력과 유일영도체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여 당위원장이 되었다. 이런 제도화는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완성과 '제3의 수령'의 탄생을 의미한다. 김창희, "김정은시대 북한정치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84) (2017), pp. 139-160.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당-대중은 사회정치적 생명 안에서 혈연적 관계, 운명공동체로 규정하고, 생명의 은인인 어버이 수령에게 충효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 이종석, 『북한의 역사 2』 (고양: 역사비평사, 2021), P. 101.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로 수령이 경험한 역사는 북한의 국가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절대적이다. 항일무장투쟁이나 6·25전쟁에서 미국과 싸운 역사, 분단 이후의 한미와의 대립, 국제사회로부터의 다양한 제재에 대한 저항의 역사,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내정간섭의 경험 등은 "혁명전통"으로 정의되며 현재 북한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한다. 최수봉, "북한의 국가정체성과 '욕설 외교'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북미가 λ 를 높이려 할 때, 미국의 '패권국' 역할은 '양육자', '균형자', '파트너'의 역할과 충돌을 일으킨다[276]. 또한, 북한의 '반항아'와 '신념수호자' 역할은 '파트너' 역할과 충돌을 일으킨다. 이러한 역할 충돌은 λ 의 상승을 막는다. '낮은 λ'의 유인을 나타내는 【표 4-4】와 '높은 λ'의 유인을 나타내는 【표 4-5】를 나란히 놓고 보면, λ의 변경이 '역할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동맹 관계, 세력균형 중인 강대국과의 관계, 비핵화와 핵통제 정책 등에서, 북한은 이데올로기나 외교 이념의 수정, 개방으로 인한 자율성 증대 등에서 '역할 충돌'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이 λ 를 높이는 원인들을 보면, 북한 사회의 근간인 '이념'을 수정하거나, '체제 전환'의 조짐을 보이거나, '세력 균형' [277]이나 '기타 및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우수한 '중재자'의 출현, 동맹의 핵포기 의사는 미국이 λ 를 높일 수 있는 간접적 계기가 된다. 미국 정치권은 북한에게서 내부정치적 가치를 간파하고 이를 대통령 권한 확대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안보 정책을 위한 설득 수단으로 활용했다. [278] 미국 정치가들은

---

[276] '한계용인' 단계에서의 한미간의 북핵에 대한 의견 차이에 의해 생기는 역할 충돌 수준은 한미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 그리고, 한미 양국의 집권당이 진보 혹은 보수의 일치성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77] 바이든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는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한다.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2년10월;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 wp-content/uploads /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검색일: 2024년5월 22일).

[278] 미국 네오콘의 핵심적 동북아 전략에는 중국이 있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미국의 강경파 입장에서 대화는 필요 없고, 지금 북한을 자꾸 잘못된 길로, 강경한 길로 모는 것은 바로 중국 때문"이며 "중국을 미래 가상의 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북한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λ 를 낮추거나 높일 때, 모두 정치적 득실을 따질 것이다.

북한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이념이나 국가 정체성을 북핵 용인을 위해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279] 그러므로, 이념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 정체성은 단계 전환을 어렵게 하는 역촉매 변인으로 작동할 뿐이다. [280] 냉전시기 북한은

미사일방어체제(MD) 같은 군비확장을 하는 구실로 삼는 것이 북한이라고 진단했다. "DJ "美네오콘 북핵 이용 제재강화는 역효과," 『경향신문』(인터넷판), 2006년 9월14일; https://www.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0609141819541 (검색일: 2023년 8월25일).

미국 주도 MD는 명시적 적인 북한과 잠재적 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컨대, 처음부터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잉태한 전략이었다. MD를 위해 미국은 한일을 포섭대상으로, 북중러를 위협대상으로 하면서 진영간 갈등은 쌓이기 시작했다. 정욱식,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파주: 서해문집, 2023), p. 203.

중국내에서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의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피한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욱식, 『MD본색: 은밀하게 위험하게』(파주: 서해문집, 2015), p. 235.

[279] 북핵 용인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레짐 체인지나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유일적영도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거의 불가능하다. '한계용인' 단계에서의 한미간의 북핵에 대한 의견 차이에 의해 생기는 역할 충돌 수준은 한미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 그리고, 한미 양국의 집권당이 진보 혹은 보수의 일치성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80]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른바 ≪다원주의≫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원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정치방식입니다. 사회주의는 짖ㅂ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인민대중의 통일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이므로 사회주의와 <다원주의>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로동신문』, 1992년 2월4일.

대미 외교의 갈등적 접촉기에 명분과 이념적 측면을 강조했으나 차차 미국에 대해서는 명분보다 실리에 집중했다. [281] 북한 외교의 실리 강조는 '높은 λ'의 유인이 된다. 1980 의 제 6 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을 기초로하는 '자주, 친선, 평화'를 북한의 외교정책 이념으로 공표했고, 1988 년 9 월에 '자주, 평화, 친선'으로 순서를 바꾸었다. 북한 외교정책의 목표의 추진 방향은 정권의 안정에 있다.[282] 유일체제는 폐쇄사회 틀내에서 존속이 가능하므로 사회개방이 가속화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랍국가의 리더의 종교적 믿음이 갖는 영향력은 국가 구조, 지정학적 힘과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제약을 받는 한편, 지도자의 종교적 믿음은 지도자의 스타일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Warner, Carolyn M., and Stephen G. Walker. 2011. "Thinking about the Role of Religion in Foreign Policy: A Framework for Analysis." *Foreign Policy Analysis* 7: 113-135.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종교에 해당하는 이념에 대한 지도자의 믿음이 외교정책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진다.(필자)

281 김혜원. "냉전시기 북한의 대미외교행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282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1997), p. 291.

"조선로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하여 반제자주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규약』, 2021년 1월.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16조에서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고,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고,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고,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라고 서술한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 1972년 12월

제 3 절 북핵 용인 (양상과 전개) 모델

3 절과 4 절에서는 용인 양상과 조건과 전개과정을 포괄하는 북핵 용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283] 본 연구의 북핵 용인 게임에서 '동맹의 핵무장'은 마지막 선택 마디에 배치된다. 마지막 전략 선택을 가장 먼저 따지는 역진귀납법의 원리에 의하면, π 가 북핵 용인 전개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π 가 높을 때('(b)침묵'– '(a)한계용인' 단계)와 π 가 낮을 때('(c)침묵' -'(d)핵용인' 단계), π 가 매우 낮을 때('(e)침묵'-'(f)한계용인'-'(g)핵용인')로 구분하여 북핵 용인 양상과 전개 과정을 제안한다.

1.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전개 모델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b)침묵'– '(a)한계용인' 전개 과정을 보일 수 있다. 제 1 절의 게임 균형들에 대한 '역할 충돌'을 활용한 선차성 분석은 북핵 용인 양상(균형) 별, 난이도를 보여주었다. 【표 4-6】의 북핵 용인 전개 모델은 【그림 4-1】에서 ③의 흐름을 반영한다. 역할 해석을 위한 Breuning 모델은 이념 관계들 게임 분석에서 놓쳤던 유인들을 찾거나 보충하도록 한다. Breuning 모델을 통한 제 2 절의 분석에서 (b)침묵 단계는 '낮은 λ,

27일

[283] 모형은 현실의 완벽한 복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재구성한 현실이다. 즉, 모형 설계자는 특정한 이론에 기초해 실제 현상 중 가장 중요한 것만을 선택해 그들 간의 관계양상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현실과 모형의 상호조응성은 불완전하고 같은 현상에 대해 다른 모형이 있을 수 있다. 김웅진・김지희, 『정치학 연구방법론-경험과학연구의 규준과 설계』 (서울: 명지사, 2012), pp. 86-87.

높은 π' 조건에, (a)한계용인 단계는 '높은 λ, 높은 π' 조건에 해당한다. 굵은 글씨는 게임의 보수와 일치하는 유인들이다.

【표 4-6】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북핵 용인 모델

용인 단계	유인	
	게임 균형전략에 의한 유인[284]	Breuning 모델에 의한 이념, 유물적 유인 [285]
(b) 침묵	미국: 현상유지 $(\lambda_1 < \frac{P_{ul} - C_{ut}}{P_{ua}})$, λ_1수락/λ_α거절 $(\lambda_1 < \pi_2)$ 북한: λ_1수락/λ_α제안 $(\lambda_1 \geq \frac{P_{na} - C_{ns}}{P_{no}})$ 동맹:	미국: 민주주의/평화/인권, 대북불신, 북한에 대한 구성원의 부정적감정[286], 패권유지, **핵확산방지 리더십** **동맹연대**, 북한비핵화에 대한 중러의 협조기대, **내부정치적 득실**

[284] 게임의 균전략을 결정하는 관계식이 포함하는 보수들은 북핵 용인의 원인에 해당한다.

[285] Breuning, M의 행위자-구조 관계의 인지모델을 활용한 λ와 π에 대한 유인들 중, 게임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밑줄친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286] 미국인 10 명 중 8 명 정도는 북한에 대해 감정이 차갑다. 북한에 대한 감정 온도는 섭씨 영하 6.11 도가 나왔다. "미 여론조사, 미국인 10 명 중 8 명 북한에 차가운 감정," 『VOA』, 2021 년 4 월 13 일;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survey-sentiment-toward-northkorea /605 7856 .html (검색일: 2024 년 6 월 8 일).

	핵개발 $(\pi \geq \pi_1)$	북한: 국가정체성과 주요이념, 반미불신[287], 유일적영도체제. **(핵을통한)안보,** 자력갱생, **동북아 핵우위,** 대남주권경쟁, 신냉전. 동맹: 민주주의/평화/인권, 대북불신, 우호적 핵보유여론, **핵우산에 대한 불신**. **(핵무장을통한)안보**, 핵능력, 남북 국력차이, **(핵을통한)국제지위향상**, **국내 정치적 이득**, 주권경쟁, 비확산체제 무력화, 동맹에 대한 실망.
(a)	미국:	미국:

[287] 제네바합의의 경수로 지원을 놓고 벌인 북미간 줄다리기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양국은 '미니맥스(mini-max) 전략'을 취해 상호 협조하는 대신 상대방을 배신했다. 불신으로 상대국을 배신함으로써 '최대 위험'을 최소화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전략이다. 김성학(Stephen Kim). "북미 상호 불신과 제네바합의의 붕괴," 『북한학보』, 38.1 (2013), pp. 81-119.

한계 용인	λ_1제안 ($\lambda_1 \geq \frac{P_{ul} - C_{ut}}{P_{ua}}$), λ_1수락/λ_α 거절 ($\lambda_1 < \pi_2$) <u>북한</u>: λ_1수락/λ_α 제안 ($\lambda_1 \geq \frac{P_{na} - C_{ns}}{P_{no}}$) <u>동맹</u>: 핵개발($\pi \geq \pi_1$)	**(핵통제를 통한)평화**/민주주의/ 인권개선의 가능성발견, 패권유지, **(핵통제를 통한)안보**, **동맹유지**, (중러의 비협조, 북핵고도화)로 비핵화 기대약화[288], 제재의 한계, 중재, **내부정치적 이득**. <u>북한</u>: 주요이념의 수정가능성, 개방으로 인한 자율성 증가, 유일적영도체제. **(핵과 평화협정을 통한)안보**, 자력갱생의 한계, 남북 국력차이, **동북아 핵우위유지** **경제효과**[289], 대남주권경쟁, **국내정치적 이득.**

[288] 지난해 5월 유엔안보리는 3월 24일의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되었다. “유엔 회의서 ‘북핵’ 공방…러시아 “대북제재 수명 다해,”” 『VOA』, 2023년 10월 12일; https://www.voakorea.com /a/7306913 .html (검색일: 2024년 6월 8일).

[289] 북한이 남북간 국력차이를 극복하거나 경제효과를 위해 남한과 동일한 경제체제를 원한다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다. 북한은 남한 경제체제에 대해 다양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적용할 경제체제 역시 단언할 수 없다.(필자)

“미국은 1990 년대초 ≪세계화≫를 떠들면서 괴뢰들을 강박하여 금융서장을 부분적으로

		동맹: (b)침묵과 동일

※필자 작성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높을 때는 미국은 '핵용인'을 선택하지 않는다. '한계용인'이 더 나은 보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동맹이 '핵용인'을 원하지 않는다면, 핵무장에 대한 태도와 의지, 그리고 능력을 보임으로써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a)핵용인'은 미국의 보수인 $\lambda_1 \geq \frac{P_{ul} - C_{ut}}{P_{ua}}$ (식 4)나 북한의 보수인 $\lambda_1 \geq \frac{P_{na} - C_{ns}}{P_{no}}$ (식 3) 모두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식 3)과 (식 4)는 절대치가 아니며, 매개변인 들 간의 상대적인 비(比)일 뿐이다. 그러므로, 핵용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식 3)과 (식 4)를 구성하는 성분들(매개변인)과 성분들의 관계다.

2.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의 전개 모델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c)침묵' -'(d)핵용인' 과정을 보일 수 있다. 【표 4-7】의 '(c)침묵'에서 '(d)핵용인' 단계로의 전환 모델은 【그림 4-1】에서 ②의 흐름을 반영한다. '핵용인' 단계에서는 파키스탄이나 인도 수준과

개방하도록 한데 이어 1990 년대말에는 남조선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나도록 조작하고 괴뢰들에게 ≪국제통화기금≫의 ≪구제자금≫을 받는 대신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결과 남조선의 금융시장은 미국위주의 외국자본에 완전히 종속하게 되였으며 외국자본이 남조선의 경제전반을 쥐락펴락하는 존재로 군림하게 되었다.", 박일문, "남조선에 류포되여있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반동성," 『경제연구』, 2016년 4호, p. 60.

유사한 수준의 핵용인이 일어난다.[290] Breuning 모델이 찾은 유인은 게임 분석에서 찾은 유인들과 일부 중복되기도 한다. Breuning 모델을 통한 제 2 절의 분석에서 (c)침묵 단계는 '낮은 λ, 낮은 π' 조건에 해당하고, (d)핵용인 단계는 '높은 λ, 낮은 π' 조건에 해당한다. 굵은 글씨는 게임의 보수와 일치하는 유인들이다. 게임이 북핵 용인의 구조(뼈대)를 구성한다면, 역할 이론은 유인의 보완을 통해 북핵 용인의 양상(살)을 내실화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7】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의 북핵 용인 모델

용인 단계	유인	
	게임 균형전략에 의한 유인	Breuning 모델에 의한 이념, 유물적 유인
(c) 침묵	미국: 현상유지($\lambda_1 < \frac{P_{ul} - C_{ut} + \pi C_{ua} + C_{up}}{2 P_{ua}}$), 핵용인 ($\lambda_1 \geq \pi_2$) 북한: λ_1수락/λ_α 제안	미국: '(b)침묵'과 동일함. 북한: '(b)침묵'과 동일함. 동맹:

[290] 파키스탄 식 핵보유 모델은 NPT 체제는 파키스탄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지만 이를 빌미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상황 즉, '사실상의 핵보유국 모델'을 말한다. 곽길섭, 『김정은과 바이든의 핵 시계』(서울: 기파랑, 2021), p. 150.

	($\lambda_1 \geq \frac{P_{na} - C_{ns} - \pi(P_{nn(w/o\ primacy)} - P_{nn})}{2\,P_{no}}$) 동맹: 핵개발($\pi \geq \pi_1$)	민주주의/평화/인권, 한미동맹, 비우호적 핵보유여론, 비확산체제 지지, **핵우산에 대한 신뢰**. **(비핵화와 미국의 북핵통제와 핵우산을 통한)안보**, 남북간 국력차이. 핵보유국의 견제, 일본 등 핵경쟁에 대한 우려, **경제재제**, 핵개발 능력, 신규비확산체제의 출현 혹은 기존 비확산체제의 강고화, 대북주권경쟁
(d) 핵용인 291	미국: λ_1제안 ($\lambda_1 \geq \frac{P_{ul} - C_{ut} + \pi C_{ua} + C_{up}}{2\,P_{ua}}$), 핵용인 ($\lambda_1 \geq \pi_2$) 북한: λ_1수락/λ_α 제안 ($\lambda_1 \geq \frac{P_{na} - C_{ns} - \pi(P_{nn(w/o\ primacy)} - P_{nn})}{2\,P_{no}}$)	미국: '(a)한계용인' 원인과 더불어, **(증·러 봉쇄/견제를 통한) 세력균형, 경제 혹은 기타이익**. 북한: '(a)한계용인' 원인과 더불어,

291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는 이유는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후원을 받아 재래식 군사력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탈냉전을 맞아 적정한 후원국가를 잃게 되자 핵무장 의지를 갖게 되었다. Debs, Alexandre and Nuno P. Monteiro, *Nuclear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 277.

	동맹: 핵개발($\pi \geq \pi_1$)	**정상국가화(미국주도 국제질서참여, 미국과 관계개선), 동맹과의 핵 경쟁.** 동맹: (c)침묵과 동일.

※필자 작성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은 '핵용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핵용인'을 선택하는 국가는 북한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다. 협상을 위해 양국이 요구하는 양보 수준, λ 는 상호적이며 상응하긴 하지만, 일치할 수는 없다. 실제로는 중재와 흥정을 통해 λ 를 결정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d)핵용인'은 미국의 보수인 $\lambda_1 \geq \frac{P_{ul} - C_{ut} + \pi C_{ua} + C_{up}}{2 P_{ua}}$ (식 6)이나 북한의 보수인 $\lambda_1 \geq \frac{P_{na} - C_{ns} - \pi(P_{nn(w/o\ primacy)} - P_{nn})}{2 P_{no}}$ (식 5) 모두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결정된다.

3. 동맹이 핵무장을 포기하는 경우의 전개 모델

동맹이 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g)침묵'– '(f)한계용인' –'(e)핵용인' 전개 과정을 통과할 수 있다. 【표 4-8】의 동맹이 핵을 포기했을 때의 '(g)침묵'에서 '(f)한계용인' 혹은 '(e)핵용인' 단계로의 전환 모델은 【그림 4-1】에서 ①의 흐름을 반영한다. Breuning 모델을 통한 제 2 절의 분석에서 g)침묵 단계는 '낮은 λ, 매우 낮은 π' 조건에 해당하고, (f)한계용인 단계는 '높은 λ, 매우 낮은 π' 조건에

해당하고, (e)핵용인 단계는 '매우 높은 λ, 매우 낮은 π' 조건에 해당한다. 굵은 글씨는 게임의 균형조건과 중복된다.

【표 4-8】 동맹, 핵포기 시의 북핵 용인 모델

용인 단계	유인	
	게임 균형전략에 의한 유인	Breuning 모델에 의한 이념, 유물적 유인
(g) 침묵	미국: 현상유지 ($\lambda_1 < \frac{P_{ul} - C_{ut}}{P_{ua}}$), 핵용인 ($\lambda_1 < \frac{C_{up}}{P_{ua}}$) 북한: λ_1수락/λ_α 제안 ($\lambda_1 \geq \frac{P_{na} - C_{ns}}{P_{no}}$) 동맹: 핵포기 ($\pi < \pi_1$)[292]	미국: '(b)침묵'과 동일함. 북한: '(b)침묵'과 동일함. 동맹: '(b)침묵'의 유인과 더불어, **경제적/기술적 핵개발 역량부족 및 비용문제**, 완전한 MD 체제 등 핵대응 수단 구축, 북한의 체제전환.

[292] Etel Solingen은 국내 지도자와 지지세력이 세계경제통합을 통한 경제성장을 원하면 핵무장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핵무장을 거부하지만 거꾸로 국제주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치 권력을 위한 도구로 핵무장을 시도한다고 했다. Etel Solingen, *Nuclear Log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pp. 17-18.

(f) 한계 용인	미국: λ_1제안 ($\lambda_1 \geq \frac{P_{ul} - C_{ut}}{P_{ua}}$), λ_1수락/λ_2 거절 ($\lambda_1 < \frac{C_{up}}{P_{ua}}$) 북한: λ_1수락/λ_α 제안 ($\lambda_1 \geq \frac{P_{na} - C_{ns}}{P_{no}}$) 동맹: 핵포기($\pi < \pi_1$)	미국: '(a)한계용인'과 동일함. 북한: '(a)한계용인'과 동일함. 동맹: '(g)침묵'과 동일.
(e) 핵용인	미국: λ_1제안 ($\lambda_1 \geq \frac{P_{ul} - C_{ut} + C_{up}}{2P_{ua}}$), 핵용인 ($\lambda_1 \geq \frac{C_{up}}{P_{ua}}$) 북한: λ_1수락/λ_α 제안 ($\lambda_1 \geq \frac{P_{na} - C_{ns}}{2P_{no}}$) 동맹: 핵포기 ($\pi < \pi_1$)	미국: '(d)핵용인'의 유인과 동일하나 추가로, 동맹 방기의 위험이 없으므로, 동맹의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음. 북한: '(d)핵용인'과 동일함. 동맹: '(g)침묵'과 동일.

※필자 작성

동맹이 핵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침묵', '한계용인', '핵용인'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동맹은 핵개발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고 핵확산방지 리더십과 체제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북미는 '(e)침묵', '(f)한계용인', '(g)핵용인' 단계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g)침묵'에서 '(f)한계용인'을 경유하지 않고 '(g)핵용인' 단계로 직행할 수 있다. 두가지 한계용인 즉, (a)한계용인과 (f)한계용인 단계를 결정하는 식, $\lambda_1 \geq \frac{P_{ul} - C_{ut}}{P_{ua}}$

(식 4 와 11)은 동일하다. 모두 동맹의 핵무장을 회피할 수 있다는 측면도 동일하다. 그러나, (d)핵용인을 결정하는 $\lambda_1 \geq \frac{P_{ul} - C_{ut} + \pi C_{ua} + C_{up}}{2 P_{ua}}$ (식 6)과 (e)핵용인을 결정하는 ($\lambda_1 \geq \frac{C_{up}}{P_{ua}}$) (식 7)은 상이하다. (식 6)은 핵확산리더십, 동맹의 핵무장으로 인한 동맹으로부터의 방기를 추가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제 4 절 북핵 용인의 원인과 가능성

1. '침묵'

'침묵' 단계의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에 대한 미련을 가진 채, 북핵 통제에 대한 시급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북핵에 대한 별다른 협상 재료를 찾지 못한다.[293] 북한은 신냉전체제 속에서 우방국들인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미국마저도 핵에 대한 압력을 해소 혹은 약화시킨 상태다. 북한은 반미불신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면서[294], 2019 년 말부터 대화의 문을 닫고, 안보는 핵을 통해,

---

[293] 평양은 미 행정부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20번 이상의 사적 시도를 거부해왔다. 심지어 포용 지향의 미국 외교관에게 편지를 되돌려주기도 했다. Victor Cha "Biden needs to disrupt the Russia-North Korea alliance — before it's too late," 『MSNBC』, 2024년 06월 19일; https://www.msnbc.com/opinion/msnbc-opinion/putin-kim-jong-un-russia-north-korea-biden-rcna157797, (검색일: 2024년 6월 22일).

[294] 북한 반미주의는 폐쇄적 자주 이념, 대결과 실리의 이중성, 이념 충돌, 민족주의 강화, 언론과 대중문화를 통한 세뇌와 동원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북한이 반미주의를 체제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한, 개혁개방과 유화 제스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영철, "북한의 반미," 『신아세아』, 18(2) (2011), pp. 146-170.

경제는 자력갱생으로[295], 외교는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실리를 얻으려 하고 있다.[296] 조선중앙통신은 2024 년 6 월 20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발표했다. 이번 조약에서 제 4 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 51 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297] 고

권위주의 정치리더는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외 적을 상정하고 악마화한 후, 적과 군사도발과 분쟁을 일으킨다. 유재광,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핵 및 미사일 위협 원인 고찰: 북한의 '전략 문화' 및 '체제 불안정'을 중심으로", 『북한과 국제정치』(서울:늘품플러스, 2018), P. 227

[295]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수행에 영향을 미친 주객관적요인들을 분석하면서 우선 객관적요인으로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감행한 최악의 야만적인 제재봉쇄책동의 후과를 들었다. 이밖에 해마다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와 지난해에 발생한 세계적인 보건위기의 장기화도 경제사업에 심각한 장애로 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로 하여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에서 주요경제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예견하였던 국가적투자들과 보장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고 보고는 언급하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1년 1월 9일.

[296] 북한을 대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도 달라졌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에 대해 제재에 참여했지만, 2020년 이후에는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추가제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냉전의 기운이 돌면서 비확산보다 세력균형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 것이다. 정욱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파주: 서해문집, 2023), pp. 145-155.

[29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전문), 『조선중앙통신』, 2024년6월20일

되어 있다. 이는 1961 년에 체결된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제 1 조[298]와 내부 법에 준한다는 조건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하다. 양국은 이 조항을 통해 자위권을 강조하고, 상호군사개입을 정당화하며, 냉전시대로 복귀하려 하고 있다. 이 조약은 제재 효과도 반감시킨다. 이 조약의 제 9 조와 제 10 조는 다른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포함하기 때문이다.[299]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을 선택한 북한이 점점 더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되어야 하겠지만, 새로운 냉전체제 속에서 핵/경제 병진정책의 다소간의 성공을 통해 숨쉴 틈을 마련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요원해질 따름이다. 그러므로, '침묵'은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진다.

2. '한계용인'

가. '한계용인'의 구체적 동기와 사례

'(a) 한계용인' 단계는 '높은 λ와 높은 π'를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이 때의

---

[298] 제1조 체약 쌍방은 그들이 앞으로도 극동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적 활동에 참가할 것이며 이 고귀한 과업의 수행에 기여할 것을 성명한다.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한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등,『한반도 평화체제-자료와 해제』(서울:통일연구원, 2007), p. 85.

[299] "제 9 조 쌍방은 식량 및 에너지 안전,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제 10 조 쌍방은 무역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한다. Ibid.

λ 수준으로는 북미 수교와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포함하는 ‘정상국가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 정도의 λ 수준으로는 중러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포함하는 ‘세력균형’이라는 목표에 이를 수 없다. (식4) $\frac{P_{ul} - C_{ut}}{P_{uc}}$ 를 기준으로 볼 때, 핵확산방지 리더십의 손실보다 북핵위협이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에 흔들 정도로 북핵의 대미 직접공격능력에 대한 통제[300]가 시급하게 되면 ‘한계용인’을 위한 분위기는 만들어지는 셈이다. 다음은 (식4)의 변수들과 관련되며, 남북미의 역할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들이다. 북한이 새로운 냉전의 이점을 활용하든 아니면 자립 갱생에 의하든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여 제재 효과의 빈약성[301]을 증명한다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 어떤 수준의 용인 협상이든 그러한 조건에서 제기될 것이다.

○ 북한의 대미 본토 핵공격 능력이 완성되고 증명되어, 미국의 미사일

---

300 현재의 핵무기 통제수단은 NPT, IAEA, 비핵지대, 선제사용금지(no-first-use) 선언, 핵무기 생산 및 수출 억제, 핵무기 및 발사수단 공개, ABM 제한, 핵보유국의 비핵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 전략핵무기 제한, 중거리 핵무기 제거, 핵관련시설 공격금지 협정, NPT와 무관한 상호사찰협정 등을 들 수 있다. 폴도티, 스티븐 플랭크, “새로운 핵무기보유국들에 대한 군비통제”, 로버트 D, 블랙윌・알버트 카너세일 편, 김일수・이정우 역, 『미국의 핵정책과 새로운 핵보유국』 (서울:한울아카데미, 1997), p. 54.

301 중국 입장에서 대북제재는 엄격히 시행되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대북제재의 9할은 중국이 담당한다. 북·중 교역량은 유엔이 허가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힘 빠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기권한 중국의 속내는?” 『경향신문』, 2024년 03월 29일; https://www.khan.co.kr/world/china/article/202403291750001, (검색일: 2024년 06월 06일).

방어 체제의 유효성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을 때.

○ 북한의 미 본토 공격능력이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북한의 공격능력이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 이슈화되고, 정치인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선거 쟁점화하는 경우. [302]

○ 북한 혹은 명확하게 북한이 아니라도, 핵물질, 핵기술, 핵무기, 핵시설의 테러집단 혹은 미국의 적성국가와의 거래 의혹 또는 시도가 있거나 빈번해져 미국이 핵 위협의 심각성을 느끼는 경우.[303]

○ 대미 핵 테러 사태가 상존하거나 임박하거나 징후가 있으며, 그 배후를 알 수 없을 때.

○ 대미 핵테러 사태가 발발할 때.[304]

---

[302] 잃을 것이 없는 북한보다는 잃을 것이 많은 북한이 안전할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비핵 신뢰구축을 위해, 정부간 쌍무적 협력증대, 비정부간 외교강화, 무역과 경제협력, 세계 및 지역적 협력 등이 증가했다. Durrani, Mahmud A, *INDIA & PAKISTAN The Cost of Conflict and The Benifits of Peace*,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51.

[303] 냉전기간에는 강대국 간에 핵무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낮았다. 핵무기가 확산된 지금은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와 기타 핵과 관련하여 한정된 소수가 핵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국가들은 핵사용에 대한 억제기능과 상대국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예측능력이 낮기 때문에 핵에 대한 비공표정책은 상호간의 평가를 어렵게 하고 대립과 불신은 오판과 오해의 가능성을 높인다. 루이스 A. 던, "미국안보에 대한 새로운 핵보유국의 위협", 로버트 D, 블랙윌, 알버트 카너세일 편, 김일수・이정우 역, 『미국의 핵정책과 새로운 핵보유국』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p. 54.

[304] 핵테러 방지는 3불 원칙으로 1)핵무기 관리의 허술성 방지, 2) 새핵무기의 씨앗(우라늄 농축 및 핵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시설) 금지, 3) 신행 핵보유국 차단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또한, 7개의 실천 목표로 1) 핵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국가목표 설정, 2) 핵테러리즘 전

○ 북한이 핵 관련 사고를 일으키고 그것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심각한 우려를 만들어내는 경우. [305]

'(a)한계용인' 단계를 결정하는 식들 중, $\lambda_1 < \frac{\pi\ C_{ua} + C_{up}}{P_{ua}}$ (식 2 의 반대조건)를 통해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동맹방기나 국내외 정치적 손실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한계용인'의 실현 가능성

'한계용인'은 미국, 북한, 동맹에게 다른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306] 첫째, 미국은 미래핵에 대한 통제 가능성과 더불어, 가장 시급한 미국본토에 대한 안보

쟁 수행을 위한 전략적 집중, 3) 겸손한 외교, 4) 글로벌 동맹 활용, 5) 정보 능력, 6) 더러운 폭탄에 대한 대응, 7) 다단계 중층 방어태세 구축이 있다. 이태윤, "국제 핵테러리즘의 전쟁론적 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04), pp. 71 – 110.

[305] 일반적인 핵지원의 핵심은 간단하다.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확산이 발생할 때, 도난, 사고, 비합법적 이용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체계의 확보, 조직적이고 절차적 안전장치의 마련할 수 있다. 특히, 핵확산국의 핵 프로그램에 접근가능성을 높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역긴장과 적대감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스티븐 E. 밀러, "새로운 핵확산국들에 대한 지원", 로버트 D, 블랙윌, 알버트 카너세일 편, 김일수・이정우 역, 『미국의 핵정책과 새로운 핵보유국』 (서울:한울아카데미, 1997), p. 54.

구소련 붕괴 후, 1993년 이래 핵 밀매 사건이 175건이 발생했고, 이 중에서 고성능 우라늄이 포함된 사건은 8건이나 되었다. 이태윤, "전쟁양상의 변화와 대테러정책 발전방향," 『미래사회』, 8(1) (2017), pp. 41-66.

[306]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 기술, 핵 물질, 핵 무기의 테러국가 혹은 테러집단으로의 이전, 장거리미사일 등 미 본토 공격 능력이 현실화되면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계기가 된다. 북한 입장에서, 장거리미사일 능력과 핵무기, 핵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307]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안들 즉, 비핵화(Denuclearization), 핵 동결(Nuclear Freeze)[308],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빅딜(Big Deal) 중에서,[309] '한계용인'은 핵 동결과 비확산에 합의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310] '한계용인'이라는 명명은 핵을 용인할 수도 없고, 핵을

핵물질의 관리와 이전에 대한 부분적 통제를 수락하는 대신, 경제제재 해제와 개방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북한의 의지가 반영된 단계다. 미 동맹국입장에서는 동맹에 대한 핵 공격 방지 약속을 포함하는 평화협정과 북한 핵무기의 미 본토 공격 능력의 상실은 곧 미국의 핵우산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단계다.

[307] 바이든 행정부의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한반도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다. 김현욱,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분석," 『외교안보연구소』, 2022년 10월 17일;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068&menuCl=&clCode=P07&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EA%B9%80%ED%98%84%EC%9A%B1&pageIndex=1 (검색일: 2024년 05월 22일).

잠수함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동반 수출은 국제 감시망을 회피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핵확산에 유리하다. 정영태・홍우택・김태우 등,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서울: 통일연구원, 2014), p. 260.

[308] '아시아-태평양 및 비확산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sia, the Pacific, and Nonproliferation)' 위원장이면서 민주당 의원인 셔먼(Brad Sherman) 의원은 북핵에 대해 동결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Rep, Sherman Says U.S. Needs to See N. Korea Freeze Mass-Destruction Weapon Creation." Feb 27. 2019, Bloomberg.

[309] 비핵화가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의 폐기를 의미한다면, 핵 동결은 과거의 핵은 그대로 두고 미래 핵에 대한 개발을 중지하는 방안이고, 비확산은 가장 소극적인 방안으로 반미국가나 테러집단에게 핵무기와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빅딜은 정상간 개인 차원의 외교의 경우 위험과 보상이 크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취약점이 있다. 서정건, 『미국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정쟁은 외교 앞에서 사라지는가 아니면 시작하는가?』(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pp. 262-264.

[310] 북한의 통제에 대한 이행여부에 따라 다시 '침묵' 단계(핵 협상 합의 이전)로 돌아갈

완전 통제하지도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계용인'을 위한 동기로는 과거핵에 대한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미래핵에 대한 통제나 북핵의 본토 타격 능력에 대한 통제, 핵무기, 핵물질, 핵기술, 핵시설의 미국의 적성국가 혹은 테러집단으로의 이전 통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2007 년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 파괴되긴 했지만 북한은 시리아의 알-키바(Al-Kobar) 원자로 건설에 도움을 준 적이 있었고, 또한 미얀마에 미사일 기술을 이전한 적도 있다.[311] 핵 조력 사례들을 감안할 때,[312] 전세계에 독립적인 핵 의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양국의 전략적가치가 제공하는 한계효용체증에 의해 경로의존성을 높이는 경우에는 원복을 어렵게 할 것이다.

311 케네스 왈츠・미라 랩-후퍼, 임상순 역, "핵 무기가 없는 세계가 최선의 선택인가?", 『핵 무기 전파, 그 끝없는 논쟁』 (서울: 박영사, 2022), pp. 231-232.

북한기술자는 1990년대 중반, 핵 기폭 장치용 스위치인 크라이트론을 생산하는 파키스탄 무기 과학자를 지원했고, 2003년에는 리비야에 우라늄 가스를, 1990년대 후반과 2007 사이에 시리아의 원자로를 건설했고 2016년에는 원자핵융합반응 무기의 동위원소를 온라인 판매하려했다. Daniel Salisbury and Darya Dolzikova, 'Profiting from Proliferation? North Korea's Exports of Missile and Nuclear Technology', Occasional Papers, 15 December 2023, RUSI https://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occasional-papers/profiting-proliferation-north-koreas -exports-missile-and-nuclear-technology (검색일: 2024년 5월2일).

312 【표 4-9】 민감한 핵 조력 사례들

수령자	조력의 첫 해	조력자	조력의 종류
중국	1958	소련	플루토늄재처리, 우라늄농축
이스라엘	1959	프랑스	플루토늄재처리, 핵무기설계
일본	1971	프랑스	플루토늄재처리,
파키스탄	1974	프랑스, 중국	플루토늄재처리, 우라늄농축, 핵무기설계
대만	1975	프랑스	플루토늄재처리,
이라크	1976	이탈리아	플루토늄재처리,
브라질	1979	독일	플루토늄재처리, 우라늄농축

결정주체들이 포진한 2 차 핵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리(management)'다.[313] 둘째, '한계용인' 단계를 핵용인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는데다가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과 같은 평화 조약의 체결은 미 본토 공격능력 상실을 보완할 것이고, 제재해제를 넘어서는 경제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314] 베트남과 리비아의 관계 정상화 과정을 보여 주는 【표 4-10】을 보면, '한계용인'은 개발사업과 국제대부 허용, 경제제재 해제와 연락사무소 개소 등 표에서 밑줄로 표시된 부분 정도에 해당하는 양보를 이끌어낼 것이고, '핵용인' 단계는 대사관 개설 등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315]

이집트	1980	프랑스	플루토늄재처리,
이란	1984-1985	중국, 파키스탄	플루토늄재처리, 우라늄농축
알제리아	1986	중국	플루토늄재처리,
리비야	1997	파키스탄	플루토늄재처리, 우라늄농축, 핵무기설계
북한	1997	파키스탄	플루토늄재처리, 우라늄농축

※ Kroenig, M, Importing the Bomb: Sensitive Nuclear Assistance and Nuclear Proliferation.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3*(2) (2009), pp. 161–180.

[313] 폴 브래큰, 이시은 역,『제2차 핵시대-전략과 위험, 그리고 새로운 무력 외교』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pp. 10-11.

[314]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중첩적이지만 경협에 대한 제약이라는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북한에 대한 무역 및 투자 금지, 국제금융시장 접근차단, 전략물자 반출금지, 판로문제다. 양문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시대의 남북경협: 전망과 과제,"『동향과 전망』, 104(2018), pp. 89- 123.

[315]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는 원하지만, 미국주도의 자본주의 질서에 100% 참여하는 것을 희망할 것이라고 가정해선 안된다. 아래와 같은 북한의 평가는 이를 대변한다.(필자)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들이는 경우 원조접수국의 국가예산은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략탈에 부합되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밖에 없다. 예산수입에서

【표 4-10】 미국의 베트남 및 리비아 관계 정상화 및 경제제재해제 단계

국가	관계정상화 및 경제제재해제 단계
베트남	**국제금융기구의 융자허용(1993.7)—미국기업의 개발사업 허용, 사실상의 경제제재 해제(1993.9)**—공식적 경제제재 해제, 연락사무소개설(1994.2)—대사관 개설, 관계정상화 (1995.8)
리비아	**잠정적 경제제재 해제(2004.4)— 연락사무소개소(2004.6)**—공식적경제제재해제(2004.9)—대사관개설, 관계정상화(2006.5)

※ 송은희. (2008). 북핵을 둘러싼 미·북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49), 121-136.

셋째, 동맹은 '한계용인'에서, 북한의 대미 직접공격능력에 대한 통제로 '핵우산 효과의 증강'이라는 혜택을 받는다. 넷째, 관련국 정치인들은 평화적 분위기와 협상 성과를 통해 내부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316]

'한계용인'은 부정적 효과도 있으며 이것은 '한계용인'의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첫째, 미국 내외부정치의 반대세력 및 국제 여론 그리고, 동맹에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융자액이 차지하는 몫이 클수록 예산작성의 대외의존성은 높아지며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는 경우 전반적인 국가경제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경제정책수립과 집행에서 독자적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박철룡,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융자를 통하여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예속화책동", 『경제연구』, 2019년 제2호, p. 61.

316 외형상으로는 동맹과 핵용인국 내부의 반대여론을 설득하고 개별 정치인 혹은 정치집단의 내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내걸 수 있다.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 미래의 핵보유희망국들에 (핵보유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셋째, '한계용인'이 남북간 핵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고 따라서, 동맹의 영속적 안보를 보장하진 못한다. 특히 주권 경쟁을 벌이는 한국에게는 더욱 심각하다. 넷째, 북한에게는 한계용인이 가져올 개혁개방이 체제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즉,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개혁개방과 적성국이었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정권을 지탱하던 이념 중심의 정체성과 구심점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317] 그러므로, 소규모 승리연합에 기반을 둔 북한의 개인 독재가 대다수 인민 대중의 이익을 위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전면 개방을 시도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 될 것이다.[318]

---

317 구성원을 설득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의 수정 혹은 재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집단이 이데올로기적 다원성을 승인하는 것은 국가 사회주의 체제의 체제적 특성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김진환, 『북한위기론-신화와 냉소를 넘어』, (서울:선인, 2010), p. 57.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통제 가능성은 피지배 계급에 대한 흡수가능성에 달려 있다. 북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재생산은 북한사회의 공식담론을 독점하여 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끊임없는 패러다임 이동을 통해 새로운 기표를 창안한다. 피지배계급의 인식변화에 맞춰 변화된 기표를 통해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승호, "북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유지 전략," 『북한학보』, 36(1)(2011), pp. 143-176.

정치사상교육은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지향하는 인간 교육"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지지 활동 교육"이라 한다. 북한연구소.『북한교육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p. 56.

318 북한 개인독재는 소규모 승리연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 및 시장 개혁을 가능하게하는 공공재 정책은 항상 과소공급된다. 결국, 국가 및 시장 개혁의 역진적 공진은 장기간의 경제 빈곤으로 귀결된다. 김정,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KWP)』, 38(3) (2022), pp. 101-133.

3. ‘핵용인’

가. ‘핵용인’의 구체적 동기와 사례

‘핵용인’ 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중국봉쇄’를 들 수 있다.[319] 중국의 동북아 전략은 한미일 안보의 약화,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통제권 약화, 미국과 인도의 밀착 견제 등이다.[320] 즉, 세력균형을 위해 인도·파키스탄의 핵을 용인할 때와 같이, 북한이 북핵 미사일의 방향을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돌릴 수 있다면 미국과 동맹이 될 수 있다. $\lambda_1 \geq \frac{P_{ul} - C_{ut} + \pi C_{ua} + C_{up}}{2 P_{ua}}$ (식 6)에 기반으로 ‘핵용인’ 단계를 위한 구체적 동기는 다음과 같다.

- 미국의 대중국 패권 경쟁에서 열위를 보일 때 (예를 들어, 미중 간 GDP와 무역액과 위안화와 달러화 결제액수의 심각한 역전이나 중국과 미국의 국방 예산의 역전되는 경우.)[321]

---

[319] 미국은 인도에서도 그와 같은 전략적가치를 발견했다. 즉,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 지위를 통해 인도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다. 물론. 인도가 제3세계의 리더로서의 위상과 인구, 자원 등의 추가적인 동기가 있었다. 김태우, "미·인도 핵 합의, 새로운 핵문제의 시작 - 한국은 장·단기적인 국가 생존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핵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北韓』,413 (2006), pp. 68-76.

[320] 김성한. “미중 패권 전쟁 가열···한국 정신 바짝 차려야” 21세기평화연구소 편『북핵볼모-대한민국』(서울: 화정평화재단, 2020), p. 190.

[321] 중국의 ‘일대일로’나 ‘진주목걸이’ 정책을 통한 위협을 우려한 인도는 자국 보호를 위해 쿼드 및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했다. Jagannath Panda, “India’s Quad Calculus and China,” https://theasanforum.org/indias-quad-calculus-and-china/ (검색일: 2024년 05월 09일).

○ 중국이나 러시아의 수직적 핵확산 역량이 미국을 초과하여 동북아에서 세력 균형을 위해, 동맹국에 대한 수평적 핵확산을 허용하고 또한 북한을 포섭하고자 하는 경우(즉, 북중러 3각동맹이 한미일 3각동맹의 역량을 초월하는 경우).[322]

○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전쟁 등 중국과 전쟁이나 고강도 분쟁이 임박한 조건에서 북한에 의한 우회 위협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북한이 대중국, 대러시아 MD(Missile Defense) 체제에 참여를 하는 경우.[323]

○ 북한의 세력 균형에 대한 기여효과가 내부정치 차원에서 공감대를

미국에서 공산 세력이 이론을 전파하거나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한 적은 없다. 미국 국가안보법제는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공산주의자들의 공무원채용, 노조활동 등에 대해 광범위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한희원, “자유민주주의 기틀 - 미국 국가안보 법제에 대한 고찰,” 『법과정책연구』, 16(4) (2016), pp. 169-195

322 거꾸로 중국에 대해 미국이 다각적인 우위를 보이고, 특히 안보와 관련하여 대만, 일본, 남태평양 등의 분쟁 가능 지역에서 MD(Missile Defense) 체제 등을 통해 중국을 압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나리오의 북핵 용인 가능성은 줄어든다.(필자)

오바마 대통령 시기, 미 국방부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보고서는 재균형 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A2AD(Anti-access/Area-denial,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을 무력화해 동맹국과 함께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늘리는데 있다. MD(Missile Defense)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무기 체계다. 정욱식, 『MD본색: 은밀하게 위험하게』 (파주: 서해문집, 2015), p. 167.

323 특히, 인도는 미국 주도의 MD 체제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M D체제는 동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MD 참여가 미국과 동맹관계의 수준을 규정할 수 있다. 김관옥, "상대적 이익과 국제협력이론 논쟁의 재조명 -한-미FTA와 미-인도핵협력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大韓政治學會報』, 19.1 (2011), pp. 1-22.

형성하는 경우.[324]

○ 기존 동맹(한국과 일본)이 미국보다 중국에 더 밀착하는 경우.

Breuning모델에 의한 '핵용인'에 대한 유인은 다음과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 북한의 내수시장이 성장하거나 가치 있는 천연자원이 발견되는 등 경제적 가치를 가질 때.

○ 부수적으로, 유능한 중재국이 북미 양국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경우.

○ 부수적으로, 북한이 민주주의나 인권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개선을 보여, '중국봉쇄'에 못지 않는 미국, 동맹의 내부 정치권과 구성원들에 긍정적 진영가치를 보일 때.[325]

---

[324]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비확산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핵확산을 가장 큰 안보위협이라고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파키스탄 핵확산보다는 남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저지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다. 김보미, 『2차 핵시대 미국의 비확산 정책』 (서울: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P. 59

[325] 북한이 비핵화와 더불어 인권문제를 미리 신경쓰고 준비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와 북한의 종국적 목표인 북미수교는 불가능할 것이다. 조정현,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법령 고찰 - 바이든 시대의 북한인권 관점에서," 『외법논집』, 46(3) (2022), pp. 101-125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정부 성명을 통해 NPT 탈퇴를 선언한 후, 그 해 6월 11일 발표된 제1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합중국 공동성명'의 합의원칙은 '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북한은

본 연구는 북핵 용인이 동맹의 핵무장을 초래한다는 인과성을 전제로 했지만, 사실은 북핵 용인과 동맹의 핵무장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다음과 같이, 역전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326]

인권개선 요구를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정 불간섭 원칙은 이후의 북미 합의문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2000년 10월 9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도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포함한다. (필자)

2016년의 미국의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Public Law 114–122])에서 제재해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402조) 타이틀 I, II 또는 III에 규정된 모든 제재 또는 기타 조치는 북한이 해당 요건을 충족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뤘음을 대통령이 인증할 때 종료된다."

- 핵, 화학, 생물학, 방사능 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해야 한다.
- 구금된 북한 시민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
- 평화로운 정치 활동에 대한 검열을 종료해야 한다.
- 개방적이고 대의적인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 북한에 의해 납치되거나 불법적으로 포로로 잡혔거나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구금된 생존 및 사망한 미국 시민 모두에 대해 소재를 확인하고 송환해야 한다.

"H.R.757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CONGRESS.GOV』, (2016년 02월 18일;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757(검색일: 2024년 06월 26일)

[326] 박휘락은 싱가폴과 하노이 회담에서 한국의 '중재자' 혹은 '대화촉진자'라는 역할을 통해 핵무기 폐기를 위해 노력했지만, 제3자로서의 독립성이 중요한 중재의 개념에 부합되지 않아 '중재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재자'의 역할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성과를 낼 수도 없기에 '당사자'의 역할로 복귀해야 하고 북핵의 가장 심각한 위협에 놓인 당사국으로서 한국은 자위권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북핵 능력이 고도화하자, '핵우산'이란 용어부터 폐기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ICBM과 SLBM을 완성한다면 미국은 한국 포기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다. 박휘락,『북핵외통수-비핵화에서 핵균형으로』 (서울: 북코리아, 2022), p. 185-6.

○ 북중러의 3 각 체제가 공고히하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열위를 보일 때, 특히 군사적 세력 균형에서 불리하다면 미국은 북핵 용인과 관련 없이,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을 용인한 것, 그리고 중러가 북핵을 묵인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동맹의 핵을 용인 혹은 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핵용인'의 실현 가능성

북핵 용인을 가장 원하는 국가는 북한일 것이다[327]. 그러므로 북핵 용인을 주도하는 국가도 북한일 것이다. 북한이 2016 년 7 월에 발표한 '조선반도의 비핵화 5 대 조건'을 볼 때, 비핵화는 지난한 과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328]

---

[327] 북핵 용인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제네바 합의 시기와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필자)

제네바 합의는 대미인식 완화, 미국 요구에 대한 반발을 줄이는 효과, 북미 협력을 개선시키는 효과, 북한 내부에 미국요구 지지집단의 형성과 같은 효과를 낳았다. 이중구, 『KEDO의 해체와 북한 핵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에서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서울:늘품플러스, 2018), p. 107.

[328] 북한의 '조선반도의 비핵화 5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내 미국 핵무기 공개, 둘째, 한국 내 미국 핵무기와 기지 철폐 셋째, 한반도와 인근지역으로 미국 핵무기 반입 금지 넷째, 대북 핵무기 사용 및 위협 금지 약속 다섯째,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6년7월6일.

1991년, 미국은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의미가 없으며, 네 번째 또한 '제네바 합의' 와 '9.19 공동성명' 등에서 수차례 이루어졌던 내용의 반복일 뿐이다. 여기에서 세 번째와 다섯 번째의 경우는 미국의 전략무기 투입 및 유사시 신속한 군사작전에 대한 제약을 걸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건은 변화를 이룰 수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수찬,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한 동인과 전략 연구,"

2022 년 9 월 8 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 14 기 7 차 2 일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시정연설에서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 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 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 고 밝혔다.[329] ‘(b)한계용인’에 비해 ‘(d)핵용인’ 을 위해서는 ‘핵통제’, ‘세력균형’, ‘천연자원 이용’, ‘내수시장 개방’ 등을 비롯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제공 가능한 전략적 가치의 수준은 새로운 동맹의 방기, 국내정치적 반대, 비확산 리더십의 훼손에서 오는 손실들을 보상할만한 수준이어야 한다.[330] (식 6)은 그러한 조건을 설명한다. 미국에게 현 동맹의 역할이 지대한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이 ‘(d)핵용인’을 선택하면, ‘(a)한계용인’보다 높은 수준의 ‘역할 내 충돌’과 ‘역할 간 충돌’을 감내해야 한다. 미국이 핵무장한 북한을 인정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329] 김 총비서는 “핵을 대부(대가)로 개선된 가시적인 경제생활환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라고 했고,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했다.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330] Mitchell과 Grygiel은 현상변경세력의 간보기 전략과 동맹 약화는 세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했다. 첫째, 세계 주요지점에서 동시 다발적인 전략적 경쟁이 일어난다. 현상변경세력들의 간보기 전략을 통해 동맹을 시험하고 영토확장을 꾀하는 가운데 동맹은 미국의 안보공약을 불신하여 어정쩡한 자구책을 찾는다. 둘째, 강대국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이 지역 별 전진배치를 그만두고 본토로 후퇴한다. 중·러의 핵능력과 A2AD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물러나면 다시 개입하기는 힘들 것이다. 전성훈, “21세기 강대국 경쟁시대에 북한 핵문제의 진로,” 『아산정책연구원』, 2018년 10월 11일; https://www.asaninst.org/contents/21세기-강대국-경쟁시대에-북한-핵문제의-진로/(검색일: 2024년 06월 19일).

정도로 동맹의 보강을 필요로 하는 정세라면, 핵무장을 시도하는 기존 동맹에 대한 제재와 동맹 방기는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331]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핵을 갖게 되고, 이것은 미국의 핵확산리더십을 훼손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핵경쟁을 벌이는 상황은 수평적 핵확산을 특징으로 하는 2 차 핵시대의 도래뿐 아니라 심화를 전제로 할 수 있다.[332]

한미는 국제정치의 위상이 다르므로 북한과 북핵에 대한 강조점과 우선순위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체제 정착, 더 나아가 통일의 기반 마련을 고려하는 반면, 미국은 본토 안전이나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질서와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지정학적 고려를 앞세운다.[333] 상이한 입장은 동맹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에서

---

[331] 미국의 NPT 미가입국이었던 인도에 대한 제재는 미국 국내법만 적용할 수 있었다. 과거 인도나 파키스탄과 군사 협력관계에 있던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하여 인도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제사회의 비협조는 제재 효과를 약화시켰다. 연정례・김일수, “인도의 핵확산과 미국-인도 안보협력,” 『국제정치연구』, 24(3) (2021), p. 94.

[332] 보복에 의한 억제, 군비통제 및 군축, 수직적 핵확산, 상호확증파괴를 특징으로 하는 1 차핵시대에 비해 2차핵시대는 거부에 의한 억제, 비확산과 핵안보, 수평적 핵확산, 제2격 능력을 특징으로 한다. Andrew Futter, 고봉준 역, 『핵무기의 정치』 (서울:명인문화사, 2016), p. 90.

[333] 미국의 인식에 변화를 주기 위해 핵 및 미사일 고도화 위협이 북한의 역강압 메커니즘이다. 북한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속하는 미국민과 영토에 대한 취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위협, 결사항전 의지, 오판에 의한 발사 가능성을 정부관리와 미군 수뇌부에 주입하려 했다. 김황록,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상대하기』(서울: 블루리본, 2020), p. 148.

방기의 두려움을 품게 한다.[334] 미국 역시 동맹으로부터의 방기를 피하기 위해, 군비증강, 합동군사훈련, 안보협의체구성 등을 제공한다.[335]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가 핵용인에 근접한 협상을 하면서 동맹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동맹은 자신이 든 보험에 의문을 품고, 자구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336] 현재, 미국은 북한과의 적당한 긴장관계 속에 한국과 일본을 영원한 동맹국으로 묶고, 포위전략을 통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337] 그러기 위한 첫번째 전제조건은 동맹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지 않아야 하고, 독립성을

---

[334] 파키스탄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시사점도 크다. 즉, 소련 붕괴 후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전략적가치를 낮추게 되고 파키스탄은 방기되게 된다. 김태형, "파키스탄의 핵 보유 이후 전략변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p. 311.

[335] 김영준, "비대칭 동맹에서 방기 우려에 대한 대책: 한미 동맹의 사례," 『유라시아연구』, 11(4) (2014), pp. 79-96.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약속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에 열린 2006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2013년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A)'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그 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0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때 한・미 양국 외교・국방차관이 참석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문제에 관한 거시적 전략과 정책을 논의하는 고위급 대화 채널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출범시키기로 하였다.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포괄적안보-안보교환론』(서울: 백산서당, 2019), p. 279.

[336]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신뢰상실과 방기의 두려움은 일본이 스스로 재래식 무기와 함께, 가능하다면 핵 자원들에 의존하도록 한다. Hughes, C. W,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mplications for the Nuclear Ambitions of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Asia Policy*, *3*. (2007), pp. 75–104.

[337]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미일동맹의 양안 문제 개입에 대한 견제, 일본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대국화 견제, 군사력 강화,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들 수 있다. 정욱식. 『북핵, 대파국과 대타협의 분수령』(서울: 창해, 2005), pp. 114-117.

일으킬 수 있는 핵 보유는 차단돼야 한다.[338] 그러므로, 동맹의 핵무장을 촉진할 수 있는 미국의 전면적 용인은 거의 불가능하다.[339] 세력균형이 목표라면, 북한에 대한 핵용인 이전에 동맹의 핵무장을 묵인 혹은 방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옵션일 것이다.

'핵용인' 단계로 이전을 막는 동맹의 핵무장 외에 다른 저해요인들도 있다. 미국의 국내외 정치에서 의회 및 민간단체 그리고 대외 리더십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340]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

[338] 박정희 대통령 시기,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한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리아, 프랑스 주재 미 대사관에 보낸 훈령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국제적 핵 시설 공급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이 민감한 장비와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NPT에 한국이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3. 한국 핵시설에 대한 감시 및 첩보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윤섭,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비사-자주국방을 위한 도전』(남양주: 출판시대, 2019), p. 256.

[339] 2006 년 3 월 2 일, 미국과 인도는"핵에너지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 제안한 핵 협력 조건은 인도가 공식적 핵보유 국가로 용인되었음을 암시했다. Ashton B. Carter, "How Washington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India's Bomb," *Foreign Affairs Online*, 10 January 2007, p. 36.

북핵에 대해 비핵화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제재만 완화하려 한다면 한국과 일본 등의 주변국들은 핵안보 불안감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이 핵도미노가 재현될 수 있다. 김황록,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상대하기』(서울: 블루리본, 2020), p. 285.

[340] 예를 들어, 공화당 의회와 더불어 공화당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과정은 특수하다. 서정건, "미국 국내 정치와 북한 비핵화 정책: 합의(agreements)에서 이행(commitments)으로," 『국방연구』, 61(3)(2018), pp. 85-102.

미국 내에는 행정부가 추진 중인 외교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다른 진영이 존재하고 이들이 언제든 집권할 수 있으므로 미국과의 외교협상에서는 항상 플랜 A와 B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하상응, "트럼프 시대 미국인들의 외교정책 인식", 서울대학교

공화당과 민주당의 구분이 없고, 중도적 성향의 민간단체까지 가세한다.[341] 또한, 비확산에 대해 미국의 리더십에 거는 국제적 기대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방어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대만, 남중국해, 북중국해에서 미중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분쟁에서 미국 편에 설 수 있다면, 북한의 전략적가치는 수직 상승할 것이다.[342] 그러나, 북핵 용인이 북한이라는 새 동맹을 확보하는 대신, 한국과 일본이라는 기존의 동맹 관계를 잃거나 약화시킨다면 미국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다. 즉, 북한이 기존 동맹인 중국이나 러시아를 방기하고 신뢰해본 적이 없는 미국을 선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343] 그러한 선택은 내부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런 개혁 개방은 정권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또한, '핵용인'이 동맹의 핵무장을 초래한다면 북한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은 동북아에서

국제문제연구소편,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p 276.

[341] 박건영・정욱식, 『북핵, 그리고 그 이후』(서울: 풀빛, 2007), p. 268.

[342] 그것은 마치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반군을 지원하기 위한 기지로 파키스탄을 활용했을 경우와 동일하다.

[343] 북한이 미국의 중국 봉쇄에 참여하기 힘든 이유도 Breuning 모델에 따라 찾을 수 있다. 관념적 차원에서 첫째, 북한은 역사적으로 미국과 적이었고, 중국과 우방이었다. 둘째, 정치나 경제 체제 측면에서도 중국과 유사성이 높다. 셋째,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과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국가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넷째,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하기 위해선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유물적 차원에서 첫째, 미중 경쟁의 승자가 누가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험을 감행하기 어렵다. 둘째,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어 미국의 제재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에 미국의 핵용인이 긴요하지 않다.

‘핵우위’를 유지하고, ‘핵용인’이 야기하는 기존 동맹과 결별의 위험을 막고 전면적 개방으로 인한 내부 구성원의 동요를 회피하는 차원에서 ‘핵용인’보다 ‘한계용인’을 더 선호할 수 있다.

4. ‘핵포기’

가. ‘핵포기’의 구체적 동기와 사례

동맹이 핵을 포기하는 유인들은 다음과 같다.

- 전술핵무기, 나토 식 핵 공유, 조건부 한시적 전술 핵 재배치, 미국 핵 전략 자산 상시 순환 배치 등의 다양한 핵무장 옵션이 한반도에 제공되는 경우.
- 한미일이 협력의 혹은 독자적인 완벽한 다층 미사일방어 체제가 구축되는 경우.
- 미국 핵우산의 기술, 성능 측면에서 개선되거나 그 효력이 다른 국가에서 증명되는 경우.
- 북핵 통제 노력이나 결과가 결실을 보이는 경우.
- 북미 협상에서 동맹의 안보와 의중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경우.

Breuning 모델 관점에서의 유인들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

○ 구조적 한계를 절감하는 경우.[344]

○ 비핵화 노력이 결실을 보이는 경우.

○ 북한에 체제 전환의 기회가 오는 경우.

나. '핵포기'의 실현 가능성

다음은 핵포기를 전제로 하는 논리들이다. 첫째, 핵을 불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확장억제, 전술핵무기 한반도배치, 전시통제작전권이나 핵우산을 비롯한 동맹(미국)이 제공하는 수단이 동맹의 안보를 위해 충분하거나 적정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다양한 비핵화 관련 주장들이다. 예방 전쟁부터 비핵 지대, 북미 수교, 한국의 중개자 역할과 같은 비핵화 방법론과 당위성을 중심으로 한다. 셋째, 동맹 핵보유의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논리들이다. 즉, 기존 핵강대국의 견제, 동북아 핵 경쟁의 불가피성, 기존 핵보유국 대비 제 2 의 공격능력의 확보 불가능, 국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이 있다.

원자력 분야도 정부의 영향력과 여론의 입김이 강하다. 핵무기 개발은 안보와 관련이 있어 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 가능하지만, 원자력은 내치의 대상으로 국민의 선택에 따라 요동친다.[345]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공약했던

---

[344] 한국의 핵무장에는 미국의 방위공약, 높은 무역 의존도, 5년 단임의 대통령제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병철, "'핵 오리엔탈리즘' 관점에서 본 한국 핵무장 담론의 새로운 방향모색," 『IFES 정책보고서』, 2020.4 (2020), pp. 1-46.

[345] 핵무기에서도 1위인 미국도 원자력발전분야에서는 국민저항을 극복하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건설 중단과 재개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은 현재 중단된 신고리 5·6 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 축소방향의 에너지정책 추진,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 사항들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중이다.[346] 원자력 발전 분야뿐만 아니라, 방폐장 선정 문제, 세계 곳곳에 벌어지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사고 등과 관련하여 한국에도 반핵운동이나 탈핵 움직임이 인다.

핵 포기를 무조건적인 것으로 당연시한다면 한국은 많은 기회와 역할을 잃을 것이다. 핵에 대한 일본의 준비와 대응을 한국이 벤치마킹할 이유는 충분하다. 한미 원자력협정과 달리, 미일 원자력협정은 재처리에 대한 용인을 포함한다. 최종민에 의하면,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를 화학처리하여 물질을 분리하는 과정인데,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어 핵확산 쟁점이 있다고 하며, 한국은 파이로공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재처리를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한 국가의 재처리 수행은 기술 영역을 넘어 안보, 군사, 국제관계와 연결되며, 일본과 달리 한국은 플루토늄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유지할 명분도 일본에 비해 약하다.[347]

원자력발전소 수에선 세계1위지만, 기술측면에선 4위에 불과하다. 이정훈, 『한국의 핵주권』 (서울:글마당, 2013), pp. 47-48.

[346] 윤순진, "원자력발전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쟁점과 과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18(2018), pp. 49-98.

[347] 재처리를 하는 국가는 러시아, 영국, 인도, 중국, 일본, 프랑스다. 이 중 핵무기 미보유국은 일본뿐이다. 미국, 독일, 핀란드는 직접처분을 채택했다. 최종민, "한국과

제 5 절 소 결

이 장에서는 역할 이론에 기초한 Breuning, M 의 행위자-구조 관계의 인지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3 장 게임분석을 통해 찾은 북핵 용인 양상의 유인들을 보충했다. 또한 '역할 충돌' 개념을 이용하여 북핵 용인의 양상과 전개 과정을 담은 북핵 용인 모델들을 찾았고, 북핵 용인 양상의 현실화 가능성을 가늠해보았다.

소결을 통해, 4 장의 논의를 국가 역할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 보자.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수행하는 역할들은 '신념수호자', '반항아', '외톨이', '라이벌', '독립인'이다. '낮은 λ' 조건에서 미국에 대응하는 북한의 역할은 '반항아', '라이벌', '독립인'이라 할 수 있다. '낮은 λ' 조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역할은 '패권국', '라이벌', '교도관'이다. 주로, 하드파워 차원의 역할들이다.

'높은 λ'를 요구하는 '한계용인' 단계에서, 북미가 '파트너-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장거리 미사일 폐기나 부분적인 핵 통제만으로 양국이 '반항아-패권국' 관계를 청산했다고 보기에 무리인 것은 양국이 구축해 온 불신의 역사와 이념적 간극이 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계용인' 단계에서는 각각 '반항아-패권국' 관계가 유지되는 반면, 완전한 수교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핵용인' 단계는 '파트너-파트너' 관계로 격상시킨다.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체계 형성과정 비교,"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21).

미국은 ‘핵용인’ 단계에서 중국봉쇄 등의 세력균형을 위해 북한을 통한 ‘균형자’의 역할도 수행한다. ‘한계용인’ 단계뿐만 아니라, ‘핵용인’ 단계에서도 북미 양국은 ‘신념수호자’와 ‘교도관’의 역할을 고수할 뿐, 전면적인 ‘클라이언트-양육자’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가치(이념)를 좁히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가치의 전도는 곧 ‘체제 전환’과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가치 차원의 거리감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가로막았던 주요 원인이었듯, 북핵 용인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의 인권과 정상적 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의 태도를 감안하면 부분적인 ‘클라이언트-양육자’ 관계는 가능할 수 있다. 이때, 북한은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을 위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거나 기존 이데올로기를 수정해야 할 수 있다.

북핵 용인은 북미 양국 모두 기존 동맹을 방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핵 용인이 빚어내는 역할 집합 속의 역할 간 혼란과 충돌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핵용인’의 실현 가능성은 낮아진다. 북핵을 용인할 정도로 새로운 동맹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상황이라면, 기존 동맹과의 관계는 더욱 긴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핵 용인을 원인으로하는 동맹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제재는 예측만큼 거세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다른 국가에게 넘겨주든지 아니면 약화된다면, 북한은 핵용인을 미국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경제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낸다면, 국가 목표였던 ‘강성대국’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 경우, 동맹은

더 이상 미국에게 안보를 기댈 수 없다. 동시에 동맹에 대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태도와 이 태도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한국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북핵 용인 연구의 의의

비핵화에 대한 주도 세력이 없고 러시아와 중국의 압력이 현저히 줄어든 새로운 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은 제재를 비껴갈 우회로를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치 지형에서 '북핵 용인'이란 연구 주제의 의의는 관련국들에 대한 파급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 용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북한의 대미정책, 전략적 활용가치, 핵 비확산 의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요건들의 미흡성과 미국 유권자들에게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남한이나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게 핵 도미노 유발, 핵 허용의 나쁜 선례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북핵 용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용인'이란 주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 때문에 연구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먼저, 북한이 갖는 불리한 초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정세 변화는 북한으로부터 북핵 용인의 유인이 될만한 전략적 가치를 발견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북핵 용인에 대한 이념적 거리, 동맹의 핵 도미노와 같은 '반대 유인'은 북핵 용인의 걸림돌이기도 하지만 인도나 파키스탄과는 다른 핵용인 양상과 전개 유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북핵 용인 조건과 양상, 그 전개 과정을 밝히는 것을 연구 범위로 한다. 첫째, 북핵 용인 양상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관련국들에 대한 역할 분석, 역할 모델을 통해 도출한다. 게임에 보수로 적용된 변수들과 게임 전략은 북핵 용인의 조건에 해당한다. 둘째, 게임 분석을 통해 조건 별, 북핵 용인 양상을 제안한다. 셋째, 북핵 용인 양상들에 대해 '역할 충돌'의 수준을 비교하여 선차성을 비교한다. 이러한 선차성은 북핵 용인의 전개 과정과 함께 북핵 용인 양상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을 '북미 간 양보수준'과 함께 또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선정했다.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은 동맹이 핵을 포기한 경우,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조건 별로 북미의 양보 수준이 만드는 핵용인 양상과 그 전개 과정이 달라짐을 보이는 것이다. 즉, 이러한 북핵 용인 양상에 대한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의 중대한 기여를 증명함으로써, 동맹이 북미 간 핵 협상에서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임을 보인다.

유물론적 게임 분석과 관념론적 역할 분석

북핵 용인의 양상과 전개 과정에 대한 적정한 설명을 위해서는 권력관계와 이해관계를 포함해야 한다. 물론, 관련국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상, 적대적 역사 경험과 구성원들의 인식과 같은 이념관계도 아울러야 한다. 북핵 용인 관련국들 간의 권력과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은 주로 게임이론으로, 이념관계에

대한 해석은 주로 역할이론을 적용했다. 게임에서 생기기 쉬운 편향은 역할 이론이 보완해 주었고, 역할 해석이 낳기 쉬운 편견은 게임을 통해 개정할 수 있었다. 게임이론과 역할이론의 상호보완 또는 견제 구조는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갖는 차별점이다.

본 연구에서 북핵 용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용인 양상의 제안만큼 용인 양상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정확하게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은 게임에서는 플레이어(북핵 용인 관련국)의 보수(payoff)로 나타난다. 그런데 게임은 양적인 권력과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질적인 이념관계를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복잡미묘한 이념관계를 하나의 숫자나 함수식으로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념 관계를 파악하고 이념 관련 유인들을 발견하기 위해 역할 이론의 Breuning 모델을 활용했다.

북핵 용인 양상들

‘침묵’ 단계에서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에 대한 미련을 가진 채, 북핵 통제에 대한 시급성을 절감하지 못하거나, 북핵에 대한 별다른 협상 재료를 찾지 못한다. 북한은 새로운 냉전체제 속에서 우방국들인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핵에 대한 압력을 해소 혹은 약화시킨 상태다. 북한은 반미불신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면서, 2019 년 말부터 대화의 문을 닫고, 안보는 핵을 통해,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외교는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실리를 얻으려 하고 있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을 선택한 북한이 점점 더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되어야 하겠지만, 새로운 냉전체제 속에서 핵/경제 병진정책의

다소간의 성공을 통해 숨쉴 틈을 마련한다면 '침묵'은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

'한계용인'은 미국, 북한, 동맹에게 다른 긍정적 의미를 갖는다. 즉, 핵용인국은 미래핵에 대한 통제 가능성과 더불어, 가장 시급한 미국본토에 대한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은 인도·파키스탄 수준의 핵용인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는데다가 당장의 경제적 위기를 넘길 수 있다. 동맹은 핵용인국에 직접공격능력 통제효과로 핵우산 효과를 증가시킨다. '한계용인'은 부정적 효과도 있으며 이것은 '한계용인'의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예를 들어, 미국 내부정치 및 여론이나 동맹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고, 혹은 미래의 핵보유희망국들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남북간 핵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북한에게는 한계용인이 가져올 개혁개방이 체제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북핵 용인을 가장 원하는 국가는 북한일 것이다. 그러므로 북핵 용인을 주도하는 국가도 북한이 될 것이다. '한계용인'에 비해 핵용인을 위해서는 인도·파키스탄이 미국에게 제공한 수준에 상응하는 전략적 이익(세력균형이나 내수시장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동맹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맹의 핵무장과 미국내 정치적 손실을 만회할 정도의 이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게 한국과 일본과 같은 현 동맹의 역할이 지대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핵용인'은 '한계용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역할 충돌'을 일으키고, 이 '역할 충돌'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다.

북핵 용인과 동맹의 핵무장가능성과의 인과관계

본 연구는 북핵 용인의 가능성, 불가능성, 불가피성을 논하는 대신, 북핵 용인 조건에 해당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제안하고, 게임과 역할 분석을 통해 조건 별 용인 양상과 전개과정을 제시했다. 특히,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동맹의 핵무장가능성'과 '북미 간 양보수준'을 북핵 용인 양상에 대한 독립변인으로 선택했다.

본 연구는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은 핵을 포기한 경우($\pi < \pi_1$),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pi_1 \leq \pi \leq \pi_2$)와 높은 경우($\pi > \pi_2$), 로 구분하고, 각 조건 별로 북미의 양보수준이 만드는 핵용인 양상과 그 전개 과정이 달라짐을 보였다. 게임의 결과로써 북핵 용인 양상은 가장 낮은 수준의 '침묵(묵인)', 중간 수준의 '한계용인(liminal status), 높은 수준의 '핵용인'으로 구분된다. 동맹의 핵무장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북미는 '침묵'과 '한계용인'을 선택할 수 있고, 핵무장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침묵'과 '핵용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핵무장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침묵', '한계용인', '핵용인'이라는 모든 선택지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북핵 용인의 전략적 가치가 동맹의 핵무장 가치를 초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π(동맹의 핵무장가능성)가 낮은 경우에만, 미국은 '핵용인'을 선택할 수 있다. 동맹의 핵무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미국은 '핵용인' 대신 '한계용인'을 선택해야 한다. 동맹은 $\pi < \frac{C_{ac}}{P_{an} - C_{as} + C_{at}}$ 의 조건에서 핵을 포기한다. 이 조건은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더라도 동맹이 핵개발보다 핵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 보수를 제공할 정도로 '동맹의

핵무장가능성(π)'이 낮은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 미국은 북핵 용인 단계를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즉, '한계용인' 단계나 '핵용인' 단계로 직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맹은 '핵무장가능성'을 결정하는 핵무장에 대한 태도와 의지를 통해 북핵 용인 단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연구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으며 후속 연구의 과제로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북핵 용인 이후에 대한 고민이 생략되었다. 예를 들어, 군축 협상이나 비핵지대에 대한 논의를 예상해볼 수 있다. 둘째, λ 가 비대칭적인 조건이다. 즉, 본 연구의 λ 는 비(比)이며, 대칭적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즉, 북핵 용인 협상에서 북한의 양보 수준은 미국의 양보 수준에 비례한다. 그러나, 양보 수준의 절대치가 비대칭적인 상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 투발수단을 무조건적으로 포기하거나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핵을 용인하는 상황을 말한다. 셋째, 북핵 용인 단계 별 소요 기간을 가늠할 수 없었다. 각 단계를 결정하는 조건, 양상, 전개과정만 포함했을 뿐, 각 단계에 대한 소요 기간과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역할 충돌 개념을 활용하여 각 단계의 실현가능성을 비교하여 이전 단계의 지속성을 유추했을 뿐이다. 넷째, λ 와 π 의 상호 영향에 대해 깊이 다루지 못했다. 설득력이 없거나 동맹의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λ 의 증가는 π 의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λ 와 π 의 상호 영향력에 대한 고민이 추가로 필요하다. 다섯째, 일본의 북핵 대응과 한국과의 연관성에 대한 고민이 깊질 못하다. 본 연구에서 일본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라는 동일한 입장에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보다 기술과 대미 핵 협력 관계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과 동일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일본의 북핵 대응 역량과 태도는 한국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시사점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시사점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미 간 양보수준과 관련된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핵화와 북핵 용인 협상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λ 의 수준은 대체로 증가한다. λ 가 증가하는 이유는 핵 기술과 핵 보유 무기 수 등 전반적인 핵 보유 능력의 향상과 핵 보유 기간 동안 갖게 되는 핵 보유 국가로서의 정체성, 증강된 안보수준, 핵을 바탕으로 하는 전체적으로 신장된 국력을 대응해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경로의존성과 한계수익체증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348] 북핵 고도화로 인한 협상력의 증대와 경로의존성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λ 의 수준이 계속 증가한다. 이 증가된 λ 와 동맹과 미국의 정치권과 구성원이 동의하는 λ 간의 간극을 극복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협상

---

[348]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을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로 정의한다. 수확의 체증은 제도 내부에서 긍정적 환류를 창조하기 때문에, 특정 제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강화의 경향 때문에 제도의 변화가 어려워짐을 설명한다. 김태은, “제도의 변화와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2) (2009a), pp. 45-71.

도저히 말도 안 되고, 합리성을 찾을 수 없는 제도라도 한 번 만들어지면 지속되고 강화될 수 있다. 제도의 지속성은 규칙, 법률과 같이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 관습과 같이 비공식 제도 모두에서 발견된다. 김태은, 『신제도주의-권력, 집단행동 딜레마, 동형화』(서울:대영문화사, 2023), p.430.

담당자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이 문제는 '침묵' 단계가 길어지는 원인이 된다.

다음 시사점은 '핵용인'과 '비핵화' 협상 내용의 유사성과 관련된 것이다. 비핵화와 핵용인이 정반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협상 과정과 내용은 유사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모호한 개념을 활용했기 때문일 수 있고, 아니면 오해와 착각이 주체성을 상실한 외교정책과 결합한 결과일 수도 있다. 북핵 관련 협상에서 주도권을 놓치기 쉬운 동맹에게는 조짐을 읽어 자신의 좌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핵 포기 없는 북한에게는 전략적 이익보다 손실이 쌓이는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349] 그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둘러싼 논의와 노력이 한국에게는 손실보다 이익이 쌓이는 구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계용인'과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협상은 모두 과도기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가진다. 첫째, 두 협상은 '종전', '평화', '불가침'이나 '비핵화'를 표어로 삼고[350] 둘째, 과거핵과 미래핵에 대한 부분적, 잠정적 통제를 포함하고 셋째, 단계적, 부분적 핵통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단계적, 부분적 제재해제를 단행한다. 넷째, 두 협상은 모두 동맹의 핵무장 가능성이

[349] 윤덕민, "핵 있는 북한과 공존 안 된다," 21세기평화연구소 편, 『북핵볼모 대한민국』 (서울: 화정평화재단, 2020), P. 147.

[350] '한계용인화' 협상은 '비핵화' 협상과 비슷한 표어를 내거는 것은 내부나 국제적 반대 입장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높지 않을 것이다.[351] 차이점도 있다. 첫째, '비핵화 협상'이 비핵화 로드맵을 대략적으로라도 제시할 수 있는데 반해 협상목적이 비교적 뚜렷한 '한계용인' 협상은 다음 단계의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어렵다.[352] 둘째, 과거핵에 대한 초점이 다르다. 즉, '한계용인' 협상은 미 본토 공격 통제, 핵물질, 핵무기, 핵기술의 이전 통제 등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 때문에 과거핵에 대한 논의가 흐린 반면, '단계적 비핵화' 협상은 전반적인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에 대한 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비핵화 로드맵 합의'에 협상 성공의 관건이 있다. 셋째, '단계적 비핵화 협상'은 다양한 협상 방식(참여국, 협상 형태 등의 협상 형식과 비핵화 이행과정과 같은 협상 내용)을 보일 수 있지만, 북핵 용인은 단기적이며 북미간 직접 협상으로 진행된다.[353] 양 협상의 내용과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북미 양국의 협상의

---

[351] 비핵화는 협상 목적이 비핵화에 있는 만큼, 동맹의 비핵화를 전제로 할 것이다. 동맹의 핵무장을 촉진하는 '핵용인' 협상과 달리 '한계용인'은 동맹에 대한 핵우산 효과를 강화하기 때문에 동맹의 핵무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352] 북핵 용인 협상은 미 본토 위협이라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단일 목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장거리 핵 투발 수단의 해소와 부분적 핵통제를 협상조건으로 할 것이다.

[353] 비핵화 같은 중대사안의 경우 '핵무기 포기'란 핵심 결정이 미리 확정되지 않는다면,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모두 '선쟁점타결 후회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선회담 후 쟁점타결' 방식 즉,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 또는 해결 없이 우선 대화를 개시하는 점증모형은 일단은 좋지만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 같이 언제든지 회담은 결렬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박휘락, "북한 비핵화 협상 분석: '선(先)회담 후(後)쟁점타결' 방식의 한계," 『동북아연구』, 35(1) (2020), pp. 183-191.

향후의 비핵화 협상이 열린다면, 북핵 기술의 고도화, 핵 시설의 확장 및 다변화는 북한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고, 한번에 폐기하기에도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구조를 정리할 수 있고, 특히 북한이 주장하던 '단계적 비핵화' 협상이 미국과 동맹이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일찍 알아차리게 하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동맹의 핵무장가능성'과 관련된 것이다. 북핵 용인 과정은 미국과 북한의 의지와 관계 변화가 주된 동기가 되고 동맹의 '윈셋(win-set)'의 영향은 제한적이기 쉽다.[354] 하지만, π 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달라진다. 즉, 동맹의 윈셋이 주가 될 수 있다. 즉, 동맹은 '피보호인'냐 '자유인' 이냐 배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배역은 북핵 용인의 양상을 결정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갖는 안보 구조의 유사성때문에 그 안보 구조도 동시에 변환될 수 있다.[355] 즉, 북핵의 위협이 계속되거나 미국이 국제사회 혹은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약화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안보에 관한 자구안을 독립적으로 혹은 협력하여 찾아야 할 것이다.

것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이행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필자)

[354] 하상식.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 실패와 한미공조 과제. 국제정치연구, 19(2) (2016), pp. 1-34.

[355] 일본은 지금까지, NPT와 CTBT 등 비확산 및 핵군축 레짐에서 역할과 의무를 다해왔으며, 일본의 핵무장 논리는 논의 과정에서 집중적 비판을 받고 주류 여론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박영준. "국제 핵질서와 일본의 군축 및 비확산 정책", 이수훈 편, 『핵의 국제정치』(서울: 경남대학교출판부, 2012), pp. 118-136.

전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曾根康弘)의 현실적 외교 4 원칙은 다음과 같다. 외교는 국력 이상은 안 되며, 도박이 될 수 없다. 내정과 외정을 혼동하지 말고, 세계사의 정통적 조류를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356]

[356] 오영환, “다시 나카소네를 돌아본다” 『중앙일보』, 2015년 8월 22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18501186#home (검색일: 2024년 02월 29일).

참 고 문 헌

1. 북한문헌

박철룡.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융자를 통하여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예속화책동.” 『경제연구』. 2019년 제2호.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2.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히기보다 새길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8년 12월 20일.

“로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조선중앙통신』. 2023년 12월 31일.

『로동신문』. 1990년 10월 5일.

『로동신문』. 1992년 2월 4일.

『로동신문』. 2015년 3월 16일.

『로동신문』. 2019년 1월 27일.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로동신문』. 2021년 10월 12일.

『로동신문』. 2022년 9월 1일.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로동신문』. 2024년 1월 16일.

『로동신문』. 2023년 5월15일 ~2024년 5월14일.

“로씨야대통령 로조쌍무적협조 발전시킬것 강조-로동신문에 글 발표,” 『조선중앙통신』. 2024년 6월 18일.

박일문. “남조선에 류포되여있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반동성, 『경제연구』. 2016년 4호.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6년 7월 6일.

『조선로동당규약』. 2021년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조선중앙통신』. 2024년 6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2022년 9월8일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조선중앙통신』. 2022년 8월 19일.

2. 국내문헌

가. 단행본

개번 맥코맥.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 박성준 역. 서울: 이카루스미디어, 2006.

곤도 다카후미. “파키스탄의 핵무기개발 문제와 그 위상” 『핵확산 문제와 아시아』. 김선희 역. 서울: 문, 2012.

곽길섭. 『김정은과 바이든의 핵 시계』. 서울: 기파랑, 2021.

곽승지. “주체사상의 이론체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편.『북한의 사상과 역사인식』. 서울:한울아카데미, 2006.

개리 킹. 로버트 코헤인, 시드니 버바, 『사회과학연구의 설계-질적연구에서의 과학적 추론』. 김석동 역.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3.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 법문사, 1996.

권보람. “공화당 분파 간 세력 균형 변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편.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서울: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김동춘.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서울: 창비, 2005.

김보미. 『2차 핵시대 미국의 비확산 정책: 파키스탄・이란・북한을 중심으로』.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김성학. 『전갈의 절규-북한의 대미불신의 기원과 내면화』.서울: 선인, 2017.

김성한. “미중 패권 전쟁 가열・・・한국 정신 바짝 차려야” 21세기평화연구소 편『북핵볼모-대한민국』. 서울: 화정평화재단, 2020.

김신규. 『약소국의 국제정치』.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8.

김영세. 『게임이론,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서울: 박영사, 2020.

김웅진, 김지희. 『정치학 연구방법론-경험과학연구의 규준과 설계』. 서울: 명지사, 2012.

김정배. 『미국과 냉전의 기원: 공존과 지배의 전략』 . 서울: 혜안, 2001.

김진환. 『북한위기론-신화와 냉소를 넘어』. 서울:선인, 2010.

김태은. 『신제도주의-권력, 집단행동 딜레마, 동형화』. 서울:대영문화사, 2023.

김태형.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이해』.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김태형. “파키스탄의 핵 보유 이후 전략변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김황록.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상대하기』. 서울:

블루리본, 2020.

라몬 페체코 파르도. 『북한 핵위기와 북・미관계』. 권영근, 임상순 역. 서울: 연경문화사, 2016.

루이스 A. 던. 로버트 D, 블랙윌, 알버트 카너세일 편. 김일수, 이정우 역. “미국안보에 대한 새로운 핵보유국의 위협”. 『미국의 핵정책과 새로운 핵보유국』. 서울:한울아카데미, 1997.

마이크 치노이. 『북핵 롤러코스터』서울: 참언론시사IN북, 2010.

마고사키 우케루. 양기호 역.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서울: 메디치미디어, 2008.

박건영・정욱식. 『북핵, 그리고 그 이후』. 서울: 풀빛, 2007.

박건영.『한반도의 국제정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 서울: 오름, 1999.

박영준. “국제 핵질서와 일본의 군축 및 비확산 정책”. 이수훈 편. 『핵의 국제정치』. 서울: 경남대학교출판부, 2012.

박휘락. 『북핵 외통수-비핵화에서 핵균형으로』. 서울: 북코리아, 2022.

백준기. “한국문제의 역사적 재구성과 6자회담(한반도 협조체제의 일 전망)”. 한신대사회과학연구소편. 서울: HWB, 2004.

백창재. 『미국패권연구』. 고양: 인간사랑, 2009.

북한연구소.『북한교육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서정건. 『미국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정쟁은 외교 앞에서 사라지는가 아니면 시작하는가?』.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 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파주: 창비, 2016.

스코트 스나이더. 『벼랑끝 외교』. 안진환, 이재봉 역, 서울: 청년정신. 2003.

스티븐 E. 밀러. 로버트 D, 블랙윌, 알버트 카너세일 편. 김일수, 이정우 역.

『 “새로운 핵확산국들에 대한 지원”. 미국의 핵정책과 새로운 핵보유국』. 서울:한울아카데미, 1997.

신성호, “1·2차 북핵위기와 미국의 대북정책”,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파주: 한울, 2008.

신진. 『북한과 한・미 외교정책의 소용돌이』. 대전: 문경출판사, 2004.

안준호. 『핵무기와 국제정치』. 파주: 열린책들, 2011.

알렉산더 웬트.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 박건영·구갑우·이옥연·최종건 옮김 . 서울: 사회평론, 2009.

앤드루 퍼터(Andrew Futter). 고봉준 역.『핵무기의 정치』. 서울:명인문화사. 2016.

유인태.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과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패권의 미래-미중전략경쟁과 새로운 국제질서』파주: 21세기북스, 2022.

유재광.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핵 및 미사일 위협 원인 고찰: 북한의 ‘전략문화’ 및 ‘체제 불안정’을 중심으로.” 『북한과 국제정치』. 서울:늘품플러스, 2018.

이근욱, “핵 보유 이후 국가들의 행동방식 모델 이론.”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이, 2020.

이윤섭.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비사-자주국방을 위한 도전』.남양주: 출판시대, 2019.

이정철.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편. “북한의 공세적 대외정책과 경제확장전략: 핵-경제 병진 노선의 역조합”. 『북핵, 오늘과 내일』. 서울: 늘품플러스, 2008.

이정훈. 『한국의 핵주권』. 서울:글마당. 2013.

이종석. 『북한의 역사 2』. 고양: 역사비평사, 2021.

이중구. 『KEDO의 해체와 북한 핵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에서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 서울:늘품플러스, 2018.

장 이뽈리뜨, 『헤겔의 정신현상학 I』. 이종철, 김상환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89)=.

장호근. 『예방외교-조기경보 문제로 살펴본 한국전쟁과 제1차 북한핵 위기』.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전경만・임수호・방태섭 등. 『북한핵과 DIME 구상』.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1997.

정욱식 “한국 평화운동의 성과와 전망, 그리고 과제”. 한신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미국의 신보수주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평화문제』. 서울: HWB, 2004.

정욱식. 『MD본색: 은밀하게 위험하게』. 파주: 서해문집. 2015

정욱식. 『북핵, 대파국과 대타협의 분수령』.서울: 창해, 2005.

정욱식. 『사드의 모든 것』. 파주: 유리창, 2017.

정욱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파주: 서해문집, 2023.

조동준.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중소국의 선택”. 『안보위협과 중소국의 선택』.서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9.

조병제.『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서울: 늘품플러스, 2019.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포괄적안보-안보교환론』. 서울: 백산서당, 2019.

조성복. 『탈냉전기 미국의 외교・안보정책과 북한의 핵정책』. 서울: 오름, 2011.

존 폴리메나쯔(John Plamenatz). 진덕규 역.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1982.

존 루이스 개디스. 『미국의 봉쇄전략』. 서울: 비봉출판사. 2017.

주펑. 이상원 역. 『국제관계인론과 동아시아안보』. 성남: 북코리아, 2014.

찰스 프리처드(Charles L. ‘Jack’ Pritchard). 김연철・서보혁 역. 『실패한 외교-부시, 네오콘 그리고 북핵위기』. 서울: 사계절출판사, 2008.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불편한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최아진. “미국과 신흥 핵무기 보유국”.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최용한. 『북미 불신구조 하에서의 비핵화 협상 추진방향』.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최은석, 김동엽. “분단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전스의 관여”. 윤대규 편,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 파주: 한울, 2016.

케네스 왈츠. 임상순 역. 핵 무기 전파, 그 끝없는 논쟁』. 서울: 박영사, 2022.

폴도티・스티븐 플랭크. 김일수・이정우 역. “새로운 핵무기보유국들에 대한 군비통제”. 로버트 D, 블랙윌, 알버트 카너세일 편.『미국의 핵정책과 새로운 핵보유국』. 서울:한울아카데미, 1997.

폴 브래큰. 이시은 역.『제2차 핵시대-전략과 위험, 그리고 새로운 무력 외교.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프랜시스 후쿠야마. 유강은 역.『기로에 선 미국』.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하상응. “트럼프 시대 미국인들의 외교정책 인식”.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편. 『미국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하연섭. 『제도분석』. 서울:다산출판사, 2004.

하영선・전재성・김병연 등. “북핵위기의 새로운 해법”, 『EAI연구보고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6.

한동근. 『게임이론-전략적 의사결정의 이론과 응용』. 서울:경문사. 1997.

한용섭. “핵무기 없는 세계: 이상과 현실” 이수훈 편. 『핵의 국제정치』.서울: 경남대학교출판부, 2012.

한치록. 계량경제학. 서울: 박영사, 2024.

허문영・김수암・여인곤 등. 『한반도 평화체제-자료와 해제』.서울:통일연구원, 2007.

현은희 편. 『G20 국력평가, 한눈에 보기』.서울:국회도서관, 2023.

홍우택・전현준・이수형 등.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1.

나. 논문

고은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게임이론적 분석: 중국과 북핵문제의 교차점.” 『大韓政治學會報』. 30.2, 2022, pp. 79-102.

구갑우.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 『현대북한연구』. 27(1), 2024, pp. 9-53.

권영일. “핵 협상에서 이행 가능한 타협의 조건－원칙의 양보와 책임의 정당화.” 『통일연구』. 27(2), 2023, pp 43-89.

김강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현황과 전망.” 『한국과 세계』. 2(1), 2020, pp. 5-42.

김강녕. “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 『한국과 국제사회』. 1(2), 2017, pp. 171-208.

김관옥. "상대적 이익과 국제협력이론 논쟁의 재조명 -한-미FTA와 미-인도핵협력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大韓政治學會報』. 19.1, 2011, pp. 1-22.

김동수.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 구성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6(4), 2021, pp. 147-163.

김동욱, 김에스라. “‘핵 보유국’ 인도와 ‘핵 강국’ 북한의 경로 유사성 비교 연구.” 『한반도미래연구』. 6.1, 2022, pp. 1-30.

김석준.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함의: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31(4), 2023, pp. 289-314.

김성학. "북미 상호 불신과 제네바합의의 붕괴." 『북한학보』. 38.1, 2013, pp. 81-119.

김영준,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왜 실패했는가? :고비용 신호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김영준. “비대칭 동맹에서 방기 우려에 대한 대책: 한미 동맹의 사례.” 『유라시아연구』. 11(4), pp. 79-96.

김영환.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되기 전략.” 북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김정.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KWP)』. 38(3), 2022, pp. 101-133.

김정배. “미국의 제3세계정책: 이념과 현실 사이.” 『미국사연구』. 40(0), 2014, pp. 169-200.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韓國政治硏究』. 22.3 ,2013, pp. 187-211.

김창희. “김정은시대 북한정치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84) ,2017, pp. 139-160.

김태우. "미·인도 핵 합의, 새로운 핵문제의 시작 - 한국은 장·단기적인 국가생존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핵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北韓』. 413, 2006, pp. 68-76.

김태은. “제도의 변화와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2), 2009, pp. 45-71.

김태현. “적대관념과 정권안보: 동독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국가전략』. 25(2), 2019, pp. 119-145.

김태형. “냉전기 인도-파키스탄 숙적(rival)관계 발전과 미국의 역할: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과 닉슨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5(1), 2022, pp. 31-60.

김현욱.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분석.”『 IFANS FOCUS (국문)』. 2022(26), 2022, pp. 1-3.

김혜원. "냉전시기 북한의 대미외교행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김희수. 신진. "인도의 핵무장 촉진요인 상호작용에 관한 함의." 『군사연구』.148 , 2019, pp. 259-289.

류길재. “김정일 정권하 북한의 개방정책과 안보정책.” 『전략논총』. 9, 1998, pp. 61-117.

박봉규. “북미관계 개선과 주한미군.” 『한국동북아논총』. 23(3), 2018, pp. 201-217.

박수찬.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한 동인과 전략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박영자. “국제사회 대북제재 효과와 북한 동향.” 『북한』. 2016, pp. 76-81.

박영준. “군사대국의 부활 혹은 보통국가의 완성?: 일본 기시다 내각의 안보전략 3문서 공표와 ‘전후 안보정책의 대전환.” 『일본연구논총』. 57(0), 2023, pp. 57-83.

박용수. “한국의 핵무장가능성.” 아세아연구, 65(2), 2022, pp. 101-132.

박재석・황태희. “핵무기 보유 추진 국가들과 경제제재.” 『한국정치학회보』. 52.4, 2018, pp. 103-130.

박형준. “비핵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 연구.” 『북한학연구』. 19(2), 2023, pp. 45-81.

박홍석. “북한위협론과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재검토.” 『21세기정치학회보』. 15(2) , 2005, pp. 144-162.

박휘락. “북한 비핵화 협상 분석: ‘선(先)회담 후(後)쟁점타결’ 방식의 한계.” 『동북아연구』. 2020.

부승찬・박경진.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동기와 지속 요인: Scott D. Sagan의

핵개발 동기 모델의 확장.” 『국가안보와 전략』. 18(1), 2018, pp. 79-110.

서정건. “미국 국내 정치와 북한 비핵화 정책: 합의(agreements)에서 이행(commitments)으로.” 『국방연구』. 61(3), 2018, pp. 85-102.

손한별.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과 선택적 비확산정책: “전략적 균형”을 위한 수평적 핵확산.” 『국방연구』. 62.1, 2019, pp. 63-98. P. 69.

송은희. “북핵을 둘러싼 미·북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49), 2008, pp. 121-136.

앤 크루거(Anne Krueger). “미국의 경제・정치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16.9, 2016, pp. 88-121.

양문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시대의 남북경협: 전망과 과제.” 『동향과 전망』. 104, 2018, pp 89- 123.

엄상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은 가능한가? –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제11차 한국평화연구학회 국제학술세미나, 2014, pp. 247-269.

연정례・김일수. “인도의 핵확산과 미국-인도 안보협력.” 『국제정치연구』. 24(3), 2021, pp. 89-107.

오세정. “비공식 핵 보유 국가가 공식적 핵보유 국가로 부상하는 단계적 전략: 인도의 ‘4단계 핵보유 전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世界地域硏究論叢』. 35.3, 2017, pp. 405-431.

원승종. “일본의 핵무장 제한 요인 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24(0), 2017, pp. 123-150.

유동원. “역할이론의 발전과 국제관계.” 『국제정치논총』. 57(3), 2017, pp. 7-49.

윤대엽.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관계: 관여-헤징의 전략모순”.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제2호, 2021.

이병철. “‘핵 오리엔탈리즘’ 관점에서 본 한국 핵무당 담론의 새로운 방향모색.” 『IFES 정책보고서』. 2020.4, 2020, pp. 1-46.

이성훈, “2022 미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주요 내용 분석과 함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406호, 2022.

이장욱.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획득 가능성 연구: 기존 사실상 핵보유국 사례를 토대로.” 『글로벌정치연구』. 10.2, 2017. Pp. 35-87.

이재원. “한국 핵정책의 재조명: 핵에 관한 네 가지 시각과 담론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31(2), 2021, pp. 1-23.

이재원. “동맹의 안보 공약과 핵확산: 한미동맹과 북중동맹 사례 연구.” 『국제지역연구』. 32.2, 2023, pp. 117-140.

이주희. “비핵화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 비핵화 과정 중심으로.” 『국제학 논총』. 34, 2021, pp. 51-79.

이창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정치: 핵개발 동향 및 동기와 전망." 『인문사회』. 21 7.6, 2016, pp. 1049-1069.

이태윤. “국제 핵테러리즘의 전쟁론적 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pp.71 – 110.

이태윤. “전쟁양상의 변화와 대테러정책 발전방향.” 『미래사회』. 8(1), 2017, pp. 41-66.

이헌경. “북한의 핵무장과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13, pp. 45-57.

이호철.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한국과 국제정치』. 35(1), 2019, pp. 223-240.

임도빈.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양적인 질적 연구와 질적인 질적 연구." 『정부학연구』. 15.1, 2009, pp. 155-188.

장석준. “북한・인도・파키스탄의 핵무장 정책 동인을 통해 본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가능성.”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4(2), 2018, pp. 170-210.

장하은, 유성훈. “북한의 인권 권고 수용 결정요인 분석: UN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1-3주기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30(2), 2024, pp. 63-92.

전진호.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와 한일 원자력 협력.” 『한일군사문화연구』. 37(0), 2023, pp. 5-28.

정영철. “북한의 반미.” 『신아세아』. 18(2), 2011, pp. 146-170.

정우람. “미국의 북핵정책 변화와 북한의 대응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정재욱. “공약신뢰문제와 이란 핵협상.” 『세계지역연구논총』. 40(2), 2022, pp. 131-159.

조동호. “경제·핵 병진노선의 의미와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전망.” 『국가전략』. 19(4), 2013, pp. 33-56.

조동훈. “내생성과 표본선택편의의 차이는?.” 『국제노동브리프』. 6(2), 2008, pp. 97-102.

조양현. “북핵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인식 및 대응-북한 핵 위협 현실화에 대한 평가 및 자국 이익 확대 노력.” 『한국국가전략』. 2(1), 2017, pp. 353-403.

조정현.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법령 고찰 - 바이든 시대의 북한인권 관점에서.” 『외법논집』. 46(3), 2022, pp. 101-125.

최병구. “잠재적 핵능력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 『한국외교협회 외교광장』. XXII-2(2월 11일), 2022.

최수봉, “북한의 국가정체성과 ‘욕설 외교’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최종민. “한국과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체계 형성과정 비교.”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2021, pp. 359-407.

하상식.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 실패와 한미공조 과제.” 『국제정치연구』. 19(2), 2016, pp. 1-34.

하유수. “김정은 정권의 대미전략 연구: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한희원. “자유민주주의 기틀 - 미국 국가안보 법제에 대한 고찰.” 『법과정책연구』. 16(4), 2016, pp. 169-195.

다. 기타

“120 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대통령실: file:///C:/Users/USER/ Downloads/120% EB%8C %80%20%EA%B5%AD%EC%A0%95%EA%B3%BC%EC%A0%9C%20(1).pdf

“2022 년 일본 국가안보전략 전문(全文)-국문번역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https://kims.or.kr/publication/issue-focus/if2212/

“2023 년 국민 통일 의식 조사.” KBS: https://news.kbs.co.kr/ datafile /2023/08/20230815_XQV918.pdf

“DJ “美네오콘 북핵 이용…제재강화는 역효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0609141819541

“김정은 핵도박, 국익 위해 인도-파키스탄 핵실험 눈감아준 미국 보고....”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 article/21939629#home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41303423.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분석." 외교안보연구소: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 n Salt =null&pblctDtaSn=14068&menuCl=&clCode=P07& Korean EngSe=KOR&pclCode =&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EA%B9%80%ED%98%8 4% EC%9A%B1&pageIndex=1.

“尹 대통령,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관련 서면 브리핑.” 대한민국대통령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 GvCftpuP.

“미국이 북핵 보유 일단 용인할 수도.”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 /24031365#home.

“文 땐 2시간 지각한 푸틴, 김정은 회담엔 30분 먼저 왔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2228.

“미 여론조사, 미국인 10명 중 8명 북한에 차가운 감정.” VOA: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survey-sentiment-toward-northkorea /6057856.html.

“<창간 22주년 특집-창간 기념 여론조사>“한국도 核무기 개발해야” ‘찬성’ 62.0%, ‘매우 찬성’ 20.5%.” 『문화일보』. 2013년 11월 01일.

“북미 군축협상은 한미동맹 와해의 시작이다” 아산정책연구원: https://www.asaninst.org/contents/북미-군축협상은-한미동맹-와해의-시작이다.

“북-중-러-이란, 새로운 '악의 축'?” 연합뉴스: https://www.yna. co.kr/view/AKR2024 0110140800022.

“북한 리용호 외무상 기자 회견: ‘전면적 제재해제 아닌 일부해제’ 원했다.”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47404051.

“북한체제의 개요와 특징”, KBS World Radio: https://world.kbs.co.kr /special/northkorea/contents/archives/politics /summary.htm?lang=k.

“북핵 인정하면 역내 핵 도미노…한·일·타이완 연쇄 반응할 것.” VOA: https://www.voakorea.com/a/7292437.html.

“심상찮은 북핵 묵인·타협론, 비핵화의 위기.” The Joongang: https://www.joongang. co .kr/ article/25235599#home.

오영환, “다시 나카소네를 돌아본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 /article/18501186#home.

“윤석렬 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정책 브리핑: file:///C:/Users/admin/ Downloads/ 202207% 20%EC%9C%A4%EC%84%9D%EC%97%B4%EC%A0%95% EB%B6%80%20120%EB%8C%80%20%EA%B5%AD%EC%A0%95%EA%B3%BC%E C%A0%9C.pdf.

“북한의 대외 무기거래 실태와 최근 러북 군사무기 거래 파급효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s://www.inss.re.kr /publication/ bbs/ib_view.do?nttId=41037038.

“국가간 신뢰와 글로벌 가치사슬.” 영남일보: https://www. yeongnam.com/web/view. php ?key=20190802.010220751410001.

"한반도 핵시대에 맞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 https://www.kdi.re.kr/research/monNorth?pub_no=17874.

"21세기 강대국 경쟁시대에 북한 핵문제의 진로." 아산정책연구원: https://www.asaninst.org/contents/21세기-강대국-경쟁시대에-북한-핵문제의-진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핵자강) 반대론자들의 논리에 대한 반박." SPN 서울평양뉴스: http://edu.copykiller.com/ edu-source/faq/?mod= document&uid=156.

"김정은·푸틴, 국제정치 문법에 '도전'하다."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 world/ world_general/54418.html.

"한국, 핵무장 비용 감수 가능…타국도 이해할 수도."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317_0002230977#_PA.

"힘 빠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기권한 중국의 속내는?"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world/china/article/202403291750001.

3. 외국문헌

가. 단행본

Aggestam, Lisbeth. *Role Theory and European foreign policy: A framework of analysis*. In The European Union's Roles in International Politics: Concepts and Analysis, edited by Ole Elgstrom and Michael Smith. London: Routledge, 2006.

Akan Malici, Stephen G. Walker. *Role Theory and Role Conflict in U.S-Iran Relations: Enemies of Our Own Making*, New York: Routledge, 2017.

Brams. S. *Theory of Mo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Ben D. Mor and Zeev Maoz. *Bound by struggle: The strategic evolution of enduring international rivalrie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2.

BENNETT, B. W., CHOI, K., GO, M.-H., BECHTOL, B. E., PARK, J., KLINGNER, B., & CHA, D.-H.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Looking Beyond Nuclear Capability. In Countering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RAND Corporation, 2021.

Breuning, M. *"Role Theory Research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ate of the Art and Blind Spots,"* in S. Harnisch, C. Frank, and H.W. Maull (eds.) Role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pproaches and Analyses. New York: Routledge, 2011.

Breuning, Marijke. *"Role Theory Research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ate of the Art and Blind Spots,"* in S. Harnisch, C. Frank, and H. W. Maull (eds.) Role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pproaches and Analyses. New York: Routledge, 2011.

Debs, Alexandre and Nuno P. Monteiro, *Nuclear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Durrani, Mahmud A. *INDIA & PAKISTAN The Cost of Conflict and The Benefits of Peace,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Etel Solingen, *Nuclear Log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Feliciano de Sá Guimarães. *A Theory of Master Role Transition: Small Powers Shaping Regional Hegemons (Role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outledge, 2021.

Gustavsson, Jakob. *How Should We Study Foreign Policy Change? Cooperation and Conflict.* 1999.

Hans Binnendijk, Richard L. Kugler, *Seeing the Elephant: The U.S. Role in Global Security*,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06.

Kapur, Ashok. *India's Nuclear Option: Atomic Diplomacy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6.

Mitchell Reiss, *Bridled Ambition: Why Countries Constrain Their Nuclear Capabilities*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1995.

Sarbin, T., and V. Allen. Role Theory. *I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ed. G. Lindsey and E. Aronson, Reading: Addison-Wesley, 1968.

Sebastian Harnisch, S. Berstick, and J. Gottwald, *China's international roles* New York: Routledge, 2016.

Sebastian Harnish, Cornelia Frank, and Hanns W. Maull (eds). *Introduction. In Role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pproaches and Analyses*. Oxon: Routledge, 2011.

Stephen G. Walker. *Role Theory and the Cognitive Architecture of British Appeasement Decisions*. New York: Routledge, 2013.

Turner, R. H. *Role: sociological aspects*.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3:552-57. New York: Macmillan & Free Press, 1968.

가. 논문

Alastair Iain Johnston, “China’s new old thinking”,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3(Winter 1995/6)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Biden’s Pursuit of Rebuilding and Stability. In Rebuilding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21. pp. 43–50.

Ashton B. Carter, “How Washington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India’s Bomb,*” Foreign Affairs Online,* 10 January 2007.

Bates, F. L. (1956). Position, Role, and Status: A Reformulation of Concepts. *Social Forces*, 34(4).

Breuning, M. Roles and Realities: When and Why Gatekeepers Fail to Change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Analysis,* 9(3). 2013.

Bruce Biddle, “Recent development in role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86.

Bruce Bueno de Mesquita and William H. Riker, “An Assessment of the Merits of Selective Nuclear Proliferation,”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982 Jun 01. 26(2).

Cantir, Cristian and Juliet Kaarbo. Contested roles and domestic politics: Reflections on Role Theory in foreign policy analysis and IR theory. *Foreign Policy Analysis,* No. 8. 2012.

Cha, V. “Next Steps 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2018.

Cottrell, Leonard, “The adjustment of the individual to his age and sex ro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 (October). 1942.

Dalton, Toby, and Alexandra Francis. “South Korea’s Search for Nuclear Sovereignty.” *Asia Policy,* no. 19. 2015.

Deepa M. Ollapally, “Mixed Motives in India's Search for Nuclear Status,” *Asian Survey,* Vol. 41, No. 6. 2001.

Grossman, Michael. Role Theory and Foreign Policy Change. *International Politics* 42. 2005.

Harnisch, Sebastian. Conceptualizing in the minefield: Role Theory and foreign policy learning. *Foreign Policy Analysis,* Vol. 8, No. 1. 49. 2012.

Hartpence M. The economic dimension of Sino–Pakistani relations: An overview.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0(71). 2011.

Holsti, K. J. National Role Concep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4(3). 1970.

Hughes, C. W.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mplications for the Nuclear Ambitions of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Asia Policy,* 3. 2007

Ikenberry, G. J. (1988).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1). pp. 219-243.

John W. Garver, "The Indian Factor in Recent Sino-Soviet Relations," in *The China Quarterly 125* (March 1991).

Kapur, S. Paul and Sumit Ganguly. "The Transformation of U.S.-India Relations" *Asian Survey,* Vol. XLVII, No. 4. 2007.

Mascaro, Anthony D., et al. "Sustaining the Credibility of the Nuclear Umbrella in the Twenty-First Century." On the Horizon: A Collection of Papers from the Next Generation, edited by Sarah Minot Asrar,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2019.

Narang, Vipin. "Strategies of Nuclear Proliferation." *International Security* Vol. 41, No. 3 (Winter 2016/17), pp. 110-150.

Morgenthau, H. Another 'Great Debate:'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46. 1952.

Peter D. Fever and Emerson M. S. Niou. "Managing Nuclear Proliferation: Condemn, Strike, or Assis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0, No. 2. 1996

Pritchard, C. L., Tilelli, J. H., & Snyder, S. A. U.S. Policy Options. In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pp. 11–19).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0.

Robert Ellsworth, Andrew Goodpaster, and Rita Hauser, "America's National Interests: A Report from 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 Washington, D.C.: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July 2000.

Rodrigues, C. Unfinished Business: The Implementation of U.S. Nonproliferation Engagement Towards North Korea. *North Korean Review,* 18(1). 2002.

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Weapons? There Models in Search of the Bomb," *International Security,*21:3(1996-7).

Warner, Carolyn M., and Stephen G. Walker. 2011. "Thinking about the Role of Religion in Foreign Policy: A Framework for Analysis." *Foreign Policy Analysis* 7, 2011. pp. 113-135.

Paul D. Wolfowitz, "Clinton's First Year," *Foreign Affairs* 73, no. 1(1994).

Williams Epstein, "Why States Go-And Don't Go-Nuclear,"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No.*430 (March 1977).

다. 기타

Aggestam, L. *"Role Conceptions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n Foreign Policy,"* AERNA Working Paper, (1999); https://www.sv.uio.no/arena/english/research/ publications/arena-working-papers/1994-2000/1999/wp99_8.htm

"Biden says North Korean challenge is 'equally as threatening as it was before': TIME", (2024,06,05);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4/06/103_375996.html,

Charles D. Ferguson, (2015, May 5). *HOW SOUTH KOREA COULD ACQUIRE AND DEPLOY NUCLEAR WEAPONS.* Npolicy.org. https://npolicy.org/wp-content/uploads/2021/08/ Ch4_Ferguson-1.pdf Access

Daniel Salisbury and Darya Dolzikova*, 'Profiting from Proliferation? North Korea's Exports of Missile and Nuclear Technology'*, Occasional Papers, 15 December 2023, RUSI https://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occasional-papers/profiting-proliferation-north-koreas-exports-missile-and-nuclear-technology

Hugh Gusterson, *"Thinking creatively about the North Korean stalemat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09.8.12), https://thebulletin.org/2009/08/thinking-creatively-about-the-north-korean-stalemate/

"H.R.757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CONGRESS.GOV, (2016.02.18),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757

Hymans, J. E. C. *North Korea's Nuclear Neurosi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63(3), 2007, pp. 44–74. https://doi-org.nasca.kyungnam.ac.kr/10.2968/063003010

Jagannath Panda, *"India's Quad Calculus and China,"* https://theasanforum.org/indias-quad-calculus-and-china

Joyce Battle. *"India and Pakistan – On the Nuclear Threshold"*,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6/, (Access: 2023.09.30)

2022 Nuclear Posture Review, p. 9.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1. May. THE WHITE HOUSE.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2. Oct.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Access: 2024.06.07)

"Rep, Sherman Says U.S. Needs to See N. Korea Freeze Mass-Destruction Weapon Creation." Feb 27. 2019, Bloomberg.

S.J. Johnson et al., *"Development of the Safeguards Approach for the Rokkasho Reprocessing Plant,"* IAEA, IAEA-SM-367/8/01, 1997 u http://www-pub.iaea.org/MTCD/publications/PDF/ss2001/ PDF%20files/Session%208/Paper%208-01.pdf

보론 [게임 산식]

보수는 $u_{플레이어}$(전략) 형식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u_{동맹}$(핵개발)' 은 동맹이 핵개발을 선택했을 때의 보수를 뜻한다.

보론 1. '동맹'은 다음의 전략 별, 보수를 가진다.

- $u_{동맹}$(핵개발) $= \pi(P_{an} - C_{as} - C_{ac}) + (1-\pi)(-C_{at} - C_{ac}) = \pi P_{an} - \pi C_{as} + \pi C_{at} - C_{at} - C_{ac}$
- $u_{동맹}$(핵포기) $= -C_{at}$

동맹이 핵개발을 선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u_{동맹}(\text{핵개발}) \geq u_{동맹}(\text{핵포기}) \Leftrightarrow \pi \geq \frac{C_{ac}}{P_{an} - C_{as} + C_{at}} = \pi_1 \quad (\text{식 } 1)^{357}$$

보론 2. $\pi \geq \frac{C_{ac}}{P_{an} - C_{as} + C_{at}}$ (식 1)에서 핵용인을 하면, 동맹은 '핵개발'을 선택한다. 이 경우, 핵용인국은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2'에서 다음의 전략 별 보수를 가진다.

- $u_{핵용인국}$ (핵용인) $= -\pi C_{ua} + \lambda_2 P_{ua} - C_{up}$ [358]

[357] $\Leftrightarrow \quad \pi P_{an} - \pi C_{as} + \pi C_{at} - C_{at} - C_{ac} \geq -C_{at}$

[358] $= \pi(\lambda_2 P_{ua} - C_{up} - C_{ua}) + (1-\pi)(\lambda_2 P_{ua} - C_{up})$

- $u_{\text{핵용인국}}$ (λ_1 수락 + λ_2 거절) $= \lambda_1 P_{ua}$

'핵용인국 2'에서 '핵용인'을 선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u_{\text{핵용인국}}$ (λ_1 수락 + λ_2 거절) $\leq$ $u_{\text{핵용인국}}$ (핵용인)

$\Leftrightarrow \quad \lambda_1 \geq \frac{\pi\ C_{ua} + C_{up}}{p_{ua}}$ (식 2) [359]

보론 3. ((식 2)의 반대조건인 $\lambda_1 < \frac{\pi\ C_{ua} + C_{up}}{P_{ua}}$)에서 '핵용인국 2'가 '$\lambda_1$ 수락 + λ_α 거절 '을 선택하면, 의사결정점, '핵보유희망국'은 다음의 전략별 보수를 가진다.

- $u_{\text{핵보유희망국}}$ (거절) = $P_{nn} + P_{na} - C_{ns}$
- $u_{\text{핵보유희망국}}$ (λ_1 수락 + λ_α 추가제안) = $P_{nn} + \lambda_1 P_{no}$

핵보유희망국이 'λ_1수락 + λ_α 추가제안'을 선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u_{\text{핵보유희망국}}$ (거절) $\leq$ $u_{\text{핵보유희망국}}$ (λ_1수락 + λ_α 추가제안)

$\Leftrightarrow \qquad \lambda_1 \geq \frac{P_{na} - C_{ns}}{P_{no}}$ (식 3) [360]

---

[359] $\Leftrightarrow\ \lambda_1 P_{ua} \leq -\pi C_{ua} + \lambda_2 P_{ua} - C_{up}$ ($\lambda_2 = 2\lambda_1$,)

[360] $\Leftrightarrow\ P_{nn} + P_{na} - C_{ns} \leq P_{nn} + \lambda_1 P_{no}$

보론 4. (식 3)의 조건에서, 의사결정점, '핵보유희망국'에서 ' λ_1 수락 + λ_α 추가제안'을 선택하면, 핵용인국은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1'에서 다음의 전략별 보수를 가진다.

- $u_{\text{핵용인국}}$ (현상유지) = $P_{ul} - C_{ut}$
- $u_{\text{핵용인국}}$ (λ_1 제안) = $\lambda_1 P_{ua}$

'핵용인국 1'에서 'λ_1제안'을 선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u_{\text{핵용인국}}(\text{현상유지}) \leq u_{\text{핵용인국}}(\lambda_1 \text{ 제안})$$

$$\Leftrightarrow \lambda_1 \geq \frac{P_{ul} - C_{ut}}{P_{ua}} \qquad (\text{식 } 4)^{361}$$

보론 5. (식 2)의 조건에서 의사결정점, '핵보유희망국'은 다음의 전략 별 보수를 가진다.

- $u_{\text{핵보유희망국}}$ (λ_1거절) = $P_{nn} + P_{na} - C_{ns}$
- $u_{\text{핵보유희망국}}$ (λ_1 수락 + λ_α 추가제안) = $\pi P_{nn(w/o\ primacy)} + P_{nn} + \lambda_2 P_{no} - \pi P_{nn}$ [362]

'핵보유희망국'이 'λ_1 거절' 대신, 'λ_1 수락 + λ_α 추가제안'을 선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u_{\text{핵보유희망국}}(\lambda_1 \text{ 거절}) \leq u_{\text{핵보유희망국}}(\lambda_1 \text{ 수락} + \lambda_\alpha \text{ 추가제안})$$

---

[361] $\Leftrightarrow \quad P_{ul} - C_{ut} \leq \lambda_1 P_{ua}$

[362] $\Leftrightarrow \quad \pi(P_{nn(w/o\ primacy)} + \lambda_2 P_{no}) + (1-\pi)(P_{nn} + \lambda_2 P_{no})$

$\Leftrightarrow \quad \lambda_1 \geq \frac{P_{na} - C_{ns} - \pi(P_{nn(w/o\ primacy)} - P_{nn})}{2\,P_{no}}$ (식 5)[363]

보론 6. (식 5)의 조건에서 핵용인국은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1'에서 다음의 전략 별 보수를 가진다.

- $u_{핵용인국}$ (현상유지) = $P_{ul} - C_{ut}$
- $u_{핵용인국}$ (λ_1 제안) = $-\pi C_{ua} + \lambda_2 P_{ua} - C_{up}$ [364]

핵용인국이 'λ_1 제안'을 선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u_{핵용인국}$ (현상유지) ≤ $u_{핵용인국}$ (λ_1 제안)

$\Leftrightarrow \ \lambda_1 \geq \frac{P_{ul} - C_{ut} + \pi C_{ua} + C_{up}}{2\,P_{ua}}$ (식 6)[365]

보론 7. (식 1)의 반대 조건에서 동맹이 핵포기를 선택하면, 핵용인국은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2'에서 다음의 전략 별 보수를 가진다.

- $u_{핵용인국}$ (핵용인) = $\lambda_2 P_{ua} - C_{up}$
- $u_{핵용인국}$ (λ_1 수락 + λ_α 거절) = $\lambda_1 P_{ua}$

---

[363] $\Leftrightarrow \ P_{nn} + P_{na} - C_{ns} \leq \pi P_{nn(w/o\ primacy)} + P_{nn} + \lambda_2 P_{no} - \pi P_{nn}$ $(\lambda_2 = 2\lambda_1)$

[364] = $\pi(\lambda_2 P_{ua} - C_{up} - C_{ua}) + (1-\pi)(\lambda_2 P_{ua} - C_{up})$

[365] $\Leftrightarrow \ P_{ul} - C_{ut} \leq -\pi C_{ua} + \lambda_2 P_{ua} - C_{up}$

‘핵용인국 2’에서 핵을 용인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u_{\text{핵용인국}}(\lambda_1 \text{수락} + \lambda_\alpha \text{거절}) \leq u_{\text{핵용인국}}(\text{핵용인})$$

$$\Leftrightarrow \quad \lambda_1 \geq \frac{C_{up}}{P_{ua}} \quad (\text{식 } 7)^{366}$$

보론 8. (식 7)의 조건에서 핵용인국이 ‘핵용인’을 선택하면, 의사결정점, ‘핵보유희망국’은 다음의 전략 별 보수를 가진다.

- $u_{\text{핵보유희망국}}(\lambda_1 \text{거절}) = P_{nn} + P_{na} - C_{ns}$
- $u_{\text{핵보유희망국}}(\lambda_1\text{수락} + \lambda_\alpha \text{추가제안}) = P_{nn} + \lambda_2 P_{no}$

‘핵보유희망국’이 ‘λ_1수락 + λ_α 추가제안’을 선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u_{\text{핵보유희망국}}(\lambda_1 \text{거절}) \leq u_{\text{핵보유희망국}}(\lambda_1\text{수락} + \lambda_\alpha \text{추가제안})$$

$$\Leftrightarrow \qquad \lambda_1 \geq \frac{P_{na} - C_{ns}}{2\,P_{no}} \quad (\text{식 } 8)^{367}$$

보론 9. (식 8)의 조건에서, 의사결정점, ‘핵보유희망국’에서 ‘λ_1 수락 + λ_α 추가제안’을 선택하면, 핵용인국은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1’은 다음의 전략 별 보수를 가진다.

---

366 $\Leftrightarrow \quad \lambda_2 P_{ua} - C_{up} \quad \geq \quad \lambda_1 P_{ua} \;\; (\lambda_2 = 2\lambda_1)$

367 $\Leftrightarrow \quad P_{nn} + P_{na} - C_{ns} \leq P_{nn} + \lambda_2 P_{no} \;\; (\lambda_2 = 2\lambda_1)$

- $u_{\text{핵용인국}}$ (현상유지) = $P_{ul} - C_{ut}$
- $u_{\text{핵용인국}}$ (λ_1 제안) = $\lambda_2 P_{ua} - C_{up}$

'핵용인국 1'이 'λ_1 제안'을 선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u_{\text{핵용인국}}$ (현상유지) ≤ $u_{\text{핵용인국}}$ (λ_1 제안)

$\Leftrightarrow \lambda_1 \geq \frac{P_{ul} - C_{ut} + C_{up}}{2 P_{ua}}$ (식 9)[368]

보론 10. (식 7)의 반대조건, $\lambda_1 < \frac{C_{up}}{P_{ua}}$ 에서 핵용인국이 'λ_1수락 + λ_2거절'을 선택하면 의사결정점, '핵보유희망국'은 다음의 전략 별 보수를 가진다.

- $u_{\text{핵보유희망국}}$ (λ_1 거절) = $P_{nn} + P_{na} - C_{ns}$
- $u_{\text{핵보유희망국}}$ (λ_1수락 + λ_α추가제안) = $P_{nn} + \lambda_1 P_{no}$

'핵보유희망국'에서 'λ_1수락 + λ_α추가제안' 선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u_{\text{핵보유희망국}}$ (λ_1 거절) ≤ $u_{\text{핵보유희망국}}$ (λ_1수락 + λ_α 추가제안)

$\Leftrightarrow \quad \lambda_1 \geq \frac{P_{na} - C_{ns}}{P_{no}}$ (식 10)[369]

---

[368] $\Leftrightarrow P_{ul} - C_{ut} \leq \lambda_2 P_{ua} - C_{up} \quad (\lambda_2 = 2\lambda_1)$ 【그림 4-5】에서 (식 9)의 위치는 (식 6)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식 6)에서 π=0 일 때가 (식 9)의 위치가 된다.

[369] $\Leftrightarrow P_{nn} + P_{na} - C_{ns} \leq P_{nn} + \lambda_1 P_{no}$

보론 11. (식 10)의 조건에서, 의사결정점, '핵보유희망국'이 'λ_1 수락 + λ_α 추가제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핵용인국은 의사결정점, '핵용인국 1'에서 다음의 전략 별 보수를 가진다.

- $u_{\text{핵용인국}}$ (현상유지) = $P_{ul} - C_{ut}$
- $u_{\text{핵용인국}}$ (λ_1 제안) = $\lambda_1 P_{ua}$

핵용인국이 'λ_1 제안'을 선택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u_{\text{핵용인국}} \text{ (현상유지)} \leq u_{\text{핵용인국}} \text{ (}\lambda_1 \text{ 제안)}$$

$$\Leftrightarrow \quad \lambda_1 \geq \frac{P_{ul} - C_{ut}}{P_{ua}} \qquad \text{(식 11)}^{370}$$

370 $\Leftrightarrow \quad P_{ul} - C_{ut} \leq \lambda_1 P_{ua}$

ABSTRACT

Study on North Korea nuclear-weapon recognition

-Focusing on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possibility of the alliance's nuclear armament-

Lee, Joong H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rected by Prof. Yoo Youngsu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lies in the fact that 'North Korea nuclear-weapon recognition' has a profound ripple effect on the security of the countries involved. North Korea nuclear-weapon recognition h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existing cases of recognition. Comparatively, North Korea's strategic value is poor. On the other hand, it is impossible to recognize North Korea nuclear-weapon for various reasons, such as the gap in ideology and identity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fact that the country that recognize it is an enemy, nuclear domino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xpectations of non-proliferation leadership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difficulty in forming consensus among allies and voters. This study is based on the following issues. First, despite North Korea's unfavorable initial conditions, North Korea may already possess strategic value that could be an incentive to recognize nuclear weapon, or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may create new opportunities. Second, opposing incentives, such as the alliance's nuclear domino, reduce or block the possibility of 'nuclear-weapon recognition', but on the other hand, if nuclear-weapon recognition occurs, it can be a cause of a nuclear-weapon recognition pattern that is different from existing nuclear-weapon recognition cases, so it must be deeply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independent variables for 'nuclear-weapon recognition' are 'the level of concess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the

alliance's nuclear armament'. The 'possibility of nuclear armament of the alliance' is divided into case where the alliance has given up nuclear weapons, case where the probability of nuclear armament is low, and case where the probability of nuclear armament is high. In addition, the North Korean nuclear-weapon recognition is divided into the lowest level of 'silence (acquiescence)', the middle level of 'liminal recognition', and the high level of 'nuclear-weapon recognition'. If the alliance is 'highly likely to be nuclear-armed,' North America can choose 'liminal recognition' instead of 'nuclear-weapon recognition', which is the highest level. On the other hand, if the 'possibility of nuclear armament is low' or is very low that the alliance will give up nuclear weapons, 'nuclear-weapon recognition' can be selected. These results show that allies can determine the level of North Korean nuclear tolerance through their attitude, will, and capabilities toward nuclear armament.

The scop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onditions, aspects, and development process of North Korea's 'nuclear-weapon recognition'. An appropriate explanation for recognizing North Korea's nuclear-weapon must include power and interests. Of course, ideational relationships such as the ideas that constitute the identity of the countries involved, hostile historical experiences, and the perceptions of members must also be included. The analysis of power and interests between countries involved in 'nuclear-weapon recognition' mainly used game theory, and the interpretation of ideational relationships mainly applied role theory. Role theory compensated for biases that tend to occur in games, and biases that easily arise from role interpretation could be corrected through games.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the main feature of this study is the complementary or checking structure of game theory and role theory.

Key words

Nuclear, nuclear weapon, North Korean nuclear, North Korean nuclear weapon, nuclear weapon acceptance, nuclear weapon recognition, North Korean nuclear weapon recognition,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North Korea-US relations, Korean nuclear armament, nuclear domino, game, game theory, role, role theory, nuclear proliferation, Japanese nuclear armament.